국방백서

1996~1997

대한민국
국방부

머 리 말

오늘날 국제정세는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 구조가 해소되고 국가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지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안보질서 재편과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정세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대체로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적 화해와 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면서 군비증강의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직도 분단과 대치상태의 지속, 해양주권 및 영토분쟁 가능성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은 내부적인 체제 위기를 제한적인 개방정책과 실리 외교를 통해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남정책 면에서는 과거의 적대적인 노선을 탈피하지 못한 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으로부터 연유된 위기상황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온 군사력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모험을 강행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보정세 전망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미래 지향적 국방력 정비, 그리고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현존하는 북한위협은 물론 장차 예상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8년 이래 매년 발간해 온 국방백서는 우리 군의 국방발전 노력을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의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아홉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서 특히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담았으며 선진 정예 국군이 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국방백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의 안보현실과 국방정책 전반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국민과 군이 국방발전을 위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1996년 10월

국 방 부 장 관 이 양 호

目　　次

第1部　總　　說

第1章　國家目標와 國防目標 ····· 15

第1節　國家目標 ····· 16
第2節　國防目標 ····· 16
第3節　21世紀 國防의 課題 ····· 17

第2章　國防政策의 基本方向 ····· 19

第1節　確固한 國防態勢 構築 ····· 19
第2節　對內外 軍事關係 發展 ····· 20
第3節　未來指向的 國防力 整備 ····· 22
第4節　信賴받는 國軍像 確立 ····· 23

第2部　安保情勢 및 威脅評價

第1章　世界 安保情勢 ····· 27

第1節　美洲地域 ····· 27
第2節　유럽地域 ····· 29
第3節　中東 및 아프리카 地域 ····· 30
第4節　東南亞 및 西南亞 地域 ····· 31

第2章　東北亞 安保情勢 ····· 32

第1節　美國의 東北亞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 33
1. 安保戰略 ····· 34
2. 軍事態勢 ····· 34

第 2 節　日本의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 36
1. 安保戰略 …… 36
2. 軍事態勢 …… 37
第 3 節　中國의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 38
1. 安保戰略 …… 39
2. 軍事態勢 …… 39
第 4 節　러시아의 東北亞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 40
1. 安保戰略 …… 41
2. 軍事態勢 …… 41

第 3 章　北韓情勢 및 軍事威脅 …… 43

第 1 節　北韓의 一般情勢 …… 43
第 2 節　北韓의 軍事政策 및 戰略 …… 44
第 3 節　北韓의 軍事態勢 …… 45
1. 軍事機構 …… 45
2. 軍 事 力 …… 46
3. 戰略武器 威脅 …… 52
4. 最近 軍事動向 …… 55
第 4 節　北韓의 對南 心理戰 …… 56
1. 基本目標 및 方向 …… 56
2. 對南 心理戰 遂行機構 …… 57
3. 媒體別 活動 …… 58
4. 最近 對南 心理戰 動向 …… 59

第 4 章　綜合評價 …… 61

第 1 節　世界 安保 …… 61
第 2 節　東北亞 安保 …… 62
第 3 節　韓半島 安保 …… 63

第3部 國防態勢

第1章 軍事對備態勢 ····· 67

第1節 軍事戰略 ····· 67

第2節 作戰態勢 ····· 68

1. 全面戰 對備態勢 ····· 68

2. 局地挑發 對備態勢 ····· 72

3. 浸透 및 테러 對備態勢 ····· 72

4. 心理戰 對應態勢 ····· 73

第3節 軍事演習 및 訓練 ····· 74

1. 聯合演習 및 訓練 ····· 74

2. 合同演習 및 訓練 ····· 77

3. 各軍의 主要訓練 ····· 78

第4節 精神戰力 ····· 82

1. 精神敎育 領域 ····· 83

2. 精神敎育 體系 ····· 83

3. 精神敎育 發展 ····· 84

第2章 精銳軍事力 育成 ····· 86

第1節 軍構造 改善 ····· 86

第2節 防衛力 改善 ····· 87

1. 防衛力 改善事業 背景 및 成果 ····· 87

2. 分野別 戰力 ····· 89

第3節 國防情報化 ····· 94

1. 情報化 環境 造成 ····· 95

2. 情報化 基盤 擴充 ····· 96

3. 應用體系 開發 ····· 97

第 4 節　研究開發 및 防衛産業 …… 98
1. 研究開發 …… 98
2. 防衛産業 …… 100
3. 國際防産協力 …… 102
第 5 節　豫備戰力 管理 …… 103
1. 豫備軍 資源管理 效率化 …… 103
2. 豫備軍 教育訓練 …… 104
3. 動員態勢 確立 …… 105

第 3 章　韓·美 安保協力 …… 108

第 1 節　相互防衛條約 및 協定 …… 108
1. 韓·美 相互防衛條約 …… 108
2.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 …… 109
3. 戰時支援協定 …… 109
第 2 節　韓·美 聯合防衛體制 …… 110
1. 韓·美 安保協議會議 …… 110
2. 韓·美 軍事委員會 …… 112
3. 韓·美 聯合軍司令部 …… 112
第 3 節　主要 韓·美 安保懸案 …… 114
1. 韓·美 聯合防衛態勢 強化 …… 114
2. 防衛費 分擔 …… 115
第 4 節　韓·美 安保協力 發展展望 …… 117

第 4 章　對外 軍事交流 協力 …… 119

第 1 節　軍事友好關係 增進 …… 119
1. 善隣友好協力關係 發展 …… 119
2. 軍事交流 協力 多變化 …… 120
3. 地域 安保協力 參與 …… 121

第 2 節　유엔平和維持活動 強化 ····· 122
1. 유엔平和維持活動 現況 ····· 122
2. 앙골라 工兵部隊 活動相 ····· 125
3. 向後 政策方向 ····· 128

第 5 章　軍備統制 ····· 129

第 1 節　軍備統制 環境 ····· 129
第 2 節　南北韓 軍備統制 ····· 130
1. 政策目標 ····· 130
2. 南北 軍備統制 基本方向 ····· 131
3. 軍備統制 關聯 南北間 提議 및 合意 ····· 131
4. 韓半島 停戰體制 維持 및 平和體制 構築問題 ····· 133
5. 北韓 核問題 解決 努力 ····· 136
第 3 節　國際 軍備統制 ····· 138
1. 國際 非擴散體制 參與 ····· 138
2. 化學武器 統制制度 推進 ····· 139
3. 其他 國際軍備統制 活動 ····· 139

第 6 章　國防態勢 發展方向 ····· 140

第 4 部　國 防 管 理

第 1 章　國防企劃 ····· 145

第 1 節　國防企劃管理制度 發展 ····· 145
第 2 節　國防企劃管理 體系 ····· 146

第 2 章　國防人力 ····· 150

第 1 節　人力政策 ····· 150
1. 人力政策 發展 ····· 150
2. 人事管理制度 發展 ····· 153

第 2 節　教育訓練政策 …… 154
1. 教育訓練 體系 …… 154
2. 教育訓練政策 發展 …… 156
第 3 節　士氣 및 福祉增進政策 …… 159
1. 士氣 및 福祉環境 …… 159
2. 士氣 및 福祉增進政策 發展 …… 159
3. 醫務支援 向上 …… 164

第 3 章　國防軍需 …… 167

第 1 節　國防軍需支援 體制 …… 167
1. 國防統合軍需支援 시스템 構築 …… 167
2. 國防軍需시스템의 情報化 體系構築 …… 168
第 2 節　軍需品 調達管理 …… 169
1. 軍需品 調達 …… 169
2. 軍需調達制度 改善 …… 170
3. 開放化에 따른 軍需調達 對處方向 …… 171
第 3 節　國際軍需協力 …… 171

第 4 章　國防豫算 …… 173

第 1 節　國防財源 …… 173
1. 防衛費의 性格과 規模 …… 173
2. 國防費의 性格과 規模 …… 174
第 2 節　1996年度 國防豫算 …… 176
1. 一般會計 豫算 …… 176
2. 特別會計 豫算 …… 178
第 3 節　適正 國防費 …… 178
1. 國防費 運營의 問題點 …… 178
2. 適正 國防費 水準 …… 180
3. 國防費와 國民經濟 …… 183

第 5 章　國防管理 發展方向 …… 186

第5部　國民과 軍

第1章　國家發展과 軍의 役割 …… 191

第1節　國家施策 具現 …… 192

1. 世界化 推進 …… 192

2. 歷史 바로 세우기 …… 193

第2節　軍의 社會的 貢獻 …… 196

1. 國家技術人力 養成 …… 196

2. 國策事業 支援 …… 197

3. 對民 支援 …… 198

4. 災害·災難 救助活動 …… 199

5. 環境保全活動 …… 202

第3節　國民便益增進 事業 …… 205

1. 軍事施設 保護區域 規制緩化 및 制度改善 …… 205

2. 軍 使用 私有地 整理 …… 206

3. 軍用施設 郊外移轉 …… 206

4. 民通線 出入統制 緩化 …… 207

第4節　國防弘報 活動 …… 208

1. 일일 프레스 브리핑 制度 …… 208

2. 軍 弘報媒體 水準向上 …… 209

3. 軍 弘報媒體 多樣化 …… 211

第2章　兵務行政 …… 212

第1節　兵役制度 改善 …… 212

1. 새 兵役制度의 活性化 …… 212

2. 國民便益 增進을 위한 規制緩化 …… 214

第2節 열린 兵務行政 實現 ····· 215
1. 徵兵檢査 ····· 216
2. 열린 兵務行政 ····· 218

第3章 軍·社會關係 發展方向 ····· 221

資 料

資料 1. 第27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SCM) 共同聲明 ····· 225
資料 2. 大韓民國 國防部와 이스라엘 國防部間 軍事交流 協力增進을 위한 諒解覺書 ····· 228
資料 3. 大韓民國 國防部와 인도네시아 國家安全部間 國防軍需 및 防產協力에 관한 諒解覺書 ····· 230
資料 4. 韓·美 軍事關係 50年 日誌 ····· 235
資料 5. 主要 對外軍事 交流協力 日誌 ····· 239
資料 6. 北韓의 停戰體制 無實化 企圖 經過日誌 ····· 241
資料 7. 유엔 平和維持活動(PKO) 現況 ····· 244
資料 8. 일일 프레스 브리핑 現況 ····· 246
資料 9. 各種 法令 整備 現況 ····· 249
資料 10. 國防大學院 紹介 ····· 254
資料 11. 韓國 國防硏究院(KIDA) 紹介 ····· 257
資料 12. 國防科學硏究所(ADD) 紹介 ····· 260
資料 13. 年度別 國防白書 資料目錄 ····· 263

圖 表 目 次

도표 2- 1 동북아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 32
도표 2- 2 미국의 동북아지역 군사력 현황 ····· 35
도표 2- 3 일본의 군사력 현황 ····· 38
도표 2- 4 중국의 군사력 현황 ····· 40
도표 2- 5 러시아의 동북아지역 군사력 현황 ····· 42
도표 2- 6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 46
도표 2- 7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 47
도표 2- 8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 48
도표 2- 9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 49
도표 2-10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현황 ····· 50
도표 2-11 북한 공군 전투기 전방지역 추진배치 현황 ····· 50
도표 2-12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시설 현황 ····· 53
도표 2-13 북한의 대남 심리전 수행기구 ····· 57
도표 2-14 북한의 대남방송 주제별 현황 ····· 58
도표 2-15 남북한 군사력 현황 ····· 64
도표 3- 1 연합연습 및 훈련내용 ····· 74
도표 3- 2 주요 방위력 개선 추진성과 ····· 89
도표 3- 3 정보기기 보유현황 ····· 96
도표 3- 4 산·학·연 협력체제 ····· 99
도표 3- 5 방산업체 및 물자 지정 현황 ····· 101
도표 3- 6 199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 104
도표 3- 7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111
도표 3- 8 1991-1998년 방위비 분담현황 ····· 116
도표 3- 9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현황 ····· 123
도표 3-10 상비체제 참여부대 규모 및 형태 ····· 123
도표 3-11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연수 현황 ····· 124
도표 4- 1 국방기획관리 체계도 ····· 147

도표 4- 2 군의 교육훈련체계 ····· 155
도표 4- 3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 전역후 취업현황 ····· 163
도표 4- 4 1995년도 직업군인 및 가족의료보험 이용실적 ····· 166
도표 4- 5 1996년도 방위비 구성 ····· 173
도표 4- 6 연도별 정부재정 대비 방위비 점유율 ····· 174
도표 4- 7 연도별 정부재정 및 국방비 증가율 ····· 174
도표 4- 8 연도별 GN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 ····· 175
도표 4- 9 연도별 국방예산 구성비 ····· 175
도표 4-10 1996년도 국방예산 ····· 176
도표 4-11 1996년도 국방예산 내용 ····· 177
도표 4-12 국방비 배분 ····· 179
도표 4-13 GN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규모 ····· 181
도표 4-14 주요국의 GNP 대비 국방비, 국민 1인당 부담액 ····· 181
도표 4-15 위협정도에 따른 GNP 대비 국방비 비교 ····· 182
도표 4-16 최종수요 각 항목별 경제파급효과 ····· 184
도표 4-17 연도별 유발계수 추세 ····· 185
도표 5- 1 국책사업 지원현황 ····· 197
도표 5- 2 1995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현황 ····· 198
도표 5- 3 재해·재난 지원 병력/장비 ····· 201
도표 5-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203
도표 5- 5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 206
도표 5- 6 군용시설 교외이전 추진현황 ····· 207
도표 5- 7 일일 프레스 브리핑 현황 ····· 208
도표 5- 8 군 홍보 간행물 제작현황 ····· 209
도표 5- 9 국군방송 시간표 ····· 210
도표 5-10 군 영화제작 및 배분현황 ····· 210
도표 5-11 국방 홍보영상물 K-TV 방영현황 ····· 211
도표 5-1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운용규모 ····· 213
도표 5-13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 216
도표 5-14 병역 감면 대상 및 처분 ····· 217
도표 5-15 인접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 활용현황 ····· 218

第 1 部

總　　說

第 1 章　國家目標와 國防目標

第 2 章　國防政策의 基本方向

第 1 章　國家目標와 國防目標

대한민국은 4330여 년의 歷史를 가진 나라로서 항상 평화를 사랑하였으며, 적의 외침시에는 전국민이 항전하여 이를 격퇴함으로써 독립된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및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第1節 國家目標

우리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保衛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국정지표로 설정, 실천해 나감과 동시에, 「교육의 세계화, 법질서·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와 의식의 세계화」 등을 지향하며 신한국 창조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第2節 國防目標

국방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라고 함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세전력의 전진배치 및 긴장조성, 군사동원태세 강화,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대남 공작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한을 主敵으로 상정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며, 현대적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안보대상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라고 함은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의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라고 함은 우리의 국가 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유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第 3 節　21世紀 國防의 課題

21세기의 개막을 바로 앞둔 현 시점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나아가 미래의 변화에도 동시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전환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21세기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 안보질서는 미국 및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다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제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의 세계는 국지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 위기관리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자유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국제 경제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화해와 경쟁, 군비감축과 군비증강, 통합과 분열 등의 이중성이 노정되고 있고, 종교와 민족, 영토와 자원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自主國防의 필요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안보비용 부담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는 여전히 냉전적인 갈등과 대립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동의 안보협력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 이질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의 외형적 규모는 축소 조정해 나가면서도 질적으로 훨씬 향상된 고도의 첨단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군비경쟁의 촉발 등 새로운 지역안보 불안요인으로 부상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리의 국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세계적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遺訓統治體制를 유지하면서 김정일 주도하에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세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서 기존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외화 부족 등 三不足 현상으로 주민들의 최저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폐쇄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수출, 외채 증가 및 경화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대외관계가 악화됨은 물론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경우 대남 무력도발이라는 극단적인 모험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또는 주변 안보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할 21세기 국방과제는 우선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군 및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구조로의 개선과 함께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체제를 개편하고 군사력을 창출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오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21세기 국방과제들은 우리 군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第 2 章　國防政策의 基本方向

우리 군은 국방목표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自主國防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방을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여건 등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타국과의 협력에 의한 방위체제 유지가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안보동맹관계는 우리 방위체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지휘체제를 보완·발전시키고 무기체계를 현대화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우리의 방위를 우리가 주도하는 체제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목표를 구현하고 21세기 국방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북한의 모험적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구축」,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한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한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第 1 節　確固한 國防態勢 構築

북한은 6·25 南侵戰爭을 도발한 이래 한 번도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김정일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도 공세전력을 증강하고 전진배치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조성을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대비하여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모험적 도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합동작전 지휘통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대침투작전 수행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지도발 대비 및 대 테러작전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힘쓰고 있으며, 현존전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전 수행태세를 재정비함은 물론 합동연습 및 전술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전쟁억제의 기본축인 한·미연합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미간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미간 정보협력 및 연합연습을 강화함은 물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의 신속억제전력을 적시에 전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쟁지속능력의 뒷받침도 중요하다. 우리 군은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예비군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의 내실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시 군수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비축물자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송지원능력을 보강하는 등 전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국제 군수·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안보관 및 가치관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신교육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신세대 장병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명확히 인식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안보관을 확립시키고 인성교육을 통하여 위국헌신의 가치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다.

第2節 對內外 軍事關係 發展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40여 년 간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더불어 확고한 한·미 안보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며 한·미 연합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안보협력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장차 북한의 위협이 해소될 경우까지를 상정한다면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이 신중하게 협의하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는 지역안보문제의 다자적 해결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

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개별 국가간의 쌍무적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지역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은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군사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및 유럽, 중동 등 여타 지역에 대한 군사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등 지역통합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6·25 남침 전쟁시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 준 우방국과의 군사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군은 世界化 時代에 부응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유엔이 구상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불안정한 군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긴장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포기를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미·북 핵합의" 등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남 군사정책에는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세전력을 전진배치시키고, 비무장지대 관리임무 포기선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무력시위 등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와 고위 당국자의 무분별한 전쟁불사 발언 등으로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의 변화추이와 연계하여 대북 군사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전관리기구 무실화 책동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추진계획과 신뢰구축 시행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군사협상 대비체제를 보완하는 한편, 국제군비통제 활동에

도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군비통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능동적인 대북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第3節 未來指向的 國防力 整備

우리 군이 처한 미래 안보환경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수준으로 방위력을 개선해 나갈 경우 10~20년후에는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데 많은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가용 국방재원의 제약과 운영유지비의 증가에 따른 전력투자비의 감소 등 국방예산 배분구조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도 국방 전반에 걸친 혁신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력에 걸맞는 중·장기 차원의 국방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즉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전략과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 군은 중·장기 국방발전의 목표를 「선진정예국방」에 두고 방위태세 자주화, 국방인력 정예화, 무기체계 과학화, 운영체제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 등 5대 국방발전 기조에 입각하여 국방력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태세 자주화는 미래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신축적, 포괄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自主的인 군사전략 개념을 보완·발전시키며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국방인력 정예화는 방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과학화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정예화시키며 인력관리체제를 현대화시키고 소수정예의 상비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원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무기체계 과학화는 미래의 전쟁양상과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방위력 개선 개념을 정립하여 방위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비 확대, 군사기술혁신, 무기체계개발 등의 노력으로 무기체계의 자주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넷째, 운영체제 합리화는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원리에 입각한 국방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정보화 기술 및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국방운영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국방의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진보와 정보 위주의 전쟁양상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방구조 전반을 고도로 정보화시켜 무기체계의 전력발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第 4 節　信賴받는 國軍像 確立

국가 방위역량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방위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군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함께 국가시책을 지원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우선 군은 정부의 세계화 시책을 안보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주안을 두고 국방분야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중·장기 국방발전방향 연구, 국방자원관리체제 개선, 군 환경보존 활동, 위민 국방정책 추진 등에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비롯한 국제 군사우호협력관계 증진,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군비통제정책 발전 등의 정책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중점은 먼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軍史를 정리하는 한편, 전시 또는 위기시 군사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안보전문집단에 걸맞는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개발, 정착시키는 것 등에 두고 있다.

한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對軍 불신요인을 면밀히 식별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비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방예산관리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의 능력을 활용하여 국책사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구조 및 재해복구체제를 보강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第 2 部

安保情勢 및 威脅評價

第 1 章　世界 安保情勢

第 2 章　東北亞 安保情勢

第 3 章　北韓情勢 및 軍事威脅

第 4 章　綜合評價

第1章　世界 安保情勢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요 강대국들이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공세적인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거나 군사력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세계수준의 전쟁 위험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소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세계안보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힘의 공백과 위기관리 통제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소규모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이익 수호라는 명분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경제 블록화, 종교 및 문화적 마찰 등 새롭고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이 종식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안보관계를 설정하고 자주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세계안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고 다자간 안보체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세계 안보정세는 당분간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1節　美 洲 地 域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적 지도력 행사를 통해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참여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략무기 감축과 분쟁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쟁지역에는 전진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의 생산, 사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이들 무기로부터의 보호능력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무조건 연장을 이끌어 내었으며

미사일기술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체제를 강화하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발효시켜 시행중에 있으며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도 미·러 양국 의회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내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출통제 허가제 완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정례화, 미·일간 포괄무역협정, 미주정상회의, 미국·유럽연합의 신 대서양 공동체 구상, 세계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안보 및 경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지만 세계 각국들의 경제발전 및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안보욕구의 증대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각국의 안보욕구를 미국의 국익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는 냉전종식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예산의 삭감에 따라 병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전력을 감축시키는 등 캐나다군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아·태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안보대화 및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과 쌍무적인 군사접촉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대체로 안정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통합 추세에 따라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합의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역외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아·태 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의 관계도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이 이 지역의 5개국을 순방함에 따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 내에 잠재하고 있는 정치 대립과 빈부계층간의 갈등, 민족감정, 마약문제 등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第2節 유 럽 地 域

舊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변혁으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유럽에서는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의 기능확대 등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위한 기틀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單一經濟市場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국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서유럽 각국은 정치 및 경제면의 안정적 통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유럽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구성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 서유럽연합(WEU : Western European Union)의 독자적인 통합군 창설, 그리고 이들 안보·군사기구의 기능적인 상호연계와 보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의 안보공백 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발족한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 : Partnership for Peace)는 군사교류 및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동서 유럽의 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정치·경제적인 통합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지중해 연안,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 등 비유럽지역 그룹 및 국가와의 제휴와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스니아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제지원하에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舊東歐圈 및 舊소련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영토분쟁, 남부 유럽지역에서의 민족·종교·영토분쟁, 중동지역 일부국가들의 중·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가능성 등이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국가간의 이해 조정,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간의 관계 재조정, 동구권 주둔 舊소련군의 철수 및 駐유럽 미군감축에 따라 조성된 힘의 공백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등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안보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第3節 中東 및 아프리카 地域

중동지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선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역내 국가간의 대립현상이 존재하며 강대국과 역내 국가간의 마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중재노력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평화협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996년에 출범한 이스라엘의 신정부에 대하여 주변의 아랍국가들이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 중동의 안보정세는 여전히 많은 돌출변수를 내재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중동정세의 불안요인으로는 회교원리주의의 확산, 쿠르드족의 분리독립투쟁, 대량살상무기의 유입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걸프전 이후 서구문명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한 회교원리주의자들의 반미 및 반서구 감정의 팽배와 일부 아랍국가들의 배타적인 외교노선은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탈이념적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외세개입에 의한 국지분쟁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부족·정파간 정권투쟁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난민과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이로 인해 난민유입, 기아사태, 치안불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지역정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분쟁은 국제사회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고 유엔 및 기타국가들의 지원활동도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구호 활동에 그치고 있어 분쟁의 조기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1996년에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어 4번째로 비핵지대를 선언함으로써 지역의 긴장완화와 범세계적인 핵확산 방지에 공헌하고 있고, 1990년대 이후 역내 일부 국가들이 다당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를 중심으로 국가간 신뢰회복 및 지역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다소 희망을 주고 있다.

第4節 東南亞 및 西南亞 地域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우선 1995년에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캄보디아 사태가 진정되고 메콩강 개발을 위한 1996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선진국들의 참여 움직임도 적극적이어서 실질적인 교역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강대국과 관련국들간의 영유권, 자원개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해양주권 문제와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문제 등은 동남아시아의 해양국가들에게 있어 안보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세안 제국은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응하여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안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방위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을 모두 포괄하는 다자간 정치 및 안보 대화체제인 아세안 지역포럼(ARF)을 통해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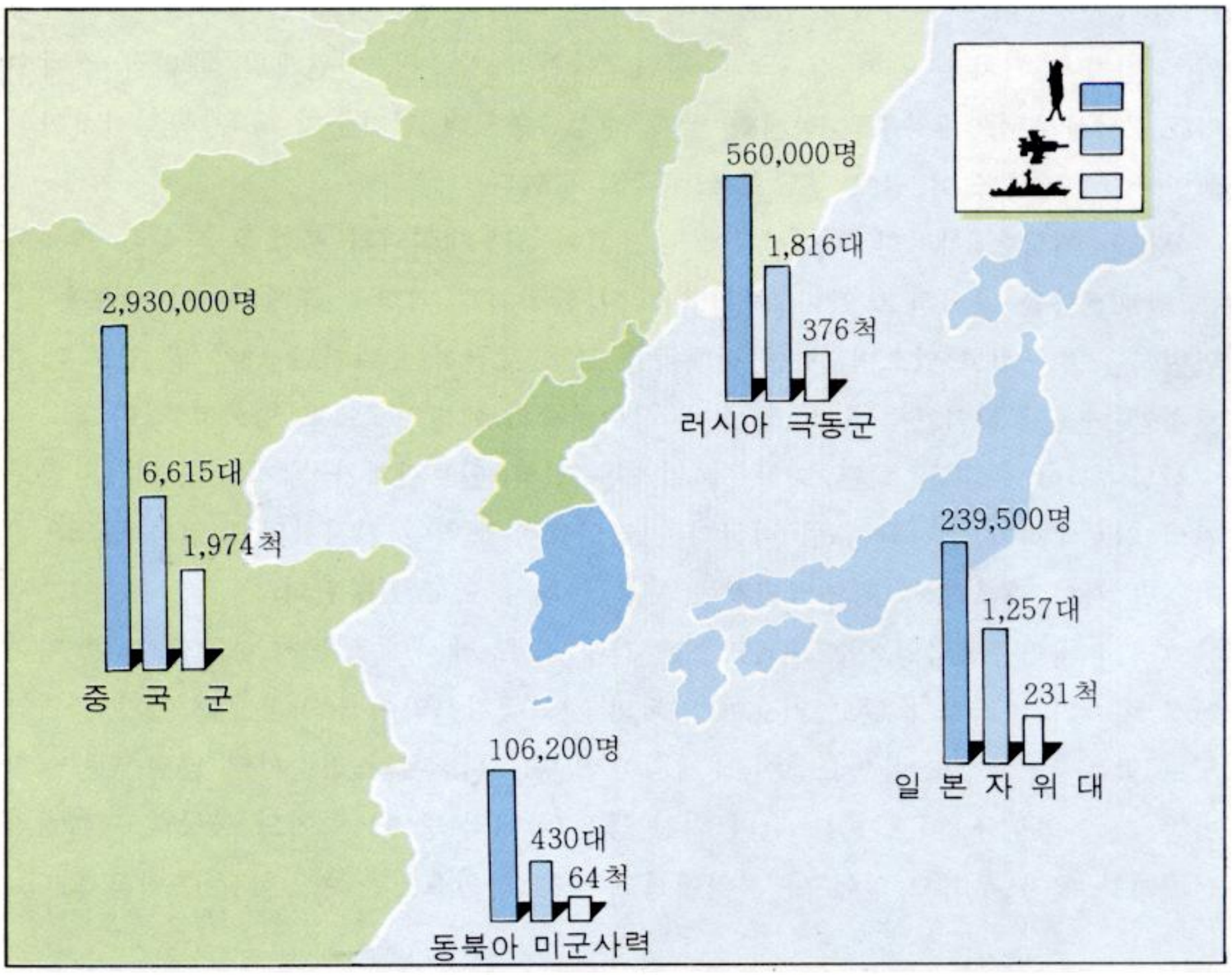
서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미국-파키스탄 간의 안보관계가 재개되고 미국-인도 간의 안보대화가 추진되는 등 미국의 지역안보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인도-파키스탄 간의 관계개선 및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중심국인 인도-파키스탄 간에 잠무, 캐시미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양국의 전력증강사업이 군비경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등 아직도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 밖에 스리랑카의 타밀족과 싱할리족 간 민족분규,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등은 국제적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도 정세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第2章 東北亞 安保情勢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유럽 및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주요전략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 지역은 탈이념적인 평화공존, 화해협력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

도표 2-1 동북아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등

* 병력수는 육·해·공·해병 병력을 총망라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형성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서는 분단국문제, 영토문제, 해양자원문제, 민족문제 등 많은 갈등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개방·개혁의 추세와 함께 역내 국가들도 지역의 경제적 활력에 편승하여 상호 의존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계경제·안보전략적인 비중 증가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정여부는 곧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의 해결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지역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1996년 4월 16일에 한·미가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국제적인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다.

第 1 節　美國의 東北亞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위험들이 새로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도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역강국들이 침략이나 위협 등을 통하여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시도,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종족·민족·종교 또는 부족간의 분쟁, 핵 및 화생무기와 관련된 잠재적인 적성국의 위협, 중·동구제국의 불안정, 테러리즘, 세계적인 환경파괴 등을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 및 확대"라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과거의 비우호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시켜 국가안보능력 제고, 경제력 신장, 민주주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및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협력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新태평양 공동체" 구상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 안보기능의 재조정과 지역 내 미군전력의 유지 및 운용체제 재정비, 아·태 경제협력체

(APEC)의 기능 강화, 새로운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 모색 등은 모두 "참여 및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역안보 및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安保戰略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은 미·일동맹을 통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포괄적인 참여정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 유도함으로써 이 지역국가들의 공통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긴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내에 미군전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즉 신속하고 신축적인 범세계적 위기대응을 보장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며 역내안보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진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역내 우방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잠재적 위협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여 만 명의 병력과 해병원정군, 항모기동단과 정예의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2. 軍事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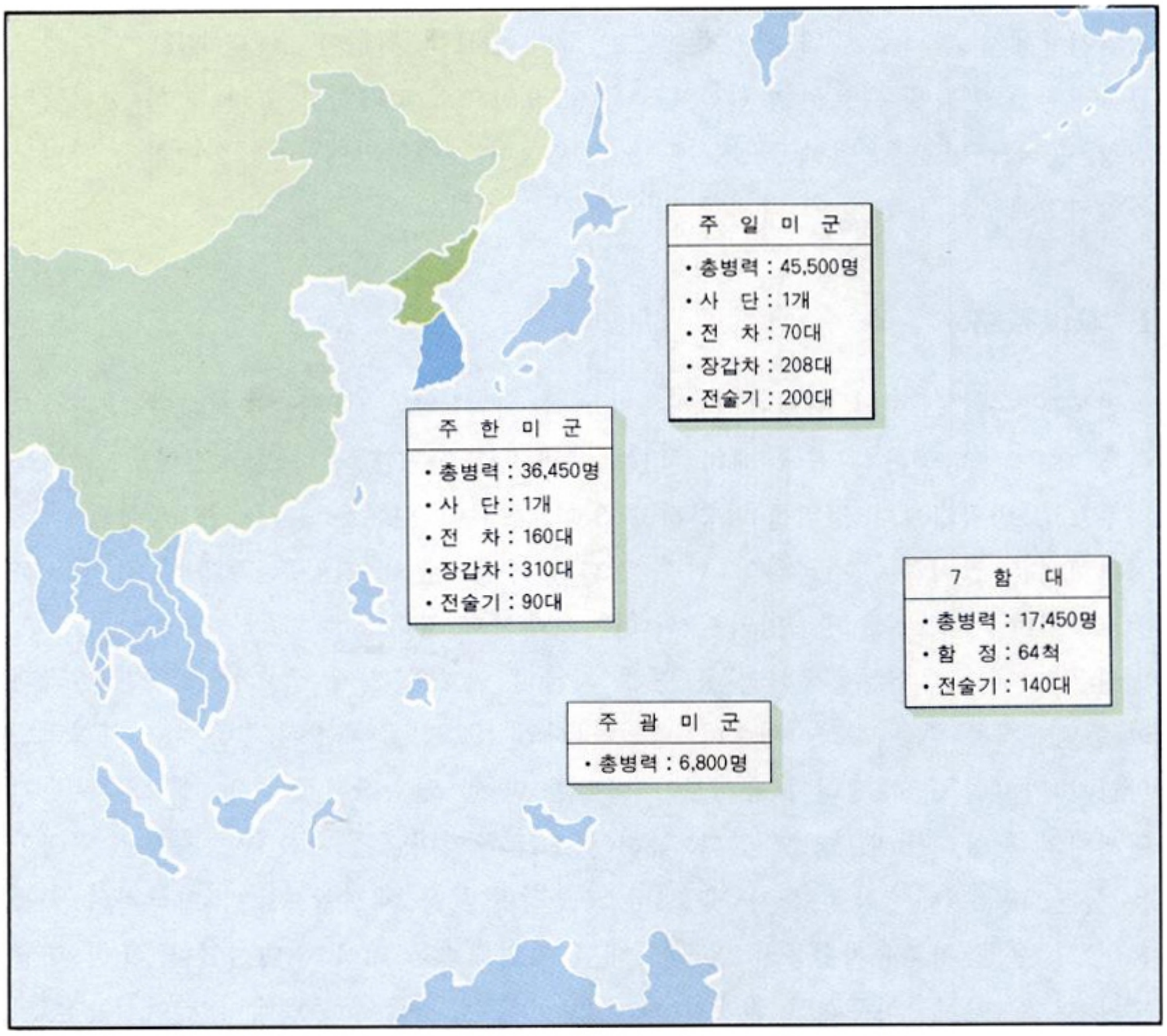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배치된 미군전력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의 균형자적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편,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확보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사력 10만명 중 약 8만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2개 여단으로 구성된 1개 보병사단과 1개 비행단이 배치되어 있다.

미 해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제7함대에 벨로우드 상륙함을 전개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이지스(AEGIS)체제의 신형 유도미사일 구축함 1척을 배치하였으며, 제7함대가 담당했던 중동지역에 제5함대를 창설하였고, 유사시 신속증원군을 위한 1개 여단 분의 장비와 물자를 한국에 전개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요지역분쟁(MRC : Major Regional Conflict)에서의 전략수행을 위해 신속전개군의 효율성 개선 및 전략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육군 예비군의 일부를 현역화시키고 있다. 신속전개군의 전력 개선은 최신의 탄종과 센서 개발, 전장감시, 장거리 폭격기의 성능개선 및 항모탑재기의 타격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 장거리수송기(C-17) 80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전배치함으로써 기동성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군사태세는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군사력 현황은 도표 2-2와 같다.

도표 2-2　　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현황



자료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등

第2節 日本의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에 "신방위계획대강"을 수립하고 1996년에는 21세기를 향한 미·일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정의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국한시킨 기존의 수동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방위정책에서 탈피하여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불특정한 요인들을 새로운 방위목표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 중국·대만관계, 남사군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혼란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1. 安保戰略

일본은 과거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北方重視 전략을 수정하여 냉전종식 이후 대두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全方位 전략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태세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유사시를 상정한 국내 법적체제를 정비하여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주일미군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방위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자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냉전 당시인 1978년에 제정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방위지침"을 개정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미·일 연합작전 능력의 제고와 후방지원체제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1996년에 "상호 물자 및 서비스 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군과의 공동훈련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시 미군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또한 대규모의 미·일 연합군사훈련인 킨엣지(Keen Edge)훈련, 미국의 동맹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RIMPAC)훈련, 금년에 최초로 참가한 코프썬더(Cope Thunder) 훈련 등을 통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선진 전투능력을 습득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종식 이후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자위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위대의 주요임무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리고 1992년에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제정한 이후 참여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여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일본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일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2. 軍事態勢

일본의 군사태세는 자위대 전력과 미·일 연합작전체제를 2대 축으로 하여 소규모 침략은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침략은 미·일 연합전력으로 대처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하고 있다. 일본은 소요전력을 내실화, 효율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첨단무기 위주의 질 높은 방위력 건설에 역점을 두어 매 5년 단위의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첨단 F-15 전투기를 비롯한 이지스(AEGIS)함, 공중조기경보통제(AWACS)기, 공중 급유기 등의 무기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5년에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지침이 될 새로운 "新防衛計劃大綱"을 발표하여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자위대 편제 및 전력 재정비를 통해 질적인 우세 속에서 다양한 사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육상자위대의 병력 규모를 현행 18만명 체제에서 16만명 체제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며 1996년에 현행 13개 사단, 2개 혼성단의 부대구조를 9개 사단, 6개 여단으로 개편하고 북부지역에 편중된 부대배치를 전 지역에 균형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는 공통적으로 정원을 현실화하고 부대편성의 통폐합 및 재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충실화를 꾀해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구형 무기체계를 축소하고 최신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질적인 면에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

능력을 확대하고 정보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 3월을 목표로 통합정보본부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영역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자위대의 작전반경도 확대하기 위해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의 보유를 검토하고 있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군사정보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군사력 현황은 도표 2-3과 같다.

도표 2-3 일본의 군사력 현황

구 분	보 유 전 력
총 병 력	239,500명
육 상 자 위 대	사 단 : 13개 장 갑 차 : 1,010대 전 차 : 1,160대
해 상 자 위 대	잠 수 함 : 18척 호 위 함 : 63척(AEGIS함 2) 기 타 함 : 150척 전 술 기 : 362대
항 공 자 위 대	전 폭 기 : 350대 정 찰 기 : 35대 기타항공기 : 510대

자료 :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등

第3節 中國의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중국은 1978년에 국내경제발전과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를 국가의 최고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후 지난 18년간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기본구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4대 현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내외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경제·외교력 신장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향후 국가이익의 신장에 대비하여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安保戰略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중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국가안보전략 및 안보환경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건국 이후 최상의 안보환경을 맞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질서의 다변화 추세, 영토분쟁, 민족주의 등이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경지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수년간 지상위협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해양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1985년에 기존의 "조기전, 전면전, 핵전(早打, 大打, 打核戰爭)"에 대비한 전략태세에서 국경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한 "有限局部戰爭"으로 전략적 변환을 결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해·공군의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 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91년 걸프전 이후 "高技術條件下 局部戰爭"전략을 채택하고 첨단기술 및 장비의 획득·운용을 통해 21세기의 장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이후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였고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의 군사기술 및 장비의 획득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국가전략목표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국가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경우 향후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軍事態勢

중국은 1985년 이후 국경지대에서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 군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군사력 건설의 중점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원거리작전 수행능력, 수송·보급능력, 신형 무기체계 획득 및 군·병종간 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에 두고 있다.

중국의 지상군은 7개 군구, 24개 집단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대응능력 및 합동훈련 능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대화시키고 있다. 해군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도표 2-4 중국의 군사력 현황

구 분	보 유 전 력
총 병 력	2,930,000명
지 상 군	사 단 : 105개 장 갑 차 : 4,500대 전 차 : 9,200대
해 군	잠 수 함 : 102척(50척 예비) 구 축 함 : 50척 기타 수상함정 : 1,824척 항 공 기 : 715대
공 군	폭 격 기 : 820대 전 투 기 : 4,000대 기타 항공기 : 1,080대
핵 전 력	ICBM : 17기 IRBM : 70기

자료 :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등

으로 인해 해양권익이 국가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원거리작전 수행능력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신형 함정 및 무기체계의 개발·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공군은 현대식 전투기 및 생산기술을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과의 항공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1996년에도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현황은 도표 2-4와 같다. 향후에도 중국은 국력신장에 대비한 자국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 4 節 러시아의 東北亞 安保戰略과 軍事態勢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내 정치·경제·군사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서방국가들과는 자국의 국익과 관련해 사안별로 선별적인 협력 및 견제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적극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에 옐친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러시아는 민주화 및 시장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등으로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서방에 대하여 협력과 동시에 선별적인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 安保戰略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구소련이 추구하던 양적 우세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세력확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국 영토수호와 독립국가연합내 국가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치중하는 "合理的 防禦戰略"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해외 군사기지들을 폐쇄 또는 조정하고 작전훈련 활동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인 병력감축과 함께 국제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양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아·태 지역의 정치·경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우호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태 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을 국익 우선주의에 토대를 두고 이 지역에 대한 정치·외교·군사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더불어 점진적이고도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는 1992년에 체결된 "한·러 기본관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경제 및 군사분야에 있어 다각적인 협력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1995년에 조·러 상호원조 및 우호협력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국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 軍事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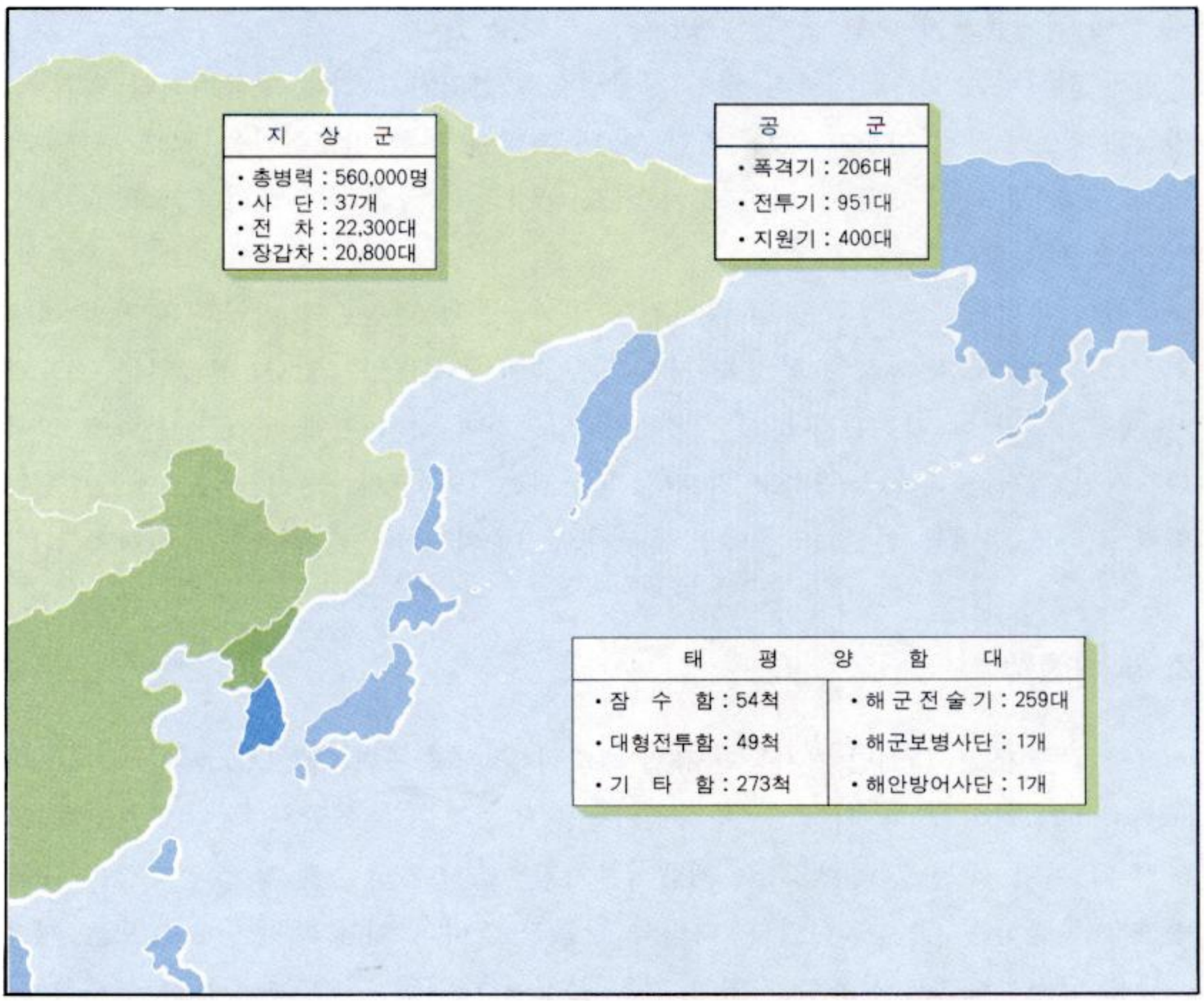
러시아는 1992~1994년 기간동안 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의 해당 감축장비들을 집중적으로 우랄 동쪽 지역으로 이동시킨 데 이어 1996년 5월에 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에 규정된 장비 감축량을 1999년까지 동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장비의 이동과 폐기에서 오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서유럽 지역과 각종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부분적인 병력감축을 추진하면서 수개의 기계화소총사단을 해체하여 지상군을 경량화시켰으며, 노후된 MIG-21/23과 SU-15 전투기들을 SU-27 등 신예기로 대체하였고, 전력운용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동군 창설, 4개 지역 통합사

령부 설치, 현 5개 군종의 3개 군종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지역 전력은 新군사독트린의 수용과 군비감축으로 양적으로는 대폭 감소되었으나 노후 전투기의 교체와 각종 신형무기의 배치로 인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태평양함대는 신형 핵추진순양함과 잠수함의 신규 및 추가배치 등으로 전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부진하였던 각종 전술기동훈련과 대규모 합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전비태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현황은 도표 2-5와 같다.

도표 2-5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군사력 현황



자료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등

第 3 章　北韓情勢 및 軍事威脅

최근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등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1996년에 대규모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국면하에서도 대남 군사정책 및 전략 등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김일성의 유훈통치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생존 차원의 체제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핵 및 군사력 위협카드를 적절히 배합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대남적화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기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군사력을 체제유지 및 대남적화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군사 진지 구축"을 최우선 중점과업으로 추진하고 전의를 고취시키는 등 전력보강을 계속하고 있다.

第 1 節　北韓의 一般情勢

북한은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면한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三重苦 타개를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선 정치면에서 김정일은 30년간에 걸친 당 활동과 장기간에 걸친 후계체제 구축 및 우상화 작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사망후 2년 이상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간부들이 대내외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권력 내부갈등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군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점이 누적되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6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난 타

개를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 지역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농업, 경공업 및 무역 제일주의의 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연간 약 200만톤으로 추정되며, 수재로 인해 1996년도 부족량은 전체수요의 절반 수준인 300여 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원유 부족량도 연간 200여 만톤이며, 산업가동률은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며, 만성적인 경제난은 체제유지의 최대 부담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면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체제유지 및 경제 회생을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간의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북한 주요인사들의 방미, 미국관리들과의 빈번한 접촉 등 대미창구를 다변화하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또는 해제, 식량원조 요청 등 실리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대남정책면에서는 한국을 主敵化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및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선전을 강화하면서 남북한 대결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 들어 우리의 방어훈련인 "호국 '96훈련"을 빌미로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96. 3. 29) 등을 통해 "전쟁불가피, 시기가 문제", "만반의 전투동원태세 견지" 등의 전쟁위협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관리임무 포기 선언('96. 4. 4)을 한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96년 4월)하는 등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第2節 北韓의 軍事政策 및 戰略

북한의 군사정책은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하여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의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군사정책을 1962년

에 채택한 후 3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2년 4월 9일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4장(국방) 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군사정책의 불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화 부대를 고속으로 종심 깊숙이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6·25남침전쟁,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삼아 수립된 이와 같은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현대전쟁의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미군의 군사적 능력과 우리 나라의 인적·물적 잠재력, 그리고 현재의 대치 상황과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 태세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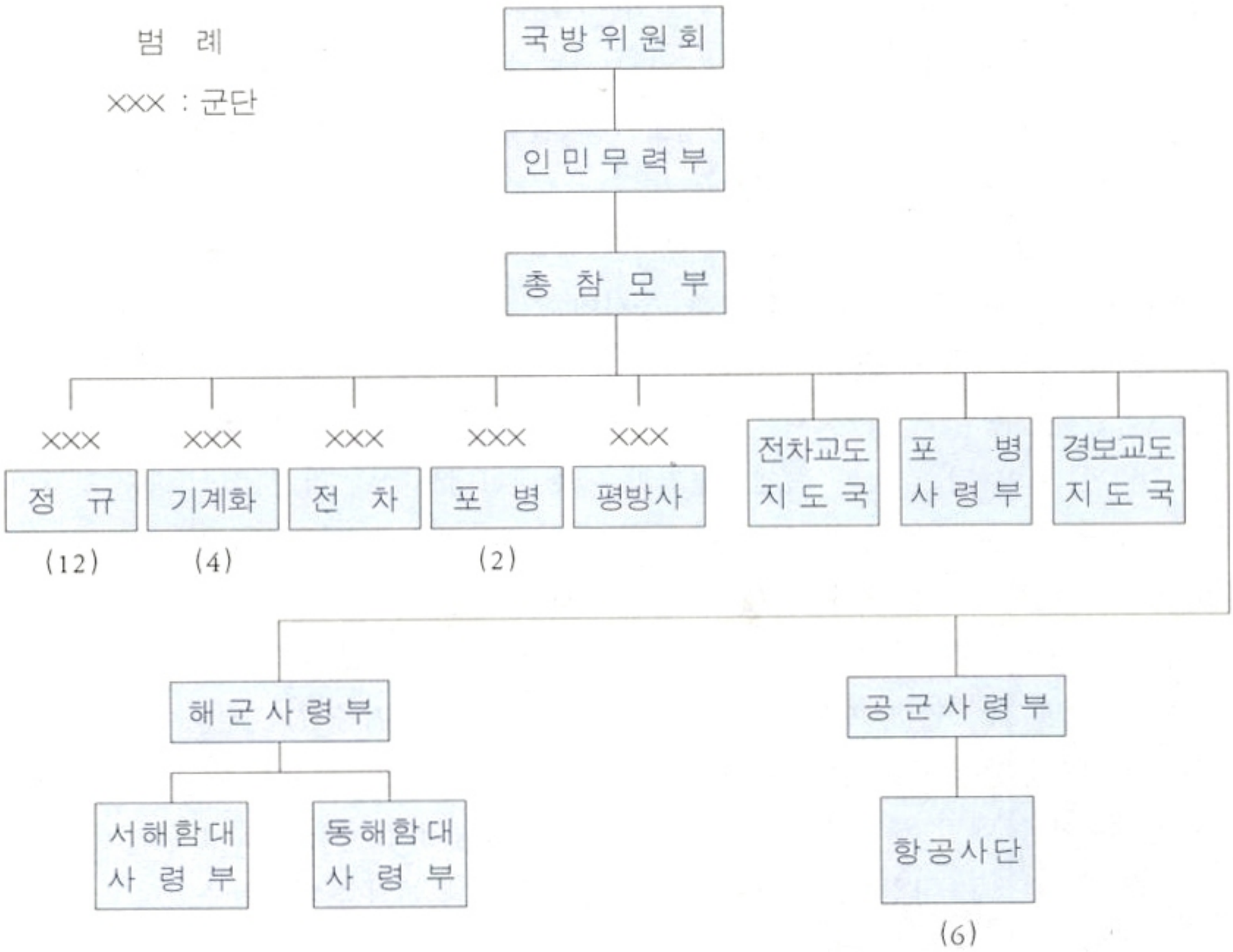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量 위주의 전력증강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난으로 양적 전력증강의 한계에 직면하여 재래식 전력증강이 둔화되었다. 반면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사정 미사일 및 화포 등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등 자원절약형 전력증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체제생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군사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第 3 節 北韓의 軍事態勢

1. 軍事機構

북한의 군사기구는 국가주석 다음의 독립된 권력기구로 격상된 "국방위원회"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휘체제는 도표 2-6과 같이 최고 군사집행기구인 인민무력부 예하의 총참모부가 군사작전을 지휘 관장하고 있다. 즉 총참모부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 경보교도지도국 및 포병사령부,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여 군정권과 군령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도표 2-6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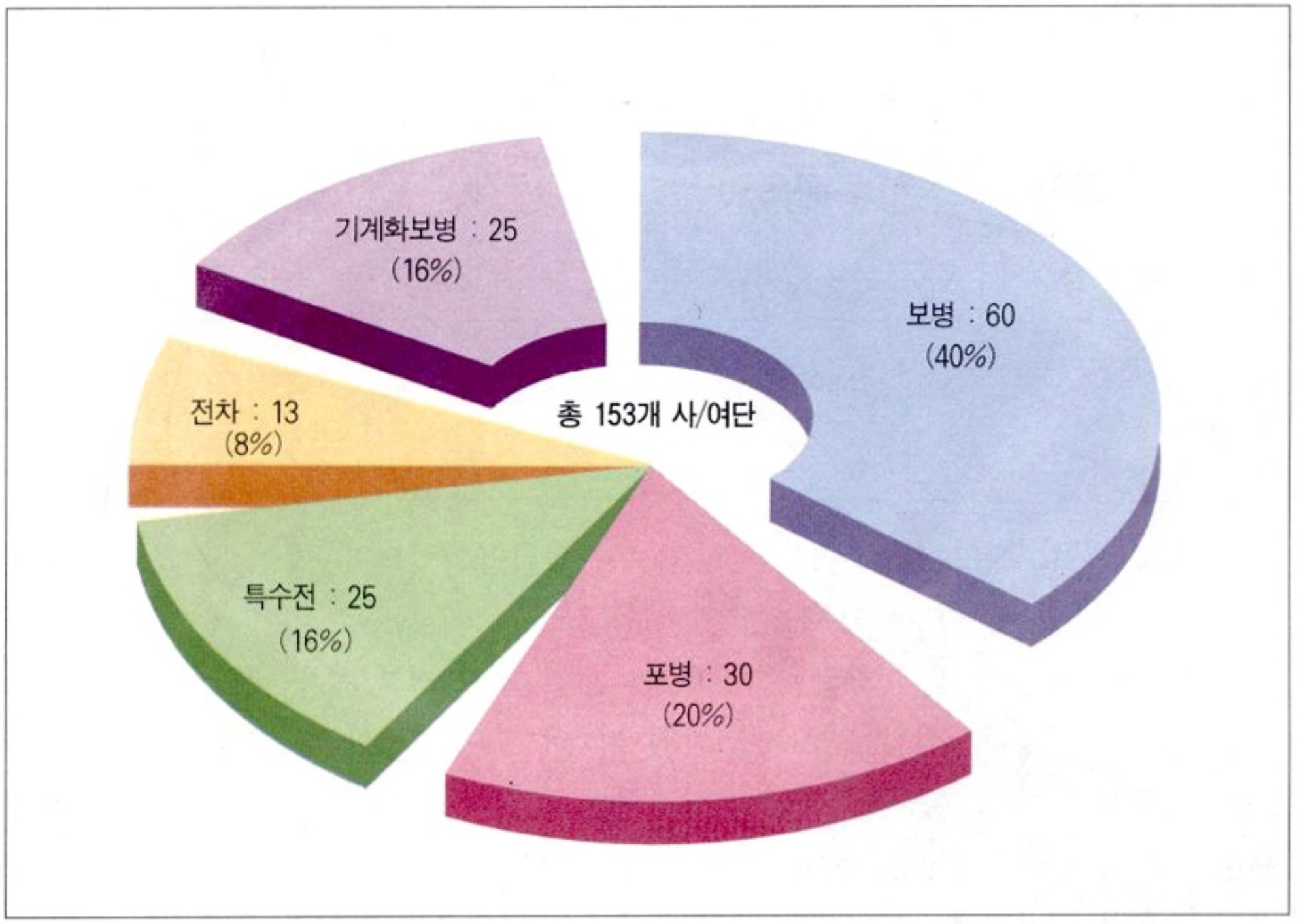
2. 軍 事 力

가. 지 상 군

북한 지상군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4개의 기계화군단과 2개의 포병군단을 포함하여 20개 군단사령부와 전차교도지도국, 포병사령부, 그리고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보병 60개 사단/여단, 기계화 보병 25개 여단, 전차 13개 여단, 특수부대 25개 여단, 포병 30개 여단 등 총 153개 사단/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의 구성비는 도표 2-7과 같다.

지상군은 평양-원산선 이남 전방지역에 10개 군단, 60여 개 정규사단/여단이 전진배치되어 있으며 동부전선에 제1군단, 중동부전선에 제5군단, 중서부전선에 제2군단, 서부전선에 제4군단이 위치해 있다. 또한 중부 및 평양지역에 4개 군단(제3·7·9·12군단)과 평양방어사령부, 후방지역에 4개 군단(제6, 8, 10, 11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도표 2-7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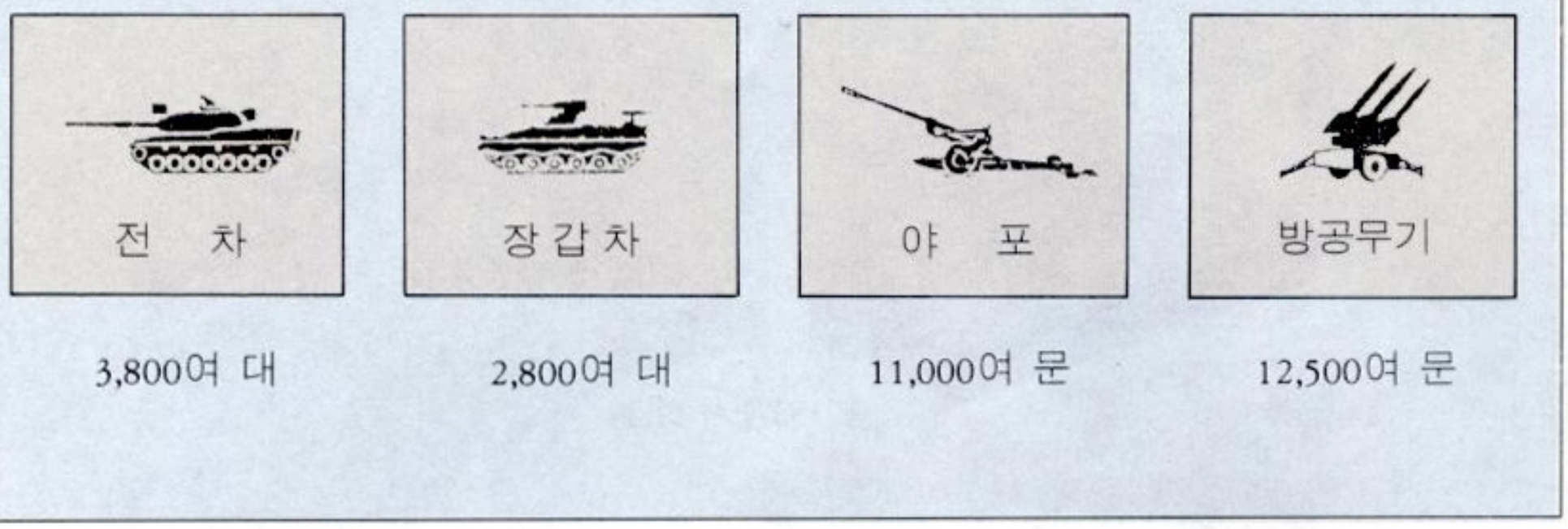


있다.

지상군의 주요장비는 도표 2-8과 같다. 지상군은 T-54/55/59전차 2,750여 대와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 대, 구형인 T-34전차 250여 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는 BTR 계열 및 M1973형 등 2,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포병은 8,300여 문의 76.2, 100, 122, 130, 152, 17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2,700여 문에 달하는 107, 122, 132, 240밀리 방사포, 그리고 고사포 등 12,500여 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은 군단, 여단으로 다양하게 편성된 대규모 기계화보병 및 전차부대들이 주요 공격 축선상에 종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격시 돌파구 확장 및 전과 확대시 종심기동 작전부대로서의 집중 투입이 용이하다. 포병은 견고하게 구축된 갱도 진지에 전개되어 있어 노출없이 종심 깊은 지원이 가능하며 방사포에 의한 대량 집중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량의 수륙양용차량(600여 대)과 조립식 S형 부교(2,300여 개) 장비를 갖춘 도하공병은 병력과 장비의 강습도하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특수전 부대는 약 10만명으로서 유사시 전·후방지역에 대량 침투하여 남한 전역에 대한 동

도표 2-8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시 전장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으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규모는 약 2만여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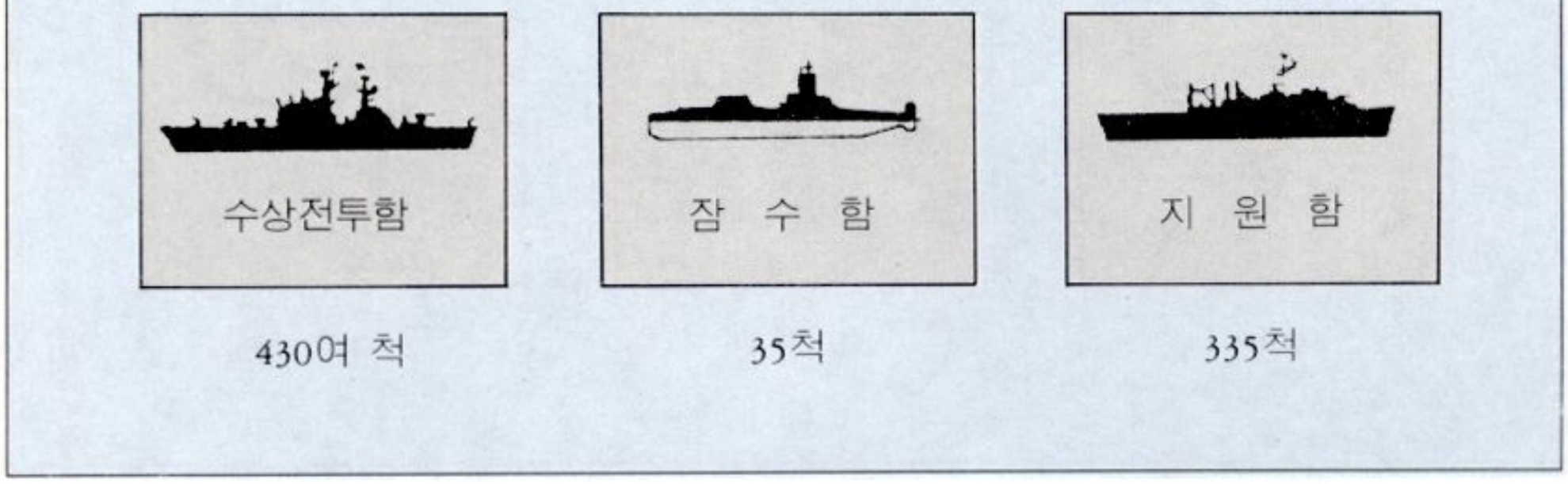
북한은 전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하여 개전 초기 경보병 및 특수전 부대를 대규모로 은밀히 침투시킨 가운데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기도하고 있다. 즉 땅굴을 통하여 침투한 부대가 아군의 전방 주력부대를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후방에 침투한 특수전 부대와 연결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토를 동시 전장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 지역에 20여 개의 땅굴을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발견한 제1, 2, 3, 4 땅굴들이 모두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기습공격에 의한 단기 속전속결전략의 주요 수단으로써 땅굴을 이용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해 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 함대로 양분되어 있으며 서해함대 사령부에 6개 전대, 동해함대사령부에 10개 전대가 편성되어 총 16개 전대가 배치되어 있고 동해함대 사령부는 약 470여 척, 서해함대사령부는 약 33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함정은 도표 2-9와 같이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수상전투함 430여 척, 잠수함 35척(소형잠수함 9척 포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지원함 335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0%의 함정이 전방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다.

해군은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을 전진배치함으로써 전방 접적해역에서의 대함 기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도탄정은 사거리 45㎞의 스틱스

도표 2-9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STYX)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함으로써 남한 전 해역에서 해상교통로 교란 및 기뢰부설, 특수부대 요원의 은밀 침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해안에 사거리 95km에 달하는 샘릿(SAMLET) 및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인천 외항과 동해의 속초 외항까지 대함 공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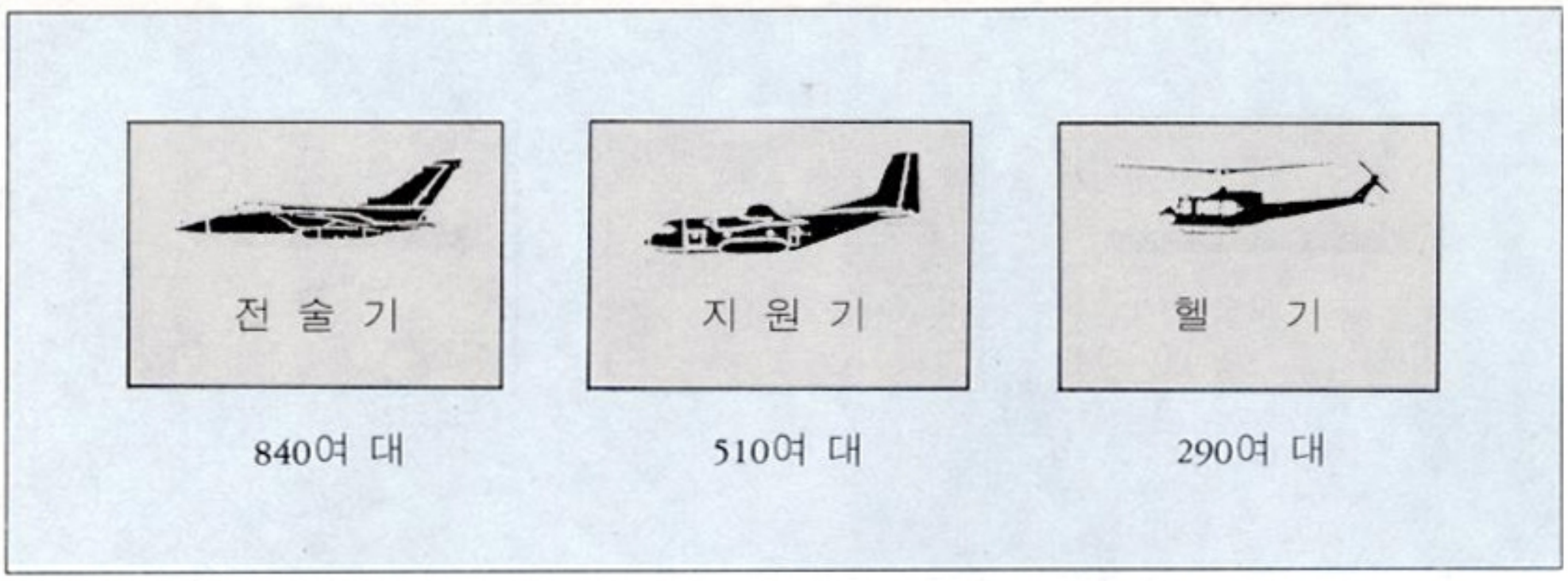
해군은 소형잠수함 등 공격용 함정의 건조를 계속하는 한편,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 등 전력 증강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조하여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부양정은 지상군 1개 소대규모의 무장병력을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으며,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므로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으며,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상륙공격에 운용될 수 있다.

다. 공　　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6개 항공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군사령부는 이들 부대를 직접 지휘통제하고 있다. 이 중 3개 항공사단은 전술기연대, 2개 항공사단은 수송기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개 항공사단은 조종사 양성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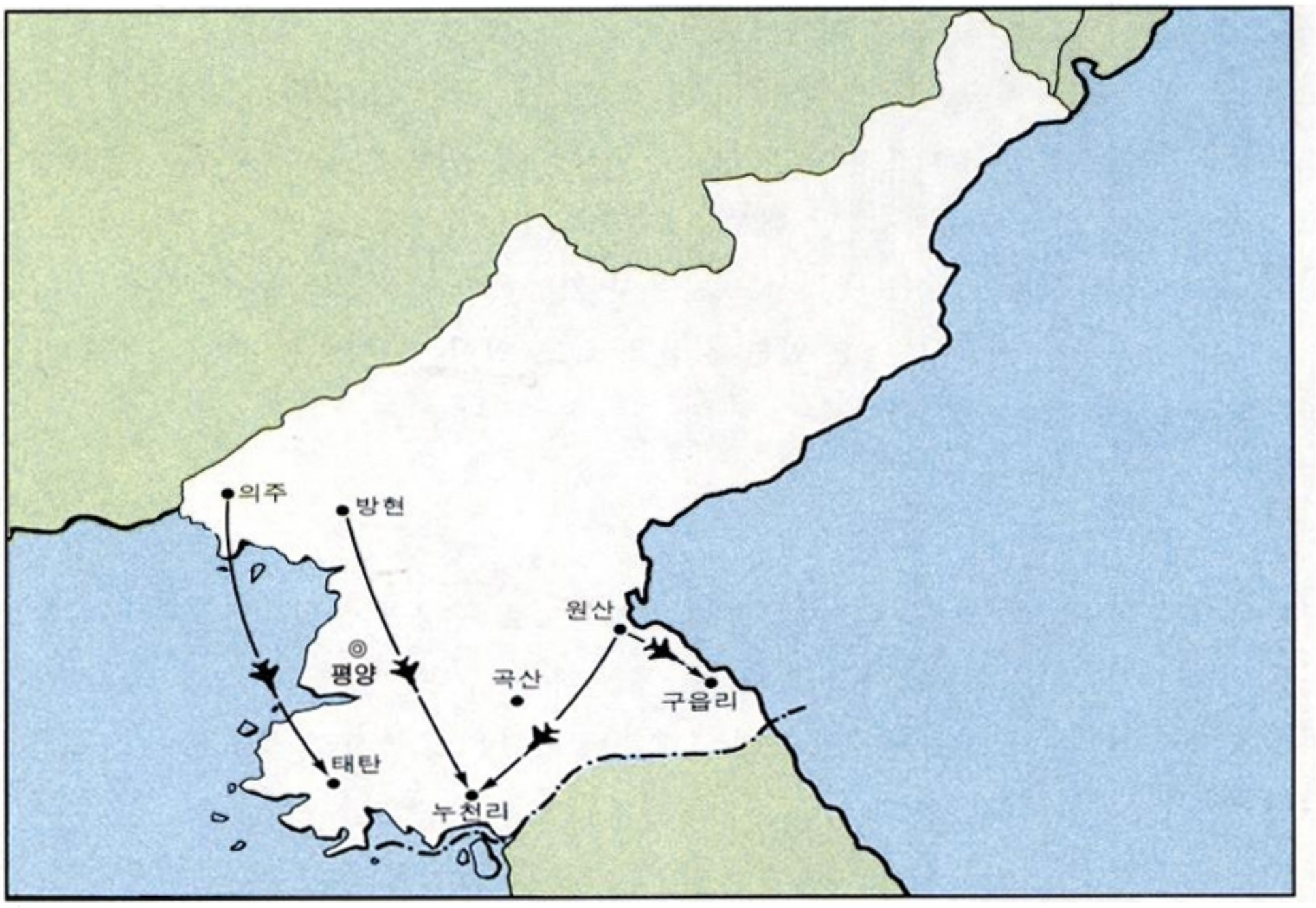
공군은 도표 2-10과 같이 MIG-23/29 등 최신예 전술기 60여 대를 비롯하여 주

도표 2-10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현황



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60여 대, MIG-15/17계열 320여 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10여 대 및 헬기 290여 대를 포함하여 총 1,64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공군은 MIG-25 전투기, SU-25 근접지원기 및 IL-76 수송기, M1-26 공격용 헬기 등 신예기를 도입하여 전술항공 전력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도표 2-11 북한 공군 전투기 전방지역 추진배치 현황



공군은 제트기지, 비제트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70여 개의 항공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0여 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해 두고 있다. 특히 주력 전술기들은 전선에 비교적 가까운 전방기지와 평양권에 배치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50%를 전방 지역에 추진 배치하고 있어 현 기지에서 발진하여 우리 나라 전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1995년 10월에 420여 대 이상의 전투기·폭격기·수송기·헬기 등을 재배치시키면서 100여 대의 항공기를 도표 2-11과 같이 비무장지대에 인근한 3개 전방 예비기지로 전진배치하였다. 이 중 IL-28 폭격기 20여 대는 태탄으로 전진 배치되어 서울 도달시간이 종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MIG-17기 80여 대를 누천리, 구읍리로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6분이면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치조정은 구형기인 MIG-17기로 1차 공격을 감행한 뒤 MIG-21, SU-25 등 주력기로 2차 공격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25남침전쟁시 유엔군으로부터 대규모의 공중공격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휴전 이후 현재까지 12,500여 문의 고사포와 단거리 방공무기 SA-3, 중고도용 SA-2 및 장거리 목표 공격용 SA-5 등 330여 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조기경보 및 요격을 위한 레이더 장비를 증강 운용함으로써 강력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라. 예비전력

북한은 1960년대 후반 이후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 인민의 무장화"라는 군사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예비전력은 14세로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 예비병력은 66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가 164만여 명,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395만여 명, 고등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84만여 명, 인민경비대가 14만여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전력의 동원체제 면에서도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는 교도대와 인민경비대는 부대 단위로 즉각 동원하여 전투투입이 가능하며, 당 민방위부가 통제하는 붉은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단시간 내에 동원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성상 주민의 거주이전과 직장배치 및 여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비전력의 상시적인 동원체제 유지가 용이하다.

3. 戰略武器 威脅

가. 핵 개 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대남적화 통일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 중반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여 소련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 확장을 자체기술로 달성하였으며 5MWe급의 연구로(제2원자로)를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와 핵개발 체계의 완성에 주력하여 우라늄의 정련 및 변환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태천에 200MWe급 원전을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고폭 실험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여 이제는 핵무기 보유 직전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의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핵무기 1~2개 제조 분량의 플루토늄(PU)을 추출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1995년 12월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기합의된 핵사찰 재개를 거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 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과거 핵 투명성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을 중단한 대가로 경수로 2기와 매년 중유 50만톤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미·북 연락사무소 조기개설 추진 등의 가시적인 실리를 확보하였고, 아울러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전쟁가능성 시사 등을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변 관련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실리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화생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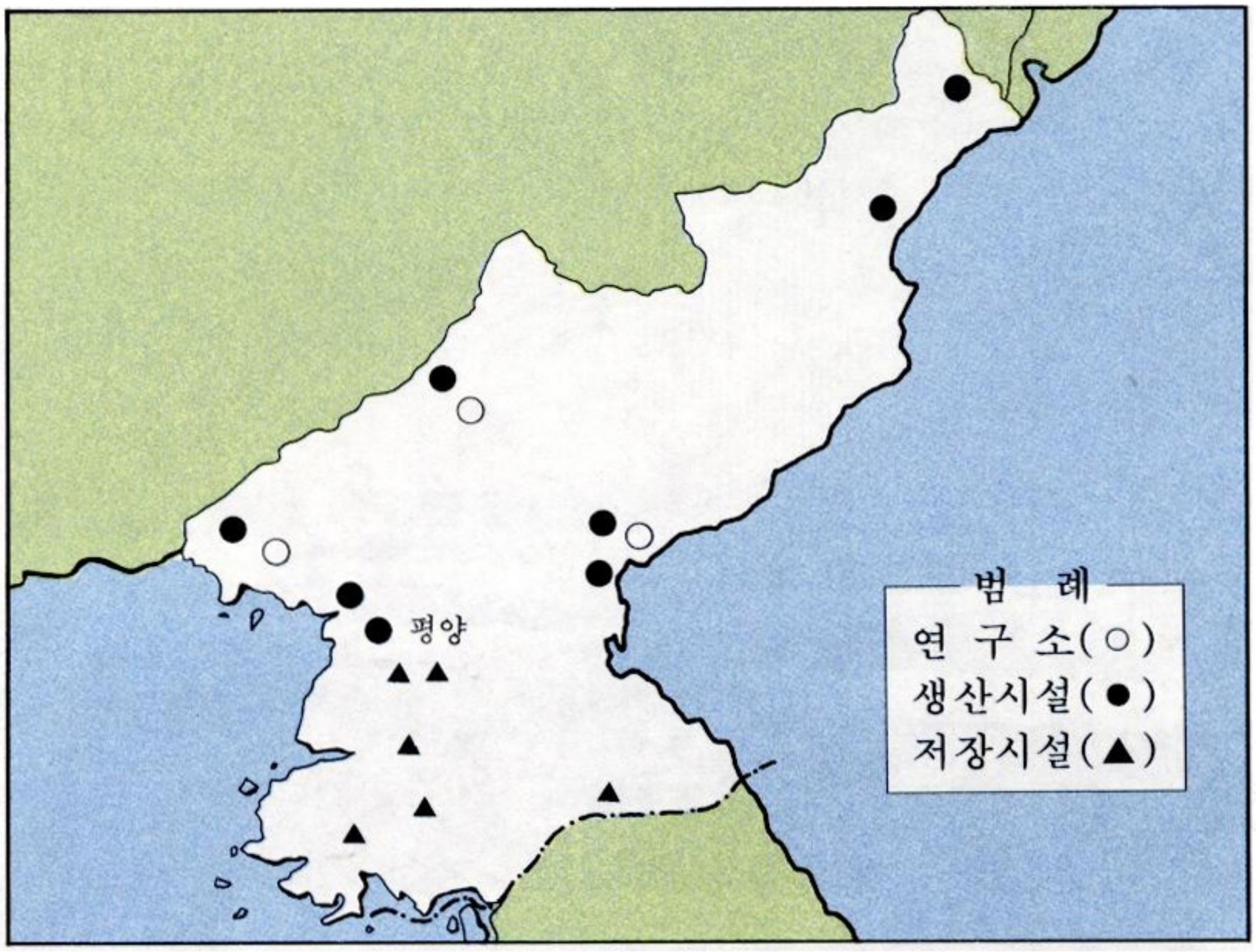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고 무기개발, 방호

및 탐지장비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은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최루성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화학무기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초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수차에 걸쳐 하달된 화학무기의 중요성에 대한 김일성의 강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화학무기가 경제성, 효율성과 증거인멸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분쟁지역에서 일부 국가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위력이 입증된 데 고무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개의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를 배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시설 현황은 도표 2－12와 같다.

도표 2－12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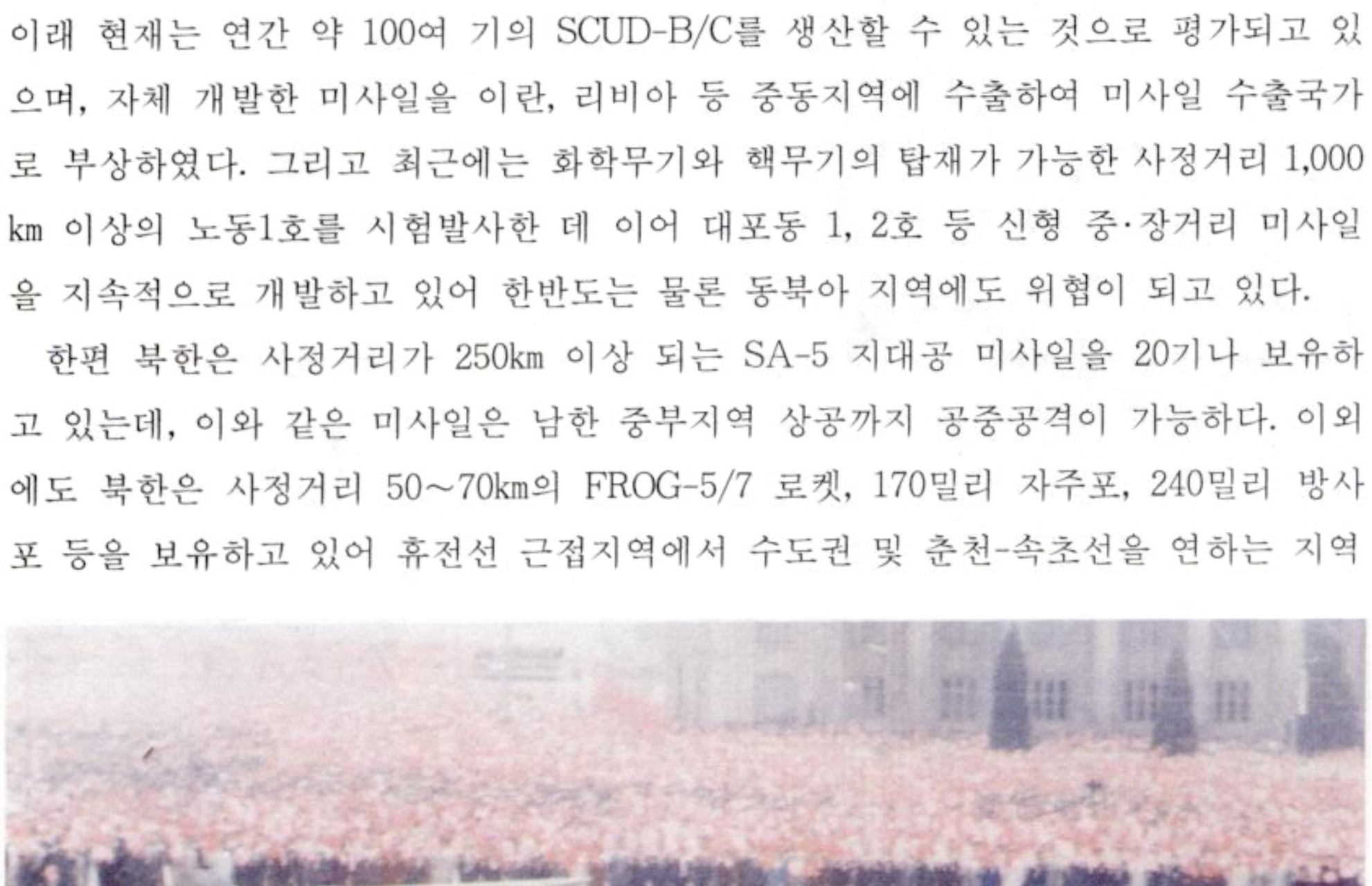
북한군은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급까지 화학 소대를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군인은 물론 준군사부대 요원과 민간인까지도 화생방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화학무기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는 전·후방을 동

시에 화학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지상은 박격포, 야포, 방사포, FROG-5/7, SCUD 등과 해상은 화력지원정, 공중으로는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 공격목표지점까지 공격할 수 있다.

다. 장거리 유도무기

북한은 19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SCUD 미사일을 도입하여 모방 생산에 착수한 이래 현재는 연간 약 100여 기의 SCUD-B/C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미사일 수출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1호를 시험발사한 데 이어 대포동 1, 2호 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정거리가 250km 이상 되는 SA-5 지대공 미사일을 20기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사일은 남한 중부지역 상공까지 공중공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북한은 사정거리 50~70km의 FROG-5/7 로켓, 170밀리 자주포, 240밀리 방사포 등을 보유하고 있어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수도권 및 춘천-속초선을 연하는 지역



SA-5 지대공미사일

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사정 무기를 생산, 배치하고 있는 목적은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 및 전략 표적들을 공격함으로써 주민들의 공포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군사·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표적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最近 軍事動向

북한은 1990년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 및 대남 적화전략 추진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전쟁 준비에 일관해 왔으며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전쟁능력과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주요군사력 증강 동향을 보면 정규군단이 없던 후방지역 1개 도의 지구사령부를 군단으로 증편함으로써 각 도별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무기 면에서는 양적 증강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면서 주로 장거리 화력과 후방지역 기습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포인 170밀리 자주포 120여 문과 240밀리 방사포 140여 문을 생산하여 전방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최초 진지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전략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미사일은 SCUD의 증강배치 준비와 함께 지난 1993년 5월 시험사격에 성공한 바 있는 노동1호에 대한 결함 요소를 보완하였으며 대포동 1, 2호의 엔진시험을 준비하는 등 꾸준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로미오급 또는 위스키급 재래식 잠수함과는 별도로 소형 잠수함 수척을 건조하여 일부는 작전 배치하고 현재도 계속 건조 및 의장 중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지원하에 AN-2기 30여 대를 자체 생산하여 이 중 20여 대는 작전배치하였고 10여 대는 시험 비행중에 있다.

북한은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시한부 전쟁준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걸프전의 교훈을 도출하여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전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군사시설의 지하 안전갱도 보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시설에 대한 전시의 지속적인 생산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5년 10월에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직에 빨치산 세대와 순수 야전군 출

신을 등용하였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예하의 국경 및 해안경비부대를 인민무력부로 예속 전환하여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빈번하게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관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군 우대정책을 부각시키고 장병들의 전의를 고양시키고 있다.

북한군의 훈련활동은 1994년 이후 우리 나라와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공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서해에서 해·공군의 합동훈련, 공군의 협동 대지공격훈련, 공기부양정 및 AN-2기를 이용한 침투훈련, 후방지역 준군사부대 동원훈련, 주민 등화관제 및 대피훈련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였다. 1996년 초에는 동계훈련 기간을 통하여 군기사고 및 탈북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학습과 군사규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第4節 北韓의 對南 心理戰

1. 基本目標 및 方向

북한의 대남 심리전 기본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5가지 중점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첫째, "남한" 대중의 혁명적 의식화를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사회 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등 각계 각층의 대중을 대상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증오심, 투쟁심을 유발시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혁명적 의식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둘째, "남한" 사회의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전, 선동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의 반미, 반정부 투쟁이 곧 적화통일과 연계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위장평화공세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공산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북한을 평화적 주체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넷째, "남한" 사회의 내부분열 조장과 체제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체제 약화를 위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여론을 악화시켜 국민과 정부 간은 물론 지도층과 군 내부의 대립 및 와해를 위한 정치 및 사상공세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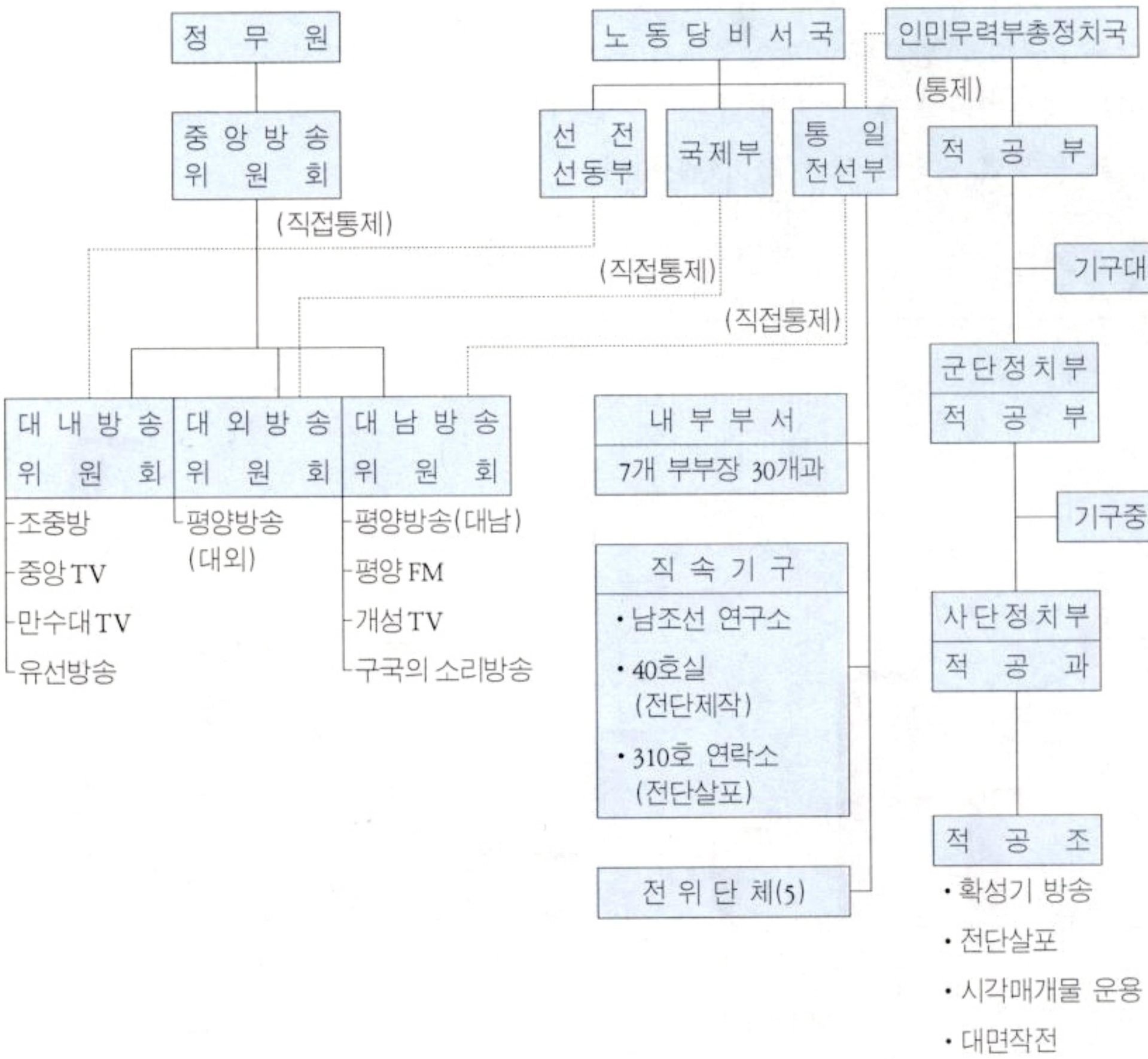
하고 있다.

다섯째,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이용하여 혁명투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모략 및 선전, 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2. 對南 心理戰 遂行機構

북한은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 비서국 책임하에 당·정 계통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요소를 통합하여 전략적, 전술적 차원의 대남 심리전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남 심리전 수행기구는 도표 2-13과 같다.

도표 2-13　북한의 대남 심리전 수행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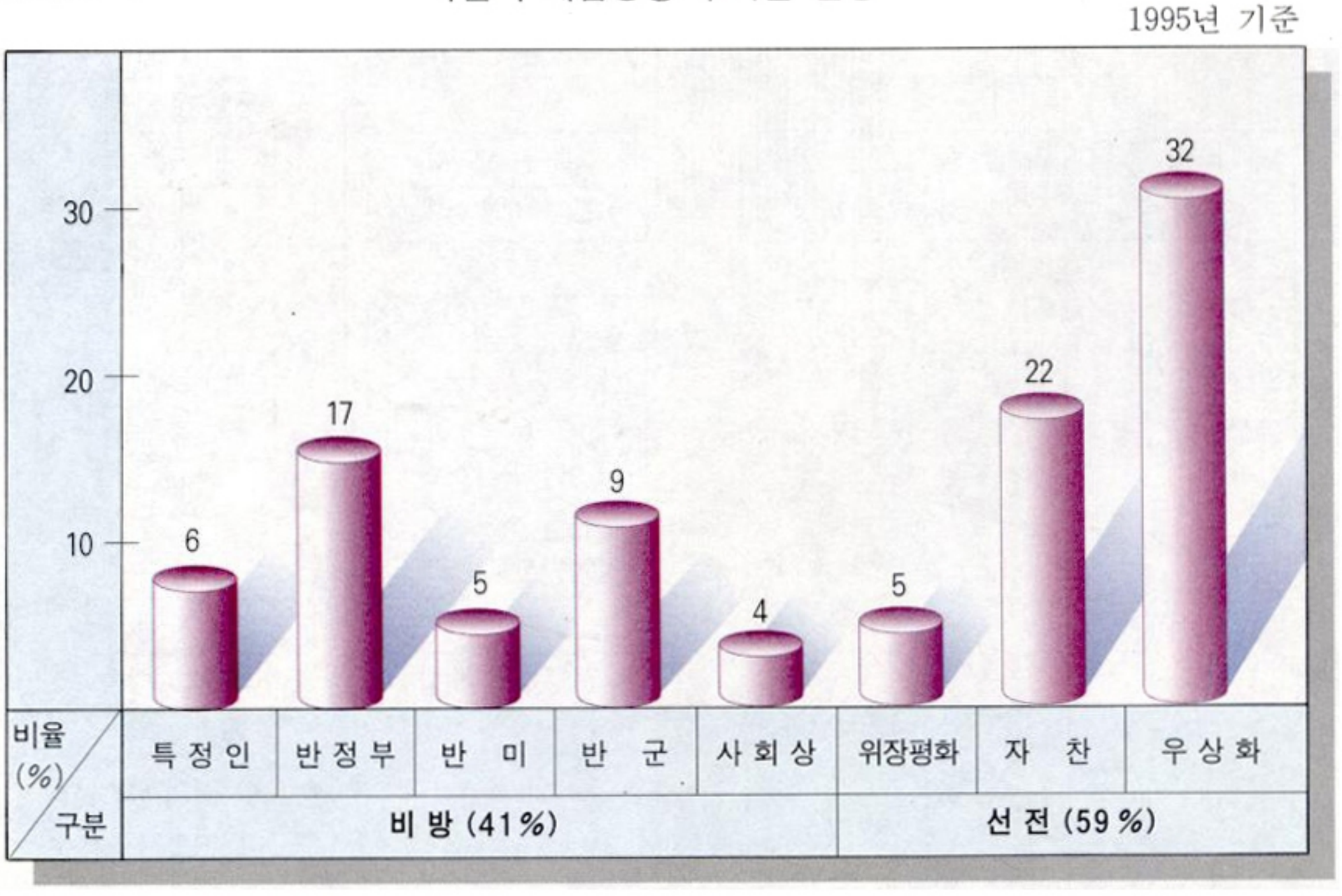
대남 심리전은 노동당 비서국 통일전선부에서 라디오, TV, 확성기 방송, 전단, 시각 매개물 등 수단을 이용하여 대남 심리전을 실시하며, 특히 라디오와 TV는 대남 심리전의 주요 수단으로서 통일전선부가 직접통제하는 대남 방송위원회에서 평양방송, 평양 FM 방송, 개성 TV와 대남 흑색 방송인 민민전 방송(일명 '구국의 소리'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와해 공작부에서 담당하며, 전단 작전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제하 310호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기구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3. 媒體別 活動

1995년도 확성기 방송은 대남비방 및 체제 우월성 등의 내용으로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2~10회 반복하여 일일평균 10~11시간씩 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는 방송장비 노후 및 전력난으로 방송시간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대남 방송의 주제별 현황은 도표 2-14와 같다.

도표 2-14 북한의 대남방송 주제별 현황



전단은 대남 비방 및 자찬식 선전내용으로 전방지역 10여 개 살포 기지에서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남한지역에 살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북지역에 집중 살포하고 있다.

전선지역의 시각 매개물은 네온전구, 돌글씨, 입간판, 방벽 등 5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낡고 조잡한 형태이며 주요 게시내용은 김정일 우상화 및 체제선전, 반미·반군 선동 등이다.

4. 最近 對南 心理戰 動向

최근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은 신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상외교, 개혁정책 등을 모략 날조하면서 특정인과 정부에 대한 비방, 중상 모략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 내부의 부조리와 사회상, 생활상을 왜곡 날조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대정부 불신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전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과거와 변함없이 대남 비방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인에 대한 모략·비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유럽, 유엔, 아·태지역 외교를 사대매국으로 모략·비방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15대 총선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과거와 다름없이 극렬하게 모략·비방하고 있다.

둘째,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조치와 한·미 군사연습을 북침준비 책동으로 모략 날조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시장개방,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하여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며 핵폐기물 처리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관련하여 반정부 투쟁 선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국군 및 사회 실상 등을 왜곡 날조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군복무 환경을 왜곡 비방하고 복무 염증 유발 및 사기 저하를 위한 비방 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5·18문제, 노사분규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비방, 불신을 조장하여 대학가와 근로계층에 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넷째,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제시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8·15 범민족 대회, 고려연방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여 내외에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동구 공산권 몰락후 체제위기에 직면하자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부자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 선전을 통하여 우리 사회 내에 북한 추종세력을 부식(扶植)하는 한편, 이를 북한 체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남 심리전을 통하여 우리 정부와 특정인을 모략 비방함으로써 정통성을 훼손시키며, 불신감, 증오심을 확산시켜 소모적인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등 대남적화통일의 기반구축을 획책하고 있다.

第4章　綜 合 評 價

第1節　世 界 安 保

냉전종식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과정은 과거 냉전체제의 양극질서를 대체하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질서의 전모와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의 세계안보동향을 살펴볼 때 향후 세계안보질서는 주요 강대국간의 관계, 국가이익 및 안보위협 개념의 다원화에 따른 각국의 대응, 비냉전적 갈등의 대두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따른 국제적 조정 및 관리 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하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국가안보전략 및 체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즉, 각국가들은 미래를 예측하여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을 재정립하고, 군구조의 재편과 운용체제의 개선, 그리고 보다 정예화된 군사력 정비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 조정과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모색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은 범세계적인 조정 및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자칫 "질적 군비경쟁"의 결과를 부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전략무기 수출통제, 핵실험의 전면 금지, 분쟁의 평화적 조정 및 해결 등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안보질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안정하고 유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분명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려면 상당한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의 세계안보정세는 상대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약소국들의 安保負擔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第2節 東北亞 安保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유럽의 변화와 비교할 때는 훨씬 완만하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내 질서도 미·소 양극질서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질서로 이행될 전망이며, 이러한 다극질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상호관계를 통해 조정 및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변 4국의 역할을 전망하면 우선 미국은 지역질서 유지능력과 막대한 안보경제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행동반경과 영향력 범위는 상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일본과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 잠재력이 지역 및 세계적 수준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이익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기의 동북아시아 지역 각국간의 경쟁과 대결 양상도 점차 정치적 화해와 협력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즉, 적대적 혹은 비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지역내 국가간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각국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 이 지역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과 군비감축 추세에 역행하여 오히려 군비증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하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역내 국가들의 대처과정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또한 역내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각국의 재정적 능력의 증대 역시 군비증강을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간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분단국 문제, 영토문제 등에 기인되는 잠재적인 불안과 긴장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지역안보문제 전반을 협의,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비록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공동인식과 필요성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쌍무적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정세 불안정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第 3 節　韓半島 安保

1990년대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김일성 사망과 북한 핵사찰 문제 등의 영향으로 경색과 긴장의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남북한간의 국력경쟁구도는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제한적인 개방정책과 실리주의 외교추진 등은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체제안정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1994년 10월에 타결된 미북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의욕을 일부 해소하는 대신에 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위기대응방식은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 아닌 제한적인 대외 개방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안정 및 유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북한을 경계하는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도발할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단기적으로 체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군사도발에 의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남정책면에 있어서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면서 전쟁불사 발언 등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남 전략목표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전 사회를 병영화해 온 북한은 언제라도 무력도발을 감행할 전쟁준비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과 전진 배치,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북한 주민 및 군의 전의를 고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변함 없는 대남적화통일 노선과 무력 남침전략, 그리고 군사모험주의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전쟁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무력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계의식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96년도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을 비교하면 도표 2－15와 같다.

도표 2－15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 상 군	56만명	69만명[1]	92만명	105.5만명[2]
			해 군	6.6만명		4.7만명	
			공 군	6.4만명		8.8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50개[3]			54개	
		여 단	21개			99개	
	장 비	전 차	2,050여 대			3,800여 대	
		장갑차	2,250여 대			2,800여 대	
		야 포	4,700여 문			11,000여 문	
해 군	수상전투함		180여 척			430여 척	
	지 원 함		50여 척			335척	
	잠 수 함		4척			35척[4]	
공 군	전 술 기		530여 대			840여 대	
	지 원 기		160여 대			510여 대	
	헬 기		630여 대			290여 대	
예비전력(병력)			308만여 명[5]			660만여 명[6]	

註 : 1)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병력 3만 5천 증가,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2) 지상군 해병병력 포함
3) 해병사단 포함
4) 북한 잠수함 35척 중 소형잠수함 9척 포함
5) 한국 : 예비역/보충역
6) 북한 :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인민경비대

3

第 3 部

國　防　態　勢

第 1 章　軍事對備態勢

第 2 章　精銳軍事力 育成

第 3 章　韓·美 安保協力

第 4 章　對外 軍事交流 協力

第 5 章　軍備統制

第 6 章　國防態勢 發展方向

第 1 章　軍事對備態勢

우리 군은 國防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 전쟁억제에 역점을 두면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의 도발 유형별로 대응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한편, 팀스피리트 연습, 환태평양 훈련 등의 연합연습 및 훈련, 합참지휘소연습 등의 합동연습 및 훈련, 각 군별 훈련, 그리고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第 1 節　軍 事 戰 略

우리 군은 평시에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을 억제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번영을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만일 억제가 실패하여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적극적 방위로 적을 격멸하여 전승을 달성하고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평시의 전쟁억제는 우리의 희망이나 요구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위의지와 군사적 대비태세 여하에 달려 있다. 즉 효과적인 억제전략의 핵심은 적의 전쟁도발의지 자체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의지를 보유하고 이를 적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시의 전쟁억제를 위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積極的 抑制戰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군 주도의 自主的 전쟁수행태세를 제고시키고 즉응성 있는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며, 제한된 적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전력으로 도발양상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확전 또는 재도발을 방지한다.

이러한 우리의 전쟁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도발할 때에는 積極的 防衛 개념에 입각하여 수도권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의 전쟁수행 의지를 분쇄하고 적 주력을 격멸하여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편 아·태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존의 한·미 관계를 기본축으로 全防衛 우호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갈등과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 완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第2節 作 戰 態 勢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 남침공격과 각종 유형의 국지도발 그리고 침투 및 테러, 대남심리전 등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1. 全面戰 對備態勢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그들의 의도는 선제기습,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전후방지역에서 동시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전 지역을 최단기간 내에 점령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기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초전즉응태세를 확립하여 적의 기습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초전부터 전방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는 한편, 적의 전방공격부대와 아 후방에 침투한 적 비정규전 부대간의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작전기도를 조기에 좌절시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북한의 전쟁수행 의지를 분쇄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가. 초전 대응태세

현대 첨단무기체계의 가공할 파괴력과 북한군의 기습 및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감안할 때 개전 초 수일간의 전투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군은 적극적 억제전략의 구상에 따라 현대전에 부응할 수 있는 초전대응태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그들 전력의 약 65%를 전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부근의 전방 항공기지에 다량의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남침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조기경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24시간 운용하여 전략, 전술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및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아군의 전투준비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단기 경고하에서도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평시부터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SCUD, 노동1호, 대포동과 같은 각종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여 왔고, 이중 일부를 실전 배치하였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 사정권 내의 주요 전력 및 국가급 핵심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적의 유도탄기지에 대한 감시를 부단히 실시함과 아울러 유사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셋째, 북한은 그들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계화부대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접근로상에 각종 화력과 장벽을 통합한 종심 깊은 방어지대를 설치하고 공·지·해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적의 기계화 부대를 초전에 저지 격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넷째, 북한은 야간 및 악천후하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전천후 신예전투기와 특수부대 침투용 저공 저속 항공기를 전방기지에 전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적인 공중공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으로의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동 방공작전체제를 일원화하고 자동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상 기동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지·해 합동작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공중공격 및 해상기습상륙에 대비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국제적으로 화학무기 확산금지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여 화학무기 생산 및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은 물론, 다수의 화학무기 생산공장을 갖추고 대량의 화학무기를 생산 및 비축하고 있으며 유사시 우리의 전후방 지역에 화학탄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북한의 화학공격에 대비하여 군별, 제대별로 화학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후방 전 지역에 화학공격을 조기에 탐지,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고, 화학전 상황하에서도 생존성이 보장되고 작전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호장비 및 물자와 집단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여섯째, 초전의 혼란을 극복하고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작전 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공·지·해 합동작전 및 민·관·군 통합작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현대 전장환경의

특징인 지휘통제 범위의 광역화, 대량 정보의 폭주 등을 고려하여 實時間(Real Time)에 제 전장요소를 신속 정확하게 통합지휘하여 先見, 先決, 先行할 수 있도록 전략제대 중심의 지휘소 자동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곱째, 전쟁이전 및 초기 작전단계에서 소요되는 예비전력을 즉시적으로 운용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동원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동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예비군 자원관리 효율화와 제반 전시동원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동원태세를 구축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수도권 및 후방지역 방위태세

수도 서울이 지리적 여건상 휴전선에서 불과 40여 km의 거리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안보상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인구와 국가경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방위의 성패가 국가방위의 성패로 직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수도권 방위를 모든 군사행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가장 위협시되고 있는 적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노후 레이다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자동화 방공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 합동 방공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침투한 적기는 수도권 도달 이전에 포착, 격추할 수 있도록 주요 공중접근로상에 요격기,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적 공격시 이를 차단, 봉쇄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적 특수부대의 우회공격, 비정규전, 공중강습 그리고 적 포병에 의한 포격 등 예상되는 각종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에 대비한 주민의 의료, 급수, 보급, 소산대책의 수립과 행정구역 단위의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수도권 방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작전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유사시에 우리의 후방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지상, 해상, 공중으로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우리의 조직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와해시키고자 기도하는 한편, 침투한 특수부대들은 전방작전부대의 공격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보조부대의 역할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지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전국민의 확고한 결전의지를 바탕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가용능력을 통합하여 전

투력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규전 개념의 후방지역 작전체제를 발전시켜 북한의 전후방 동시 전장화 기도에 대비하고 있다.

다. 영해 및 영공 방위태세

領海란 基線으로부터 12해리(22.2km)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영역이다. 우리 나라는 대륙에 접속된 반도국가로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사실상 도서국가와 같기 때문에 해양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평시 영해와 인근 수역에 대해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작전과 해상 초계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敵性 선박을 조기에 탐지, 식별, 통제하기 위하여 작전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해상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같은 개념으로 동·서해에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 이후 서북도서 인근해역의 북방한계선을 빈번히 월선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수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어로보호 등 남북한 마찰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

한편, 1994년 11월 16일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領空은 우리의 영토와 영해의 상부 공간으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공역으로서 현대전이 통상 항공기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해 볼 때 영공의 효과적인 방위는 바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영공방위를 위해 모든 항공기와 그 항공기 위치에 대한 신속한 식별과 확실한 통제를 하기 위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우리의 공역 내로 침투하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투 공중초계비행과 비상대기 항공기 및 방공포의 통합작전태세를 유지하여 완벽한 영공방어태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건설교통

부)이 관리하는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내에서 인가된 항공기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고,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 및 구조지원을 위해 국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局地挑發 對備態勢

북한은 휴전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였다. 예를 들면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을 비롯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동서 해역에서의 어선납치,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무력시위,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에 대한 월선행위 등의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도발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三重苦를 타개하기 위해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지도발시에는 남한 내부에 긴장을 조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거나 우리 군의 대응태세 시험 및 전면전 도발 구실 확보, 또는 정치적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예상되는 국지도발 양상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위한 전선지역 및 북방한계선에서의 고의적인 정전협정 위반, 서북도서를 포함한 특정지역에서의 각종 도발행위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적정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발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양상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3. 浸透 및 테러 對備態勢

북한은 과거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1987년 KAL 858기 폭파 등 각종 침투 및 테러 도발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들은 우리 내부의 사회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고, 북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지상, 해상, 공중 및 우회침투와 다양한 방법에 의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최신형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감시 및 경계를 실시함으로써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

하고 원점에서 격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적이 내륙으로 침투시에는 이를 신속히 포착, 격멸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을 통한 우회침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범국가적인 대테러 종합대책을 수립,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진입을 거부하는 한편, 테러 발생시에는 신속한 초동조치로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대테러 특공부대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첨단 대테러장비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4. 心理戰 對應態勢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적화통일 여건조성을 위해 정치, 사상적 공세를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용한 심리전 수단을 총동원하여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화자찬적 선전과 더불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이를 우리 나라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대남 비방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심리전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수행체제와 선전, 선동 등 각종 심리전공세를 성향별로 분석하여 주체사상, 세습독재체제의 모순 및 한계성, 북한군의 열악상, 必敗의식 등의 내용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모순 및 허구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정책 및 의지,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의 필요성, 정부정책, 풍요로운 발전상과 국제적 위상 등 우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전 가용매체를 통합 운용하여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권고, 설득, 경고하고 남북 화해협력 및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대북심리전 수행을 위하여 각 매체별로 작전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검증과정을 체계화하여, 확성기 방송은 대담, 음악,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상황변화에 따라 비판, 홍보, 설득, 선동 등으로 융통성 있게 개편하고, 대북 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북한군 및 주민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第3節 軍事演習 및 訓練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전쟁시에 예상되는 각종 상황과 조건 속에서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을 발휘하여 전승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훈련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평시부터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군의 훈련은 물론, 연합 및 합동연습과 훈련에 이르기까지 실전적인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聯合演習 및 訓練

장차전은 이미 걸프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자국의 이익과 결부된 동맹 및 연합체제하에 공·지·해 입체작전과 고도 정밀무기에 의한 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도표 3-1 연합연습 및 훈련내용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팀스피리트 연습	야외기동연습	한·미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능력 향상	○ 전구급 연합 및 합동훈련 ○ 공중강습, 도하, 사단급 기동훈련 ○ 항모훈련, 비상 이착륙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지휘소연습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충무계획 및 작계 5027절차 연습	○ 전시 전환절차 ○ 미 증원군 전개 ○ 작계 시행절차 연습 ○ 컴퓨터 모의에 의한 연습
RSOI 연습	지휘소연습	미 증원전력 전개에 따른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연습	○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 준비 절차 ○ 연합 후방지역 작전 ○ 전시지원 협조 및 요청절차
환태평양 훈련	해상기동연습	환태평양 연안국 해군의 다국적 연합 해군작전과 대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 해상이동, 정박, 숙달 종합 훈련 ○ 대잠, 수상전, 대공전, 유도탄 발사, 해상 공방전 훈련

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 통합된 작전계획하에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연합연습 및 훈련은 도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 팀스피리트 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은 1975년 월남 공산화 이후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1978년 7월에 개최된 제1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은 팀스피리트연습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양국 군대의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1979년부터 매년 연습을 실시하였으나 1992년과 1994~1996년간에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연습을 실시하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상례적인 연합연습이며, 북한이 선전하는 바와 같은 공격훈련이 아닌 순수한 방어훈련을 하는 것으로써 북한이 기존의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기본 노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한 자위수준의 군사능력 배양을 위한 필수적인 연습이다.

나.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은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종합 지휘소 연습으로서, 유엔군 사령부 주관으로 1960년대부터 실시하여 오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부터 유사시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실시해 오던 을지연습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1976년부터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연습은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과 한·미 주요사령부가 참가하여 정부의 전쟁지도 및 지원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분야의 작전절차를 숙달함으로써 한·미간의 협조 및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연합방위태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적 연습기법인 워게임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연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작전계획과 절차를 심층깊게 발전 및 숙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안보환경과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은 한반도에서 위기 고조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한국에 투입해야 할 경우, 해외 미 증원군을 한국에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를 연습하고 작계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습에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 미군 참모진 및 구성군 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며 제반 계획 및 절차를 발전시키고 한·미 관련부대의 작전수행체제를 확립하여 미 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방위를 위한 연합 방위체제와 군사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이다.

라. 환태평양 훈련

"환태평양 훈련(RIMPAC : Rim of the Pacific)"은 유사시 태평양상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국가들간의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상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미태평양 함대사령부 주관하에 1971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우리 나라는 1990년, 1992년, 1994년에 이어 1996년에도 국내에서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 2척이 참가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우수성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세계 첨단의 무기체계 운용과 전략, 전술 등을 경험함으로써 해군의 작전능력 함양은 물론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96 환태평양 훈련

2. 合同演習 및 訓練

장차전은 현대 첨단 무기체계와 전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간적으로는 비선형전, 입체전, 시간적으로는 속도전, 기동전이 예상되며, 대규모 공·지·해 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합참 지휘소 연습, 호국훈련, 동·서해안 축선 합동전술연습을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차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가. 합참 지휘소 연습

"합참 지휘소 연습"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와 기능에 부합되는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연례 지휘소 연습이다. 이 연습은 합동참모본부와 각 작전부대가 참가하여 적의 기습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능력 배양, 작전계획 수행능력 향상, 적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 확립,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지휘소 연습 발전에 중점을 두고 워게임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요 전장에서 통합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지상 및 해상, 공중에서 쌍방 자유기동형태로 실시하는 대부대 야외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고, 대규모 합동훈련의 경험을 축적하며, 각종 신무기 체계와 신교리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교전심판식 통제 및 야외기동훈련(FTX), 지휘소훈련(CPX), 지휘소 이동훈련(CPMX) 등 다양한 훈련방법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또한 이 훈련을 통하여 합동교리, 편성, 장비 등 전투발전소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합동훈련을 위한 훈련의 기획, 계획, 실시 통제 및 평가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 동·서해안 축선 합동전술연습

"동·서해안 축선 합동전술연습"은 적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실시해 오던 전방군단 축선별 작계시행절차 연습 중에서, 공·지·해 합동작전 및 민·관·군 통합작전이 가능한 동·서해안 축선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합동전술연습이다. 연습은 대항군을 편성, 운용하는 통제된 자유기동훈련으로써 작계 시행절차 숙달 및 초전 대비태세 완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3. 各軍의 主要訓練

육·해·공군은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적의 전술을 고려하여 각기 자군에 부여된 임무 공간에서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부대 훈련으로부터 대부대 훈련에 이르기까지 각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 육 군

육군은 현재 및 장차전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地上軍 戰法을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방어훈련은 적의 종심 깊은 고속기동에 대비한 "도로견부 위주 종심방어" 훈련을 강화하고, 공격훈련은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 적 방어중심을 타격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와해시킴으로써 최소의 희생과 노력으로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입체고속기동전" 훈련을 강화하며, 후방지역작전은 적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을 먼저 찾아서 타격하는 "공세적 후방지역작

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상군 전법의 기초 위에서 학교에서는 교육 수료후 해당 직책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전부대는 교리에 근거하여 통합전투 수행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계량화된 평가서를 기초로 객관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교리 발전, 학교교육, 야전부대 훈련이 상호 연계된 훈련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중강습훈련, 도하훈련, 사단단위 야외기동훈련, 기동부대와 연계된 군수지원훈련 등 제병 협동·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육군은 현대전 수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적 기법 및 장비에 의한 훈련인 컴퓨터 원격훈련개발, 각종 시뮬레이터에 의한 훈련, 대대 전술 모의기에 의한 훈련, 사단단위 전투지휘훈련(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등을 통하여 제대별 전투지휘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연대 전투단의 쌍방 교전훈련을 통한 지상군 전법의 적용이 가능한 훈련장 확보와 학교교육의 제병과 협동훈련이 가능한 제병협동 훈련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의 공중기동훈련

나. 해 군

해군은 유사시 해상우세권을 확보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잠전, 대함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및 특수전 등 각종 해군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의 함정은 대잠전 훈련과 대공전 및 전자전 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 전투함정은 적의 대규모 해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전 위주의 입체적 종합 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공방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 함정은 상륙돌격 및 상륙 기습훈련을 통해 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뢰전 함정은 적의 기뢰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해능력과 기뢰부설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해군의 종합기동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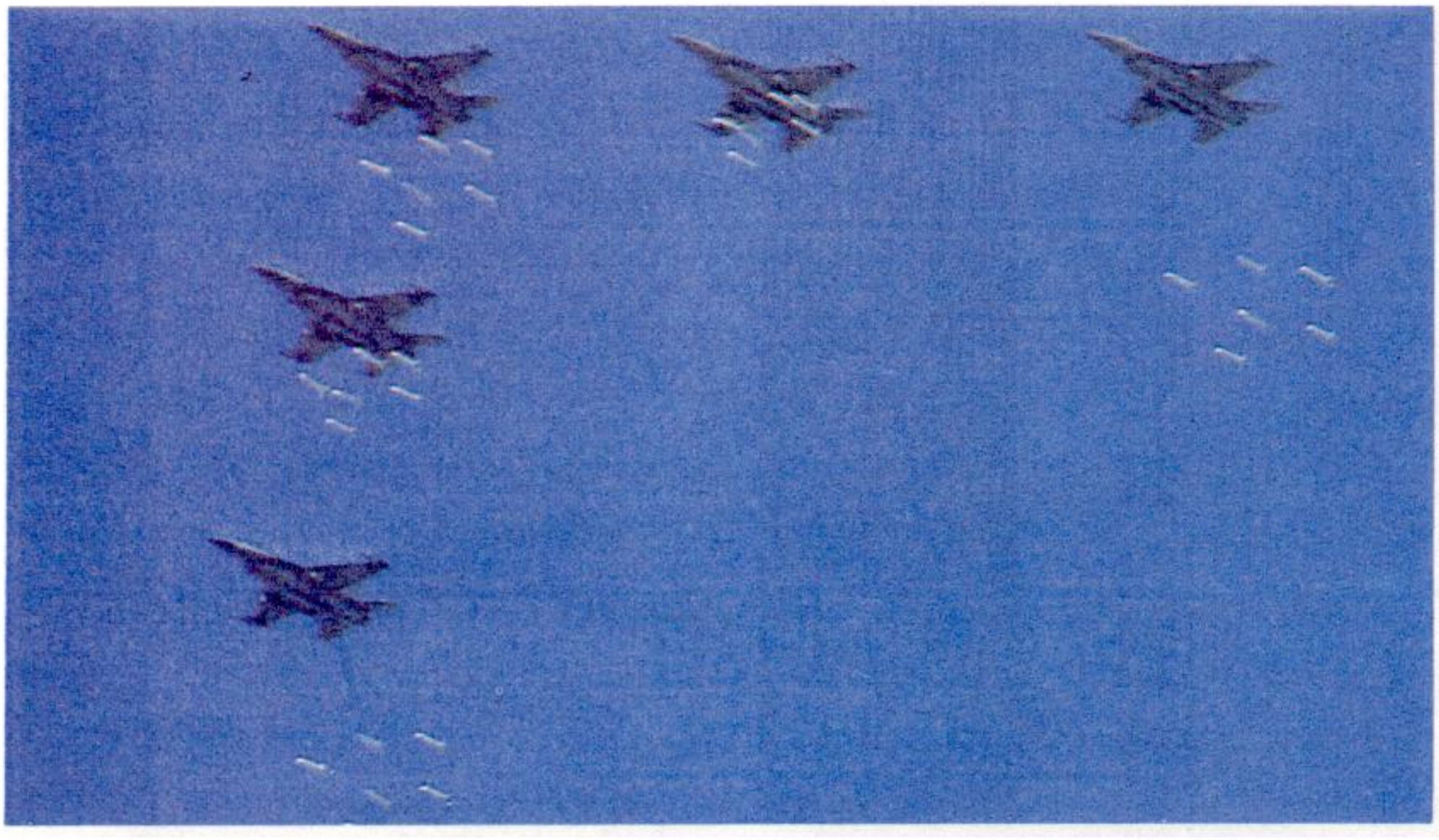
한편, 특수전 부대는 적 해안정찰, 기습타격 및 생환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함부대는 적 기지 봉쇄와 대잠수함전 수행, 그리고 적 수상세력에 대한 감시와 어뢰발사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항공부대는 함정과 협동으로 해상초계작전과 대잠전 훈련 및 레이더 탐지

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에 대해 함정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상륙전력의 일부로서 연합 및 단독 상륙훈련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육·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통합전력 발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단위부대별 숙달된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각 작전요소간 유기적인 협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적 해상작전교리의 발전과 적용을 통하여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각 함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모의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및 참모활동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숙달시키기 위해 해군 작전사령부 통제하에 "필승 워게임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연 1회 해군의 전 가용전력과 육·공군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 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다중 위협상황하에서의 복합전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적의 고속 상륙세력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수상, 수중, 항공전력의 입체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다. 공　　군

공군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며 유사시 적의 핵심 전쟁수행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육·해군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공중 전투수행



공군의 전술폭격훈련

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대공 훈련은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영공을 방위하고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적기를 탐지, 식별, 격파하기 위한 주·야간 요격 및 대량 항적 요격 훈련, 공중에서 적기를 제압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종간 실시하는 공중 전투기동훈련, 수도권에 침투하는 적기를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 격추하기 위한 수도권 합동방공훈련, 공중으로부터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저고도 저속 항적 요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대지 훈련으로는 적 후방에 위치한 핵심 전략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저고도 항법 및 편대군 공격훈련, 실무장 폭격 및 전술사격훈련, 육·해군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상황하에서 성공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전훈련, 항공정찰, 탐색 및 구조, 전술공수, 화학전 방호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실전과 같은 상황하에서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훈련결과를 엄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第4節 精神戰力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이 몰락함에 따라 대립과 갈등의 이념전쟁이 종식되고 화해와 개방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애써 외면한 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유훈통치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남적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전쟁불사론" 등 교묘한 대남심리전 공세를 펼치면서 무장간첩 침투와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각종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 좌익세력이 잔존하여 사회주의 체제붕괴와 무관하게 이념투쟁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대북안보관도 다소 이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비교적 풍요한 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 병사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적관 확립, 책임의식 고취,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위한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간의 대립이 사상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분방한 신세대 장병들을 확고한 대적관을 갖고 적과 싸워 필승할 수 있는 정병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장병정신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1. 精神教育 領域

우리 군은 정신교육을 "나라사랑", "통일안보", "군대윤리"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나라사랑"이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함께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통일안보"는 모든 형태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통일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통일관과 함께 이념무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안보 영역에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동반자이지만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군은 선량한 북한주민을 제외한 노동당, 정규군 및 준군사부대를 타도해야 할 적의 실체로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군대윤리"는 군인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 사고인지를 깨닫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케 함과 동시에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올바른 민주시민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2. 精神教育 體系

우리 군은 정신교육의 목표를 "국민의 군대로서 소명을 완수하는 정병육성 기여"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부대교육

부대교육은 일일, 주간, 반기 정신교육체제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중점은 개인의식의 변화를 기초로 군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일일정신교육은 매일 일과 개시 후나 내무반 정훈활동시간을 이용하여 30분~1시간씩 소대장 또는 당직사관 주관하에 실시하고, 주간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4시간 동안 국군정신교육교본 교육, VTR 교육, 시사

안보교육, 인성교육, 문화활동, 단결활동 등을 중대장 주관하에 실시하며, 반기 집중정신교육은 심층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주요 정신교육 과목과 안보현안문제 등을 3박4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신념화시키는 교육으로 인성교육과 병행하여 대대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학교교육

학교교육은 정규시간의 5% 이상을 정신교육시간으로 할당하여 실시하고 있다. 양성교육 과정에서는 간부 자신의 정신무장과 병사 지도능력을 구비케 하기 위해 국군정신교육교본 필수과목을 숙지시키며,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강의 및 발표, 토의를 통하여 국군정신교육교본을 숙지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신무장은 물론 교관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신병교육 과정에서는 진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하여 군법, 군대윤리, 대적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병정신교육 기본교재 및 VTR 교재를 이용하여 32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다. 기타교육

국방정신교육원에서는 예비역 전문강사 10여 명으로 "정신교육지원단"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연대급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보계도 전문요원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1,000여 명의 장교를 대상으로 주요 안보현안과 남북한 통일정책 등을 2주일간 교육시키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는 국방정신교육원 교육수료자에 의해 부대별로 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3~4명의 정신교육 지원반을 편성하여 반기 집중정신교육과 격오지 부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3. 精神教育 發展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지속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치학습, 대남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제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사상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장차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간의 가치관 통합에 군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 중심의 이념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념교육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형전력의 핵심으로서 군 교육임무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지휘관 중심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예산 면에서도 전력증강 차원에서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념교육의 특성상 지휘관이나 간부가 직접 교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부들의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보강, 지휘관 부임전 교육강화, 정훈병과 보수과정 통합 등 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정훈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정신교육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훈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방 정신교육원을 통일대비교육 및 연구기관화하고 정훈장교 보수교육, 정신교육지원단 교육, 지휘관 부임전 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토록 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며, 국군홍보관리소에도 현역을 보직시켜 야전과 연계된 정훈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각급제대의 정훈참모조직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참모로 활동함으로써 지휘관을 직접 보좌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 및 정비하며, 이와 더불어 우수 정훈인력 확보, 전문교육팀 운영, 주간정신교육방법 개선 등 제반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교육지원 분야와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용중인 교재를 전면 재작성한다는 방침하에 국군정신교육교본 내용을 수정 작성하고, VTR 교재 등은 신세대 성향을 고려하여 현실감 있고 흥미유발이 될 수 있도록 신규제작하며, 이념논리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로 각급부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재제작 지원단을 운영하여 수준높은 교재를 작성토록 하며 적극적인 교육 동기유발 대책강구, 장병안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해 나가며, 장병 안보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교육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선통신망을 활용한 중앙통제교육방법도 검토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第2章 精鋭軍事力 育成

우리 군은 외부의 군사적 도발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며 변화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예군사력 육성을 국방의 절대 명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군구조 개선, 방위력 개선 및 국방정보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 예비전력관리 및 동원태세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정예군사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第1節 軍構造 改善

우리 군은 1990년 10월에 상부 지휘구조를 3군 병립제에서 합동군제로 전환하였으며,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위기 관리능력 제고와 자주적인 합동군사기획 및 통합 군사력 운용체제의 조기 완비를 위하여 1995년 4월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의 조직 및 기능체계를 보완하였다. 한편, 부대구조는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군간의 균형 발전과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질 위주의 부대구조로 개선시키고 있다.

지상군은 입체고속기동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및 전술정보부대 발전에 중점을 두고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해군은 입체적 해상작전 수행체제를 완비하고 상륙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병행 발전시키고, 공군은 복합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 항공전력을 확보하고 자주적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대구조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변화되는 21세기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병력집약형의 부대구조에서 장비·기술집약형의 부대구조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해·공군 전력이 강화된 전력구조로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군구조개선 방향은 우선 중기적으로는 지휘체제의 단순화 등 상부 지휘구조를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의 과감한 해체 및 감편을 추진하는 한편, 상비병력의 감축에 대비하여 동원체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전략 환경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에 부합되는 상부 지휘구조와 부대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第 2 節　防衛力 改善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배분의 변화추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각군 및 전장기능별 전력의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전투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개념 설정과 효율적인 개선방안 구현"이라는 기본방침하에 "21세기에 대비한 自主的 防衛力量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방위력 개선은 상대적으로 전쟁 억제효과가 큰 무기체계 위주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경에 대비한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와 전자전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전력소요 결정체계를 정립하는 등 방위력 개선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장차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전쟁수행개념에 입각한 필수전력소요를 창출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防衛力 改善事業 背景 및 成果

가. 배　　경

우리 군이 최초로 현대화를 위한 탈바꿈을 시작한 계기는 월남전 참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65년부터 파월이 시작된 이후 전투사단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던 1966년에 미국이 "브라운 각서"에 의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비록 제한된 것이나마 방위력 개선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브라운 각서는 공한형식으로서 작성 당시부터 효력과 성격, 시한성 명시 등 내용이 모호하여 그 이행상태가 부진하였다. 즉 구형전차와 "주월 한국군"에 대한 M16소총 지급 등 미미한 방위력 개선효과만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던 중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무장게릴라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이 일어났고, 2일 후에는 동해상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이듬해인 1969년 4월에는 미군 정보기 EC-121기가 북한군에 의해 격추당하는 등의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위기감과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의해 미국 정부는 양국간에 안전보장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방각료급의 연례회의를 갖는 한편, 1억 달러의 군사원조와 함께 M16소총공장 건설을 약속하게 되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위기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自主國防 確立"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더욱 미국이 1969년 7월에 "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3월에는 당시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을 철수시키는 등 미국의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自主國防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한편, 미국측은 우리 군의 월남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선행조치로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년간 15억 9천 6백만불 무상지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이 계획은 종결시기가 1977년까지 연장되면서 당초 목표달성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의 장비 일부가 신형으로 교체되고 월남에서 철수한 "주월 한국군"의 장비도 비록 부분적이었지만 장비 현대화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 방위력 개선사업의 성과

1973년 4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을지연습 '73"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국방부 연습장 순시에서 "自主國防을 위한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증강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1973년 7월 "합동기본군사전략"을 작성하고, 각군에 "군장비 현대화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하였고, 각군의

도표 3-2　　주요 방위력 개선 추진 성과

단위 : 억원

구　　분	1차 율곡('74~'81)	2차 율곡('82~'86)	전력정비('87~'95)
투　자　비 (국방비대비)	3조 1,402 (31.2%)	5조 3,280 (30.5%)	22조 5,797 (33.1%)
추 진 내 용	• 노후장비 교체 • 전방지역 진지 축성 • 고속정 건조 • 항공기(F-4) 구매	• 자주포, 한국형 전차, 장갑차 개발 • 주요 전투함정 건조 • F-5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 전차, 장갑차, 자주포의 양산 •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계획안을 종합한 후 "국방 8개년계획(1974~1981년)"안을 수립하여 1974년 2월 2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자주적인 방위력 개선계획이 확정되었다.

제1차 방위력 개선사업은 197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防衛稅"라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1990년까지 존속시킨 바 있다. 방위력 개선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5년까지 군사력 건설에 투자된 자금의 총 규모는 약 31조 479억원으로 도표 3-2와 같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국방비중 32.2%에 해당된다.(전력증강사업은 "율곡사업", "전력정비사업"으로 명명되어 왔으나 1996년 1월부터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分野別 戰力

가. 지상전력

지상전력은 전략환경 변화, 장차전 양상과 대응전략 개념을 고려하여 입체고속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의 핵심 주요전력과 전투공병장비, 전투근무지원요소 등을 중점 보강하여 기동성을 제고하고, 전력구조 및 부대구조의 개선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동전력은 공세적 기동전 수행을 위해 전방군단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군단 및 보병사단을 기계화부대로 개편하여 공세기동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병사단을 차기보병사단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신형 화기 및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단위전력

을 증강하여 초전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있다.

기갑전력은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전력으로서 1985년부터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우수한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를 생산 배치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단위전력을 보강함으로써 기동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구비해 나가고 있다.

포병전력은 미래의 입체고속기동전 및 화력전에 대비하여 전력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화력지원능력을 강화시키고, 기동성 증대 및 작전반응시간 단축을 위해 기갑, 기계화부대와 상비사단의 포병부대를 단계적으로 自走化하고 있다. 아울러 사격지휘체계를 전산화하고 장거리 타격수단 및 표적획득수단을 확보하여 화력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자주포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격지휘, 탄약운반 장갑차를 확보하고 있다.

공중기동전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다목적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세대 대형 공격헬기, 중·대형 기동 및 소형헬기 등의 신예 헬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야간작전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공탑재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생존성



155밀리 신형 자주포

보장과 작전수행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전투지역내 공중 공간관리와 항공 교통통제를 위하여 항공관제 능력도 점차 향상시키고 있다.

기동지원전력은 작전반응시간을 단축하고 기동성을 보장하며, 전투부대에 대한 근접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갑화, 다기능화된 기동지원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군수지원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긴요물자와 전투예비탄약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정비지원 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수지원시설의 방호력을 보강하여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 지상전력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필수 핵심전력 위주로 국방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며, 상비전력의 제한과 각군별 병력수준의 조정 소요를 감안하여 신규부대 창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전력구조를 인력위주에서 무기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상전력

해상전력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미래의 한반도 전략환경변화에 대비한 입체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수상전력, 수중전력, 항공전력, 상륙전력, 지원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수상전력은 최신예 무기체계와 장비로 무장된 한국형 구축함을 국내에서 건조하여, 1990년대 말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책임해역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대함·대공·대잠 공격능력과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대함·대공 유도탄, 신형 경·중어뢰 등 탑재무기를 병행 발전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1980년대 말부터 잠수함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1993년 6월 해외도입한 1,200톤급 장보고함을 취역시켰고, 최초 국내기술로 건조한 최무선함을 1994년 4월에 취역시켜, 실전배치·운용함으로써 수중작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최신예 무기체계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수중전력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항공전력은 노후 해상초계기 대체전력으로 신형 해상초계기를 1995년에 확보함으로써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원해 해상초계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수상함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상륙전력은 입체고속 상륙작전수행을 위하여 신형 상륙함의 국내건조 및 상륙기



해군의 P-3C

동헬기(UH-60)를 확보하고 1990년대 말까지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도입·배치하여 유사시 해병대의 신속한 전략적 기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원전력은 입체전력의 능력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시설을 갖춘 작전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상전력은 미래 전략환경에 적합한 수상·수중·항공·상륙전력 및 지원전력의 적정 배비로 상호보완 가능한 균형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공중전력

공중전력은 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서 신속성과 융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술기, 지원기 및 각종 작전지원체제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술기 분야에서는 미래전략환경에 적합하면서 즉각 응징과 반격은 물론 육·해군에 대한 신속한 화력지원이 가능한 고성능 항공기를 단계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성능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거리 공격능력을 갖춘 공대공

유도탄과 지·해상 표적에 정밀공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탄을 확보하고 있다.

지원기 분야에서는 주·야간 및 전천후 전술공수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특수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형 및 대형수송기를 추가 확보하고, 노후화된 항공작전 지원전력은 점차 도태시키는 등 미래 작전환경에 적합한 신형 항공기를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다.

훈련기 분야에서는 연간 조종사 양성소요를 충족시키며, 조종사 충원율을 점차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훈련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훈련기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훈련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주적인 공중감시와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할 계획이며, 방공체제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추가 확보하고, 출격횟수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중전력은 미래지향적인 첨단전력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쟁억제능력을 제고하고 영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군의 CN-235 중형수송기

라. 공통전력

공통전력은 첨단 과학화되고 있는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공, 정보·전자전, 통신전력 등 공·지·해 작전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 전력으로서 우리 군은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공전력은 적 항공기, 유도탄 등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중전력과 함께 운용되고 있으며, 북한의 항공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경보전파와 요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비하고 대탄도탄 유도무기와 휴대용 미사일, 단거리 유도무기 등 국지 대공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전자전전력은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력으로서 우리 여건에 부합되면서 최적의 전력으로 보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전술제대의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능력을 1990년대 후반까지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능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통신전력은 적의 전파방해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춘 전술무전기를 배치·운용 중에 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전술통신체계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야전에서 융통성과 생존성이 보장되는 이동형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평시 야전 지휘관들이 전투지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통신·정보 제요소를 통합한 전술 C⁴I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통전력 분야는 첨단과학화되어 가는 미래전장환경에 군이 보다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第3節 國防情報化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분야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군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방체제 전반을 미래 고도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선진 정보화

군"을 건설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까지 사무자동화는 물론 방대한 국방자원의 최적 배분과 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지휘통제를 포괄하는 國防統合 情報體系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사무자동화, 자원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나 전투 근무지원을 위한 부수적 개념의 정보화에서 탈피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 지원, 전장관리, 지휘통제 자동화, 무기체계 지능화 등 새로운 차원의 군사력 건설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情報化 環境 造成

우리 군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별 정보관련사업을 총괄하여 국방정보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방정보체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국방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리 군은 국가사회 정보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직제, 규정 등 제반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95년에 국방부 및 각군본부의 통신, 전산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예하 제대의 조직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정보체계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의 C^{3}I 사업부를 통합하여 1998년부터 군 정보화 전담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산분야 중심의 "국방전산망 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보체계 개념에 입각한 "국방정보체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세부업무 지침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국방 통합정보관리체계 면에서는 연동성, 호환성,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및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1995년까지 30개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그 중 10개의 표준은 초안개발을 완료하여 표준제정에 필요한 심의과정을 밟고 있다. 1996년도의 표준화 사업은 가능한 상위표준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국제·국가표준 등 상위표준 가운데 국방분야에서 수용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여, 이를 국방표준으로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훈련 면에서는 정보화 인력의 체계적 양성,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인 국방관리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훈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무자의 개인용 컴퓨터(PC) 활용에 중점을 두어 왔던 이용자 교육훈련은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소개 등 정보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다양한 정보활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을 관리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관리계층을 중점 교육시키는 이유는 관리계층의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정보화 추진의 실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통신망(LAN)을 기반으로 한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행정관리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국방부 간부요원을 대상으로 국방정보체계연구소에서 실국장급 이상 최고관리자 교육과정과 과장급의 중견관리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군 실무요원교육을 1997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1996년도에 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의 전 요원과 각군 및 기관의 과장급 이상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 情報化 基盤 擴充

우리 군은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통합정보체계 운영에 대비하여 여단 및 전대급 이상 자원관리 단위부대에 주전산기를 보급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PC)는 주요 정책·행정관리 부서의 관리자 1인당 1대, 실무자 2인당 1대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전술제대에는 참모부서당 2대, 중대당 1대를 보급하고 있다. 1996년 말까지 보급될 정보기기 현황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정보기기 보유현황

구 분	주 장 비				초소형 장 비	개인용 컴퓨터(PC)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586	486	386	기타
합 계	201	15	48	138	744	43,492	13,988	9,688	12,450	7,366
국본·직할	46	4	14	28	28	11,153	4,207	3,238	2,327	1,381
육 군	85	5	10	70	715	21,297	6,006	3,820	6,360	5,111
해 군	33	3	20	10	1	4,976	1,404	1,203	1,974	395
공 군	37	3	4	30		6,066	2,371	1,427	1,789	479

또한 우리 군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서 제반 정보자료의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방 전용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선 광역통신망(WAN) 구축은 1995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여단급 이상 부대의 접속을 완료하여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주요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광역통신망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근거리통신망(LAN) 사업은 1995년 말 현재 43개 기관 및 부대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앞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은 정부의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자료의 신속, 정확한 유통을 보장함은 물론 전군 제대간·기능부서간에 실시간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초고속망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단급 이상 주요 제대의 영내 노후회선을 교체하고 근거리통신망(LAN) 설치를 조기에 완료함과 동시에, 전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국가 기간 정보통신망과 군 전용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 應用體系 開發

국방관리 분야의 응용체계 개발은 기획, 인사, 군수, 정보, 작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군 차원의 기능별 통합시스템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자원관리 분야는 1995년까지 총 66억여 원을 투자하여 종합군수지원, 인사종합정보관리, 기지정비관리 등 16개 체계를 개발 운영 중에 있고, 군수통합정보관리, 자원동원통합정보관리, 시설자원통합정보관리 등 12개 체계를 2000년까지 업무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에서부터 보급, 정비 등 군수지원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동안의 업무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탈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광속교역(CALS : Commerce At Light Speed)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장관리 지휘통제분야는 합동참모본부를 정점으로 한 전략, 전술 지휘소 자동화체계,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 공군의 방공 자동화체계 등을 중심으로 일부 시스템을 이미 개발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스템을 확대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수집수단에 의하여 생성된 군사정보를 종합관리 및 전파하는 시스템과 지휘관의 판단, 결심, 통제를 지원하는 지휘통제 자동화시스템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분야는 워게임, 시뮬레이터, 전자모의훈련시스템 등 훈련지원 목적의 다양한 응용체계를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第4節 硏究開發 및 防衛産業

우리 나라는 1969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선언과 1970년대 초 월남의 패망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재래식 병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는 주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재래식 병기를 개량하였고, 일부 고도정밀무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체계개발 중심의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고도정밀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난 20여년 간의 노력의 결과로 고도정밀병기에 대한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재래식 병기에 대한 군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발전하였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은 국방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고용증대 효과,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등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 硏究開發

한 나라의 과학기술 능력은 그 나라의 국력과 직결되며, 바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력의 향상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00년대에 선진 7개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국방분야도 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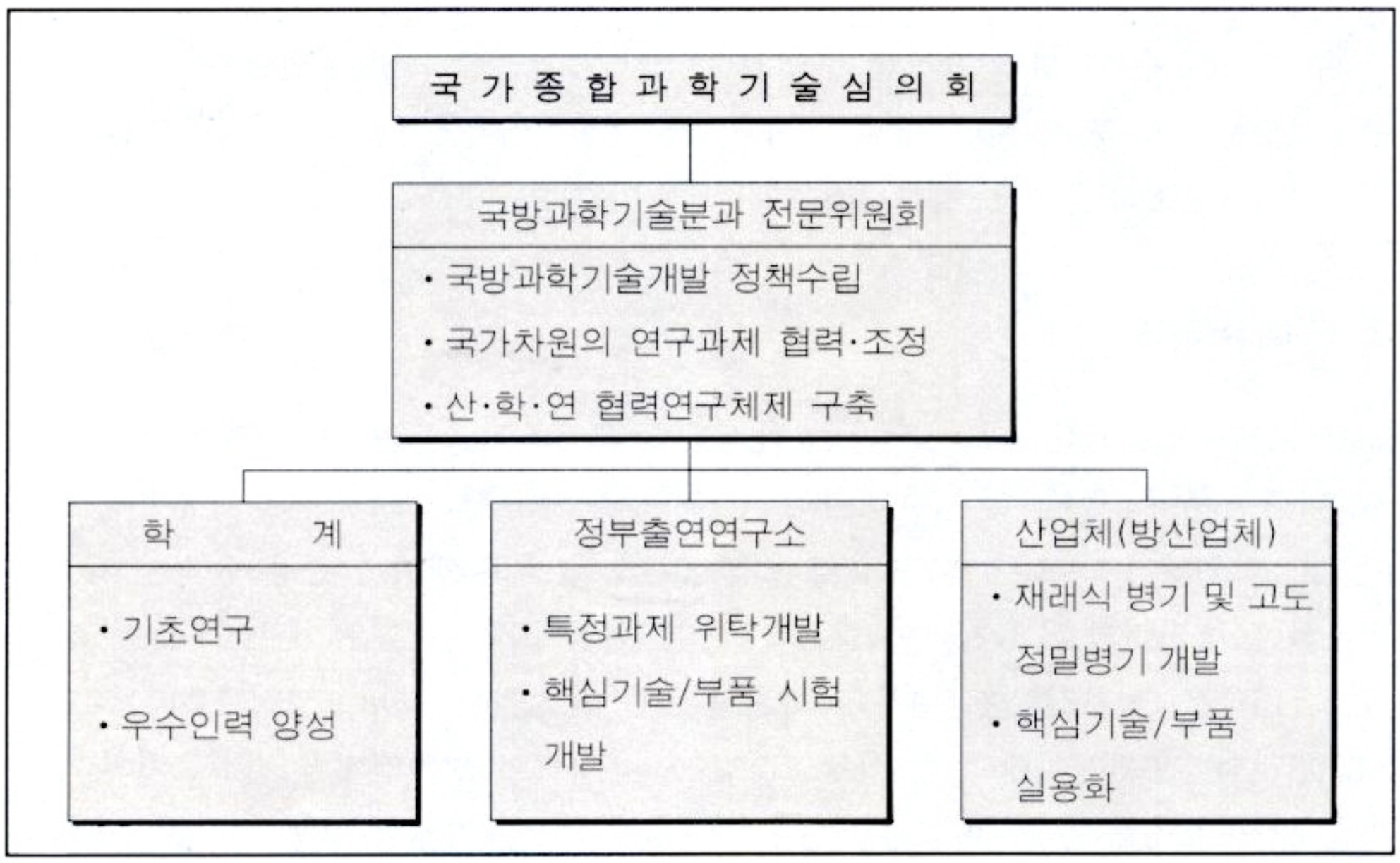
우리 군은 앞으로 소요되는 무기체계는 가급적 해외도입을 지양하고 "국산무기를 사용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하여 무기체계의 장기적인 획득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방자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

중·장기 획득개발계획"을 매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개발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국방과학기술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을 연계한 범국가적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독자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선진화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직구매보다는 기술도입을 추진하며,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기술개발 촉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특히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기관간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국방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회는 정부, 학계, 산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군 겸용 기술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표 3-4　　산·학·연 협력체제



1996년 현재 추진중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22개로서 15개 사업은 정부주도로 수행되고 있으며, 7개 사업은 업체주도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소요제기단계부터 대학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산·학·연 협동으로 105개의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체능력의 신장에 맞추어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업체주도로 확대해 나가며,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학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화연구센터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문분야별로 계속 확대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투자비율 10~15% 수준에는 못미치나 현 3.05% 수준을 1998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군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 기술의 민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 "국방과학기술 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민수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1차적으로 전산지도 정보 및 도시용 소프트웨어 기술 등 12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해 관련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체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기본병기 및 정밀병기의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소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 防衛産業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기술소요, 개발기간의 장기화, 막대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군)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자유경쟁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군 소요물량의 생산완료 후에도 장비의 운용·유지와 전시에 대비하여 생산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일반산업에 비해 많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정부의 보호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으로서 우리 나라는 1973년부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방산업체에 방산물자의 생산과 조달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각종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을 하는 등 방위산업 육

성 및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6년 현재 우리 나라 방산업체는 83개이며, 이 업체들이 319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방산업체 및 물자지정 현황

구　분	계	총포	탄약	기동	통신·전자	함정	항공·유도	기타
방산업체	83	14	10	12	13	5	7	22
방산물자	319	41	92	33	78	18	18	39

최근에 들어 재래식 기본병기류의 소요가 충족되고 향후 군소요 물량이 격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소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방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가 현대화됨에 따라 고도의 첨단정밀무기의 군소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국내 기술수준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시 장기간의 개발기간 및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의한 사업추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전시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필수 기본병기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첨단무기체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재래식 기본병기에 대한 군소요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방산업체의 유휴 생산설비에 대하여는 전시소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유휴설비 유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방산업체는 방산시설의 민수병행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율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전문기술 육성에 중점을 두는 기술중심의 전문화, 계열화된 체제로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방산업체 선정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업체자체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방산업체를 국방연구개발의 주체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체계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품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수기술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방산물자 중 일반화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여 일반경쟁조달로 전환하고, 업체주도의 경쟁연구개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선진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협상단계에서 획득소요기술과 협상조건 등을 확정하여 협상능력을 강화하고 도입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독자적인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시장의 정보를 획득하여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國際防産協力

우리 군은 첨단무기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군의 중장기 방위력개선 소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방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실무분과위원회인 안보협력위원회(SCC),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회의 등을 통해 현안 문제점을 협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물자 및 기술확산 방지정책을 추구하면서 타국으로의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일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방산기술 협력선의 1개국 편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85년부터 협력선을 여러 기술선진국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경쟁을 통해 가격, 기술이전 등에서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변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방산물자의 수요가 점차 감소되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방산능력 확보와 최소한의 가동률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해외수출의 확대를 통하여 신규소요를 도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방산물자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선진방산기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1996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과 방산·군수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 독일 등 5개국과는 협정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第 5 節　豫備戰力 管理

장차 예상되는 전쟁양상은 국가총력전으로서 속전속결에 의한 대량소모전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시 상비군을 증강하고 전쟁물자를 충분히 확보·비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국민경제 여건 및 국민생활 편익을 고려할 때 무한정한 군사력의 확보 유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정수준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상비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 국가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전 즉응태세를 완비하고 전쟁지속 역량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豫備軍 資源管理 效率化

예비군은 전시동원에 대비하고 향토방위의 핵심조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예비군 자원수의 양적 증가, 國民情緖 등을 감안하여 예비군 규모, 조직편성, 교육훈련 등 예비군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동원소요를 재판단하여 자원을 정예화시켰고, 현역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이 불균형했던 것을 일반하사 및 병의 경우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전역후 8년을 복무토록 하는 예비군 복무제도를 연한제로 개선하였다.

둘째, 예비군 지휘관의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선발과목을 조정하여 선발시험의 효용도를 제고시켰으며 전보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추세에 맞추어 직장중대장의 근무상한 연령 및 직장대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융통성을 허용함으로써 직장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본인의 향후 진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예비군 신규편성 신고대상자의 편성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군복무 후 전역 또는 소집해제시 소속부대장이나 기관장 책임하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예비군 대원 편성여부를 전화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2. 豫備軍 敎育訓練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향토 방위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현역 수준의 개인 전기·전술 수준 유지와 전시 개인 및 부대임무 숙달"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은 도표 3-6과 같다.

도표 3-6 199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계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	일반 훈련	향방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1~4 년차	동원훈련 참가자	100	26 (2박3일)				4	70
	동원훈련 미참가자	100		32 (4일)			4	64
5 년차		68			8	12		48
6 년차		68				12		56
7 ~ 8 년차		68				6		62
간부 (7년차 이내)	동원훈련 참가자	100	26 (2박3일)				4	70
	동미참 장교	100		26 (2박3일)			4	70
	동미참 하사관	100		32(4일)			4	64

* 단, 면지역의 동원훈련 미참가자는 예비군 지휘관리부대장 판단하에 동원훈련 미참가자훈련 시간에서 향방훈련 2회를 실시할 수 있다.

1996년에는 부대임무 및 지역 특성에 부합된 훈련실시방안을 정립시켰고, 제대별 2차 상급지휘관에 의한 현장 위주의 훈련준비 사열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지휘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훈련준비로 예비군 교육훈련 내실화에 완벽을 기하였다. 또한 훈련기강을 확립하고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범 및 세미나를 통해 이를 주과제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병력통제기법과 사고 안전장치를 발전시켰다. 나아가서 예비군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훈

련장 구조 및 시설물의 현대화와 훈련단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전원이 동시에 순환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원훈련은 해당소집부대에서 2박3일간 훈련을 통제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대 유형별로 대대 단위 또는 2개 중대 단위로 훈련규모를 분할하여 전시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과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단위 직책 수행훈련, 작계 수행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은 전시 기본임무 및 향방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신분별, 병과별 주특기 위주훈련과 개인전기 전술 훈련강화에 중점을 두고 32시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해·공군 출신 동원훈련 미참가 장교들에 대한 부대소집교육을 예비군 지휘관리 부대에서 2박3일간 해당부대인 해·공군부대에 입영하여 훈련토록 개선·발전시켰으며, 예비군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동원훈련 미참가자 교육대상자들에게 중식비를 지급하였으며, 1997년에는 이를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및 향방훈련은 향방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도로견부 위주 종심방어 훈련 및 공세적 후방지역작전 능력배양, 현역부대와 통합된 작계 시행능력 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일반훈련 8시간은 향토방위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향방훈련은 신분별, 연차별로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6년도에는 동원훈련 미참가자훈련 대상자인 1~4년차 미지정 자원을 읍·면 지역의 경우 예비군 지휘관리부대장 판단하에 향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향방작전 가용자원이 부족한 읍·면 등 농촌지역의 향방작전 가용자원이 부족한 읍·면 등 농촌지역의 향방작전 태세확립에 내실을 기하였다.

3. 動員態勢 確立

국방환경에 부응하는 동원체제는 평상시 적정규모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다가 유사시에 부대를 확장하여 총체전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예화된 예비군의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예비전력이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발휘가 가능하도록 평시부터 즉응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동원 실현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군은 동원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병력동원 지정 측면에서는 병의 경우 4년차 이내의 최신자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주특기를 세분화하여 특기 적소율을 향상시켜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증편요원과 전시

연합작전부대의 필수 소요인원은 연합작전이 가능한 어학자원 및 연합작전부대 유경험자로 지정하여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즉응 동원태세 확립면에서는 동원속도 및 실효성을 보장키 위하여 병력동원 지원부대와 동원자원관리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병력동원 호송방침을 개선함으로써 수송 및 호송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동원 워게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전 즉응 동원능력을 검증하고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개전초기 확장부대의 동원 실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초전대응 능력을 강화시켰다. 즉 서울에 편중되어 있던 동원병력을 수도권 신도시지역으로 조정하고, 전방군단은 임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지역을 확장, 조정함으로써 복잡한 서울도심 통과와 한강도강 소요를 최소화시켜 전시 초기단계의 병력동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예자원 지정률을 향상시켰다.

동원문제는 정부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정례적인 협의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물자동원의 경우는 국방부가 소요자의 입장인 만큼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실질적인 동원태세가 구축되도록 다음과 같이 동원계획, 동원훈련 등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긴급단계만 동원지정하던 것을 초기정상단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시동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유사시 효율적인 물자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관계기관별로 전시대비 동원계획을 작성, 발전시키고 있다. 1996년도에도 전시대비 물자동원계획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원에 대한 동원지정 및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모든 물자동원계획의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자원 소요자 입장에서 동원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전시상황에 적용 가능한 동원계획을 작성하고 동원지정자원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며, 구형장비는 신형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물자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원자원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동원대상 장비에 대한 동원훈련을 가능한 정부종합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여 훈련횟수를 줄임으로써 대상장비를 보유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동원자원을 소요제기에서부터 소요배분 및 자원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는 산업동원분야 업무를 전산화하고 1997년 이후에는 나머지 수송·건설·통신 동원분야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원의식 함양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第3章 韓·美 安保協力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냉전시대를 통하여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과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공통의 전략목표와 국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동맹관계는 우리 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기존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第1節 相互防衛條約 및 協定

한·미 안보협력체제는 1953년에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1966년 7월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1968년부터 실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1978년 11월의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 그리고 1991년 11월의 전시지원협정 등에 의해 상호지원적 협력체제로 제도화되었다.

1. 韓·美 相互防衛條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본틀로서, 우리 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이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고, 본문 제3조에는 피침시 각각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 제4조에서는 미국이 우리 나라 영토 내와 그 부근에 군대를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를 두고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이듬해인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行政協定"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협정은 전문과 본문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의 우리 나라내 주둔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시설, 출입국 관리, 통관과 관세, 형사재판권 등 양국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91년 2월에는 동 협정 내용 중 특히 차별적인 성격을 내포한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공한을 폐기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및 군속의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할문제를 중심으로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은 협정 내용 중 차별적인 요소의 개정교섭에 합의하여 한·미 양국 담당부처간 개정 협상이 1995년 말부터 진행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국방부는 불평등 요소의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상에 참가하면서, 국방부 소관인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관련조항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戰時支援協定

전시지원협정(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장기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미군 증원부대가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둠으로써 증원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와 배치를 촉진하고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전시지원협정은 지난 1985년 제1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이 제의하여 1991년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199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동년 12월 23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도착, 이동 및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협정으로서, 미국은 유사시 증원

군을 파견하고 우리 나라는 미국의 군수부대가 전개 및 배치될 때까지 가용자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군을 지원하며, 그 비용은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분담하고,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토의 발전시키며, 전시지원 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996년 3월 18일 한·미 양측은 이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운영내규에 서명하였다.

전시지원협정의 체결은 미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전시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위한 정치·군사적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유사시 미국은 전투병력 위주의 증원군을 신속히 전개 배치하고 우리 나라는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나라는 미국에 대해 전시에 대비한 긴요물자의 사전비축 확대는 물론 물자 및 병력의 수송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第2節 韓·美 聯合防衛體制

1. 韓·美 安保協議會議

한·미 양국은 1968년부터 매년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하고 있다. 1968년 1·21사태 및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같은 해 4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양국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5월에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971년 2월의 제4차 회의 때부터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바꾸어 외무부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안보차원의 회의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까지 모두 28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군 주요인사와 외교관계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공동 안보 관심사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간 안보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정책검토

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실무분과위원회는 도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표 3-7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구 분	기 능	공동위원장	
		한 측	미 측
정책검토위원회	• 양국 국익에 민감한 정책문제 중점 토의 • 고위 실무차원의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장관회담 보좌 • 타 실무위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의제 협의(필요시)	정책실장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안보협력위원회	• 안보지원분야 협의 (FMS, 로얄티 문제 등)	2차관보	안보지원본부장
군수협력위원회	• 군수협력분야 협의	군수국장	국제사업담당 부차관보
방산·기술협력위원회	• 방산·기술협력분야 협의 • 첨단 군사과학 기술자료 교환	획득개발국장	국제사업담당 부차관보
공동성명위원회	• 공동성명서 작성	외무부 1차관보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최근 한·미 안보관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안보협의회의의 성격과 기능도 발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이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거나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계획에 대한 지원약속을 공표하는 등 선언적 역할에 의의를 부여했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점차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 북한 핵문제, 작전통제권 이양, 방위비분담 등 한·미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발전되고 있다.

2. 韓·美 軍事委員會

한·미간의 군사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주재하에 군사위원회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는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하여 한·미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한·미 군사위원회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 및 과업을 부여한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설회의로 구성되며, 본회의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양국 의장이 지명한 각국 대표 각 1명,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 5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앞서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곧이어 열리는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한다.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한 주한미군 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관련한 군사 현안을 협의한다.

3. 韓·美 聯合軍司令部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1977년 7월 26일에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TOR : Terms of Reference)"과 1978년에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1호에 근거를 두고 같은 해 11월에 창설되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포함한 사령부 구성요원을 한·미간 동률 보직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그 예하에 지상군, 해군, 공군의 구성군 사령부 등을 두고 있다.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과 더불어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 역시 우리 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6·25남침전쟁 당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지정된 우리 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지정된 우리 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나라 합참의장에게 환수됨에 따라 평시에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우리 나라 합참의장이 위임한 사항(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대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94년 한·미 양국의 군사당국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으로 재작성하였으며, 군사위원회는 전략지시 2호를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하달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수행할 새로운 임무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권한은 종전대로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며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응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별도의 창설근거를 갖고 있는 별개의 법적 군사기구이다. 즉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한·미간 쌍무협정에 의해 설립된 군사기구이고, 유엔군사령부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군사기구로서 부여된 임무 및 지휘계통, 작전통제 부대가 상이하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 지원 및 협조관계이나 정전업무에 관하여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침투, 습격, 혹은 각종 공격행위 등 북한의 도발은 일차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서 이는 곧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즉각 저지할 대응수단(전투력)을 갖지 않는 유엔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은 동일인이며,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참모 중 일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로 임명되어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수석대표, 미국대표, 한국대표, 영국대표, 참전국 대표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정전 이후 계속 미군 장성이 보임되어 운영되었으나, 한·미군간 역할 변경의 일환으로 1991년 3월 25일 이후부터 한국군 장성이 보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기존의 참전 16개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 8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연락단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후방지휘소는 일본내 유엔군사령부의 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도 콜롬비아를 제외한 위의 7개국과 뉴질랜드 대표가 파견되어 있다.

第3節 主要 韓·美 安保懸案

1. 韓·美 聯合防衛態勢 強化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통하여 우리 나라 안보의 기본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적 수단인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자국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정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중복노력을 지양하기 위하여, 미국은 평시에 초전대응 필수전력의 점차적인 보강과 유사시를 대비하여 해·공군 전력 중심의 우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증원전력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한·미 연합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한 취약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을 보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2개 주요 분쟁지역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현대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 증강(FE) 및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 등 증원전력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의 주한미군 현대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M1IP 전차를 M1A1 전차로, 2개의 코브라 헬기 대대를 아파치 헬기로 교체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패트리어트 포대를 배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첨단 및 최신예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 방위를 위한 전력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나라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시현한다는 상징성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현대화에 소요되는 시설을 방위비 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합전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미 증원전력의 적절한 전개

능력이 연합방위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북한 위협양상에 따른 초전 필수전력이 최단 시일 내에 전개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수송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우리 나라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防衛費 分擔

우리 나라는 한·미 동맹관계가 형성된 이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우리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하여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는 물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혜택 제공, 인력지원 등을 해 왔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의 일환으로 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배치될 경우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는 자국군 사용분은 자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운영비 등을 부담해 왔고, 미국의 원활한 안보지원과 방산기술협력을 위하여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대한 운영유지비를 지원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합방위증강사업 비용을 증대시키고 전쟁예비물자 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9년에 4천5백만 달러, 1990년에 7천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1991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하여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시설유지 비용의 일부를 새로이 지원함으로써 미군주둔비용 지원성격의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방위비 분담은 199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합의사항인 주한미군 현지 발생비용 분담(WBC)방식에 의거, 1991년에는 1.5억불을 부담한 후 매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액해 왔으며, 중기 분담 목표년도인 1995년에는 현지 발생비용 9억불의 1/3인 3억불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분담 목표액의 합의는 우리의 경제력 발전에 상응한 일정수준의 미군주둔비용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매년 협상을 통해 분담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 발생비용 분담방식은 현지 발생비용에 대한 범위 한정 및 실사곤란으로 인해 매년 분담금 산정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은 물론, 장기적

으로는 미군주둔비용의 2/3 또는 전액부담을 전제한 것으로 분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자동적인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995년 11월에 개최된 제2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기존의 현지 발생비용 분담방식을 종결하는 한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한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통해 일정지표(Index) 분담방식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국내물가상승률과 실질증액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하였는바, 1996년에 3.3억불을 부담하였으며, 1997년에는 3.63억불, 1998년에는 3.99억불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합의는 대북 경수로 비용부담, 식량원조 등 총체적인 안보비용의 증대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 수준의 분담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분담금 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등 한·미 동맹관계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은 도표 3-8과 같다.

도표 3-8 1991~1998년 방위비 분담현황

단위 : 억불

연 도	현지발생비용(WBC) 분담방식					일정지표(INDEX) 분담방식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분담금	1.5	1.8	2.2	2.6	3.0	3.3	3.63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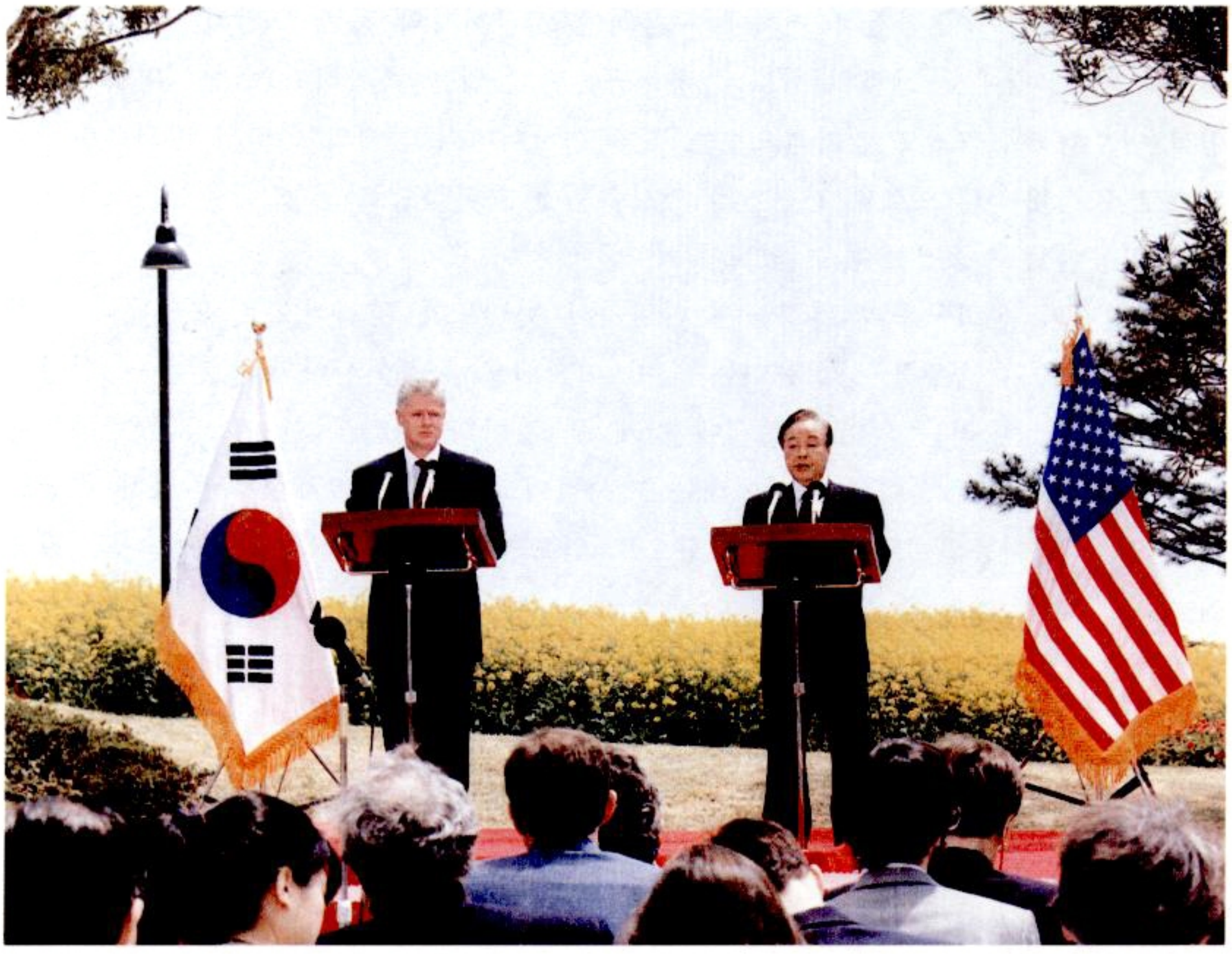
방위비분담금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4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부분으로서는 연합방위증강사업과 전쟁 예비물자관리, 장비정비 등 군수지원 사업들에 사용되고 있고, 미군 주둔비용 부담부분에서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의 일부 부담과 주한미군 전력유지에 긴요한 전투요원의 막사, 소방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건설과 시설유지비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의 방위비분담은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우리 나라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우리 나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의 이익이 일치되는 적정수준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第 4 節　韓·美 安保協力 發展展望

지난 40여 년 동안 한·미 안보협력의 제1차적 목표는 냉전적 대결구조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의 안보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한·미 안보협력 관계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군사위협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 나라와 대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직접적인 군사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구도하에서 안보협력을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구상에 따라 점차 우리 나라 주



제주 한·미 정상회담(1996. 4. 16)

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체제의 전환도 한·미간의 전략적 상호보완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국간 전통적 우호동맹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단계적, 신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양국은 현재와 같이 남북대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북 연합억제력 유지에 주안을 두면서 현행 연합방위체제 내에서의 우리 군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고 남북 평화공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한·미 안보협력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비군사적 대북교류협력의 촉진 등 통일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고 남북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되는 시점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한·미간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형을 검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금까지의 북한 도발의 억제에 중점을 둔 군사동맹에서 점차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평화통일지향적 안보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 차원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전환기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함은 물론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평화공존 나아가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을 성취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차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안보협력의 기조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第 4 章　對外 軍事交流 協力

대외 군사교류 협력이란 외국과의 군사교류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 협력분야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군사적 성격의 제반 대외활동을 의미한다. 냉전종식 이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교역, 문화,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외교정책 5대 기조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와 다변화, 지역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군사분야에서도 대외 군사교류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第 1 節　軍事友好關係 增進

1. 善隣友好協力關係 發展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 수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군사외교 관계를 수립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는 주변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기존 군사외교 관계를 축으로 하여 주변국 및 여러 우방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1994년 4월에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후 이들 국가의 국방장관도 1995년에 방한하여 양국 군사지도자간 안보관련 관심사를 논의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이미 세 차례의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류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실무자의 수시 교류와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의 교환방문, 우리 나라 국방대학원과 일본 방위연구소 간의 교육

교류 등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군용기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서한을 교환하였다. 향후에도 일본과의 군사관계는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러시아와도 국방장관회담시 합의한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토대로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을 비롯한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양국간의 군사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과는 주중 한국무관부('93. 12월)와 주한 중국무관부('94. 4월)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공식적인 군사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 양국 국방정책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양국간 안보분야에서의 점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주변국과의 군 지도급인사 상호방문 등 군사적 우의를 다지면서 호혜적인 군사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관계와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지역안정을 이루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軍事交流 協力 多邊化

우리 군은 기존의 우방국들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6·25남침전쟁 참전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도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세계평화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현재까지의 정치·경제 분야 교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군사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의 군 주요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의 관계증진 노력이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최근 국교수립이 이루어진 인도차이나 제국과의 관계도 중요시하는 교류협력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서부유럽 지역의 국가들과는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토대로 각종 군사교류 및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사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며, 동부유럽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을 비롯한 각종 친선교류활동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지역과 서남아시아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지금까지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공동 이해관계 부족으로 타 지역국가들에 비해 군사교류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앞으로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아랍 제국간의 화해분위기 정착에 부응하여 균형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점진적으로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협력 관계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타 지역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나 지구 공동체적 세계화 시대의 전개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중·남미지역 5개국을 순방함에 따라 서남아시아지역, 중·남미지역과의 포괄적인 관계증진 기반을 조성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군사우호협력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地域 安保協力 參與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사적 대립관계와 다양한 갈등요인에 따른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내 갈등이나 위기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역내국가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면서 지역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아세안지역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과 같은 범지역적 안보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태지역의 유일한 역내국가간 정치·안보문제 대화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은 북한 핵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다자안보외교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 우리 나라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구상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아세안지역포럼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능동적인 안보외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다자간 안보대화의 활성화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한반도 전쟁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외교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다자안보대

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의 국방분야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第2節 유엔平和維持活動 強化

우리 나라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소말리아 공병부대와 현재 활동 중인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에 이어 세 번째로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구호 및 재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북 대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인도적 차원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우리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불과 5년 만에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지 정부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통해 유사시 우리 나라에 대한 지원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는 안보적 의의 또한 크다.

1. 유엔平和維持活動 現況

가. 평화유지군(PKF) 및 군 감시단(MO) 활동

평화유지군은 유엔의 지휘하에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부대단위로 파견되어 분쟁의 확대 방지와 평화조성을 위해 무장해제, 분리 등의 임무와 국가재건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93년에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여 도로공사, 관개수로공사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4년에 서부사하라에 국군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중앙진료소 1개소와 전방진료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에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교량건설 등 국가재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군 감시단은 주로 정전위반감시, 중재, 협상, 순찰 및 조사활동을 통해 분쟁의 재발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교단으로서, 1994년 10월 그루지야에 최초로 장교를 파견한 데 이어 동년 11월에는 인도-파키스탄 접경의 캐시미르 지역에 유엔평화유지활동사령부 부단장 요원을 포함한 장교를 파견하여 현재 임무수행 중이다.

도표 3-9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현황

지　　역	부 대 / 인 원	기　　간	교대주기	비　　고
소 말 리 아	공병대대 252명	'93. 7. 31~'94. 3. 18.	6개월	완료/철수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42명	'94. 9. 6~'96. 8.	〃	현행 참여 (서부사하라, 앙골라 참여 부대 교대 예정)
앙 골 라	공병대대 198명	'95. 10. 4~'96. 9.	〃	
	사령부참모 6명	'96. 2. 28~	1 년	
그 루 지 야	군 옵서버 6명	'94. 10. 6~	〃	
인 · 파	군 옵서버 9명	'94. 11. 20~	〃	

한편 1996년 2월에는 앙골라 유엔평화유지활동사령부에 참모요원을 파견하여 현지 평화유지군에 대한 교육훈련 조정·통제, 공병지원,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병부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모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은 도표 3-9와 같다.

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상비체제 참여

유엔은 평화유지군과 군 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Stand-by Arrangements)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상비체제는 유엔회원국이 인원, 장비, 서비스 등 참여 가능한 자원을 평화유지활동용으로 사전 지정하여 유지하다가 유엔 요청시 조속한 기간 내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는 1995년 3월에 도표 3-10과 같이 동 체제의 6개 분야에 800여 명의 규모가 참여 가능함을 유엔에 통보한 바 있다. 향후 유엔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시의 국내외 안보여건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여 선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도표 3-10　　상비체제 참여부대 규모 및 형태

- 보병 1개대대(540명)
- 중건설 공병 1개중대(130명)
- 의료지원단(70~80명)
- 폭발물처리 2개팀(11명)
- 해난구조원(10~15명)
- 군 옵서버(36명)

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기반구축

우리 군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외 평화유지활동 교육훈련체제를 정립하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국내교육은 1995년부터 국방참모대학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와 평화유지활동 요원에 대한 교육, 국제기구 및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오랜 경험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종 자료를 축적함은 물론 인터넷에 가입하여 유관 국가들간에 평화유지활동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내외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로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평화유지활동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유지활동 해외연수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연수 현황은 도표 3-11과 같다. 1993년 이후 북구국 유엔 교육대(UNTC)에 장교를 파견하여 군 옵서버 및 참모요원 위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1995년에 한국-캐나다 간에 군사교류협력의 체결을 계기로 캐나다 피어슨 평화유지교육원(PPC) 및 폴란드 평화유지활동교육원에도 연수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파견교육을 확대하고 연수국가도 다변화하였으며, 1996년에는 총 13개과정 14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 평화유지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여, 타국 장교에게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이는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대유엔 업무효율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1995년 3월에 유엔본부의 평화유지활동 사무국 요원을 파견하였으며, 날로 증대되는 유엔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내 군사 자문을 위해서 1996년 8월에 군사담당관 1명을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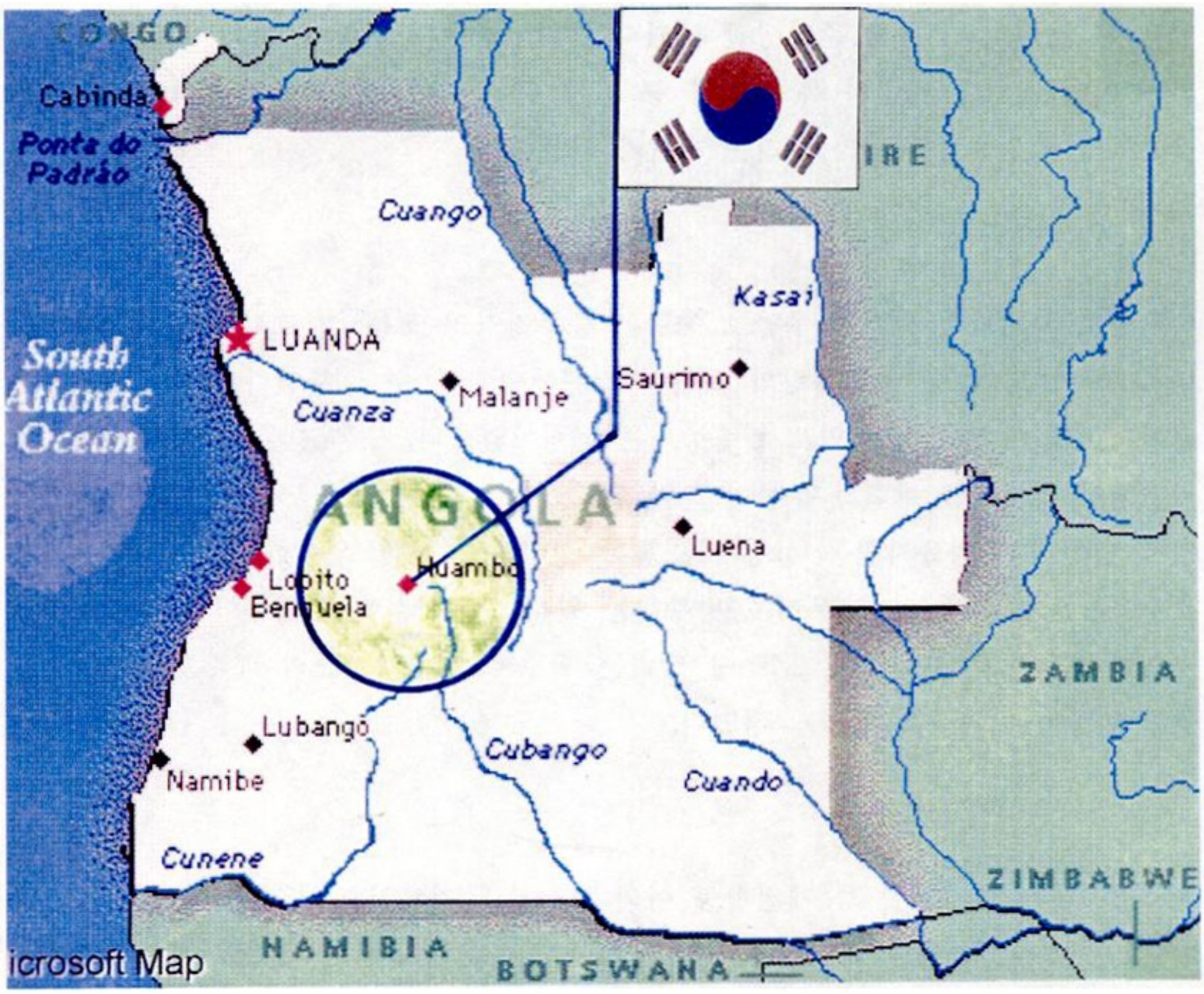
도표 3-11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연수 현황

연수국가		과정명(기간)	연도	인원
북구국 유엔 교육대 (UNTC)	핀란드	군 옵서버 과정(3주)	'93~'95	8
	스웨덴	참모과정(3주)	'93~'95	4
	노르웨이	군수과정(3주)	'93~'95	2
캐나다 평화유지교육원 (PPC)		단기과정(2주)	'95~'96	13
		참모과정(10주)	'95~'96	2
폴란드 교육원		옵서버/참모과정(2주)	'96	1

2. 앙골라 工兵部隊 活動相

앙골라는 1974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20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가이다. 또한 내전기간중 양측에서 매설한 지뢰가 국내 전역에 걸쳐 1~2천만 발로 추정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 있어 임무수행 여건과 자연환경이 그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우리 공병부대 1진 198명은 1995년 10월에 앙골라에 파견된 후 6개월 동안 지뢰 및 풍토병의 위험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교량건설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유엔 및 현지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주요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앙골라에서의 유엔평화유지 활동

가. 교량 복구공사

앙골라 중부 최대의 도시이며 정부군과 반정부군간의 최대 격전지였던 우암보 일대는 대부분의 교량이 완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현지 유엔작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앙골라 평화유지활동사령부(UNAVEM Ⅲ)에서는 교량건설 능력이 우수한 우리 공병부대에게 파괴된 교량을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공병부대는 우암보 시내에 주둔지를 설치한 후 본국에서 휴대한 장비와 교량복구 자재를 이용하여 4개월에 걸쳐 치피파(CHIPIPA), 난뎀바(NANDEMBA), 꾸이마(CUIMA), 쿠안도(CUANDO) 등 4개의 교량을 복차통행이 가능한 반영구식 조립교로 건설하였다. 그 결과 앙골라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고, 내륙과 해안을 잇는 보급로가 개설되어 전후복구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을 위한 작전수행을 원활케 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생활에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였다. 특히 100미터 길이의 꾸이마 교량은 앙골라 복구 교량 중 가장 긴 것이며, 이 교량 건설을 통해 우리 공병부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 우암보 공항 보수공사

우암보 시외곽에 위치한 우암보 공항은 중부지역의 교통요지로서 내전 전에는 하루 2,300여 명의 승객과 다량의 화물이 서부해안이나 수도 루안다로부터 정기항공편이 연결되어 앙골라 전역으로 수송되는 공항이었으나, 공항 활주로 및 부대시설이 파괴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암보 공항 보수공사는 공항 관리공단에서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사령부를 통해 장비와 기술이 우수한 우리 공병부대에 보수공사를 요청해 왔다. 우리 공병부대는 원래 교량건설이 주임무이나 공항보수도 주요한 활동으로 판단하여 2.4㎞에 달하는 활주로 보수와 1㎞의 배수로 신설 등을 통해 항공기 이착륙을 원활케 하였다.

다. 사랑의 학교 운영

공병부대는 교량건설 등 재건활동 이외에도 부대 자체적으로 각종 대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내란으로 완전 마비된 교육기능을 부활시켜 국가의식과 자립의지를 일깨워 주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우암보 지역의 10~15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학, 산수 등 학교교육과 용접, 배관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랑의 학

교를 개설하고, 간이교육장을 신축하여 학교 비품의 제작과 학용품, 의류 및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현지 고용교사, 부대 통역관, 대대 간부들이 분야별로 교육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학생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물론 우리 나라와 앙골라 국민간의 사랑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사랑의 학교가 앙골라 국영 언론매체와 앙골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사령부의 공보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나라는 앙골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국 중 유일하게 현지주민에 대한 계몽교육까지 실시하는 인도주의적이고 모범적인 활동국가로 평가받았다.

라. 기타활동

공병부대는 이외에도 "희망의 샘"으로 명명된 공동급수장을 개발,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였으며,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구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성 프란체스카 전쟁 고아학교에 유엔에서 제공되는 빵과 우유 등을 모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고, 유엔 본부에도 보고되어 유엔과 현지 사령부 당국으로부터 감사서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앙골라 민속의 날을 맞아 공병부대는 "한국의 날"을 정하여 한국문화와 전통을 여타 평화유지활동 참여국 장병과 현지 주민에게 소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태권도, 특공무술 시범과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인 사물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등을 선보임으로써 한국문화를 처음 접한 현지인들과 평화유지활동 관계 요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바 있다.

마. 앙골라 공병부대 활동성과 및 교훈

우리 공병부대의 앙골라 파견을 통해 얻은 두드러진 성과는 주임무인 교량건설 외에 도로보수, 공병지원, 다양한 대민 지원활동 등을 통해 유엔 및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사령부로부터 우수 활동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국위선양에 획기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3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이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모델로 칭송받고 있듯이 우리 나름의 평화유지활동의 모델을 정립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앙골라 공병부대의 그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은 유엔 활동수칙에도 나와 있

듯이 분쟁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적 활동이 임무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더욱이 공병부대가 교량건설 임무를 수행한 지역이 대부분 반정부군(UNITA)의 관할지역이었지만 우리 공병부대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 하나의 교훈은 안전확보를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공병부대의 안전에 최대의 위협요소는 앙골라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수천만 발의 지뢰였다. 이를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국제 지뢰제거 전담기구에 의한 지뢰 탐지 및 제거, 현지 고용인을 통한 2차 정밀탐색, 그리고 부대 자체 보유장비를 이용한 확인탐색 단계를 거침으로써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向後 政策方向

우리 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대단위 활동, 참모 및 옵서버 활동, 전문가 양성활동 등에서 질과 양적인 면에서 눈부신 향상을 가져왔다. 유엔은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평화유지활동으로 국제사회에 보다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가 남북대치의 어려운 안보여건 속에서도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과거 유엔의 수혜국으로서 당연한 도리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 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내외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국제적 공조체제 유지와 평화애호국으로서 국제적 고통분담과 위험분담 차원에서 능력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의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유엔평화유지활동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정책 및 실무 수준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第5章 軍 備 統 制

오늘날 국제사회는 신세계질서의 대두와 함께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과 공동안보를 지향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대결구도를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긴장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간다는 명제하에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 군비통제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第1節 軍備統制 環境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공동안보를 지향하면서 최소의 안보비용으로 최대의 안보효과를 겨냥한 군비통제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군비통제 활동은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핵·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방지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1995년 5월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이후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CTBT) 협상이 1996년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1997년부터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1996년 5월에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의 제2부속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지뢰·부비츄랩 등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도 엄격하게 제한·통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군비통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아직도 군 현대화라는 명분하에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토분쟁을 포함한 지역갈등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군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태지역 내에도 다자간 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의 분위기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즉,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 확대외상회의(ASEAN-PMC), 동북

아협력대화(NEACD) 등 다양한 안보협력·대화 채널을 통하여 역내 공동안보 및 군비통제의 여건조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군비통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는 지난 50년간의 분단과 냉전적 대결구도하에서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누적·심화되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동서 냉전구도가 완전히 해체된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서보다는 타도와 적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군비증강과 위기조성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무모한 군비경쟁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개방·개혁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도 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第2節 南北韓 軍備統制

1. 政策目標

남북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 평화공존체제의 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칙하에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직접 대화와 쌍무협상을 통하여 실현한다.

둘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先신뢰구축 後군비축소 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셋째,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토록 한다.

2. 南北 軍備統制 基本方向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로 이어지는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 구조하에서는 "군사적 신뢰"부터 구축하여 그 동안 분단상황하에서 누적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투명성 제고, 불가침 보장체제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대책의 제도화 등을 이룩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 군사직통전화 설치, 공동위기관리제도 확립, 정전협정 준수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및 참관, 군 인사교류 및 군사정보 교환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평화공존 상태로 진입하면 "군비제한" 단계로 접근하여, 남북간 군비경쟁 중단, 기습공격 능력의 제한, 군사력 운용의 상호 조정·통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화생무기·장거리 유도무기 통제, 기습공격용 무기의 제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제한, 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되면 "군비축소" 단계로 이행하여 남북한의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사력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3. 軍備統制 關聯 南北間 提議 및 合意

가. 남북 제의의 사례

휴전 이후 남북한은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의를 해 왔다. 북측은 "先군비축소 後신뢰구축"의 원칙하에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병력의 대폭 감축, 미·북 평화협정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등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것, 남북한 병력을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할 것, 그리고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등을 제의한 바 있으며, 1984년에는 "先 미·북 평화협정 체결, 後 남북불가침 선언 채택"을 주장하였다.

그 동안 북한당국이 되풀이해 온 군축제의의 저의를 분석해 보면 첫째, 북한이 주

한미군 철수를 한반도 군비통제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주한미군을 대남적화 전략수행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병력의 대폭적인 감군제안은 우리 나라 내에 감군분위기 및 군축여론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을 억제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평화애호국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남북평화협정 대신 미·북평화협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와해를 유도하여 대남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장 역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에 그 저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까지 북측의 이러한 선전성 제의에 일체 대응하지 않다가, 1970년대부터 '先신뢰구축, 後군비축소'라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남북간 불간섭·불침략을 천명하였고, 그 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남북간 상호무력 불침범·내정불간섭·정전협정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군 인사 상호교류, 군사정보의 상호 공개, 주요 군사훈련의 통보·참관, 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의 완전철거 등 신뢰구축 방안을 제의하여 "신뢰구축 → 불가침협정 → 군축협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한반도 군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이행실태

1980년대 말 이후 범세계적 탈냉전 해빙무드가 한반도에까지 파급되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남북한 사이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1988년 12월 28일 우리 정부는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하여, 1989년 2월부터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90년 9월 5일에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후 2년 동안에 걸쳐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 12. 10~13)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부로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제6차 고위급회담('92. 2. 18~21)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제8차 고위급회담(1992. 9. 15~18)에서는 "불가침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아울러 남북한은 상호 군비통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비핵화공동선언" 제5장의 규정에 의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에 따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그 후 여

러 차례의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을 거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말 북측이 우리의 '93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모든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이 기구들에 의한 남북간 대화가 오늘날까지 중단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이것 역시 제8차 접촉시 북측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김일성이 카터 前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수락하고, 남북간 실무대표 접촉을 통하여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남북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으로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북한도 언젠가는 남북간 군비경쟁 중단과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남북대화에 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韓半島 停戰體制 維持 및 平和體制 構築問題

가.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기도

북한은 정전협정체결 이후 1970년 초반까지는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개최된 일련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력 성장을 인식하고 상대적 열세를 느끼면서부터 한국과의 대화와 접촉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정전협정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실화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1991년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북한은 체코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자격 승계문제를 구실로 1993년 4월 3일 체코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1994년 4월 28일에는 북한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스스로 철수시킨 데 이어 5월 24일에는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고, 12월 15일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중국대표단이 본국으로 소환되었으며,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도 강제 철수시켰다.

북한은 이러한 정전협정관리기구의 무실화 기도와 더불어 미·북 군사접촉을 위한 미·북 장군급회담 요구('95. 3. 2),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및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의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 출입금지조치('95. 5. 3), "정전협정 파기선언 불사" 위협발언('95. 6. 22),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95. 6. 29, 북한 외교부 비망록), 미·북 장군급회담에 대한 미측 수락 촉구('95. 7. 5) 등의 도발적 언동을 지속해 왔으며, 또한 고의적인 군사분계선 월선행위, 군사분계선 수목 절단시도 등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 등을 통한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 "북·미 사이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공동군사기구를 조직·운영하며, 잠정협정 채택 및 북·미 공동군사기구 구성문제 토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3월 9일에는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북한은 이른바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의 가시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1996년 4월 4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측인원과 차량들이 규정된 식별표지를 사용치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4월 5일부터 7일까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1~2개 중대규모의 무장병력과 박격포를 비롯한 중화기를 배치하는 등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선언 및 무장병력 투입행위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사태발생시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정전협정 규정상 최소한의 필수 의무사항도 수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서 현 정전협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남북 쌍방이 합의한 제반 합의의 이행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전협정은 교전 쌍방의 군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되, 일단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모든 교전당사자들에 적용되는 군사조약이

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경우 서명자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중국 인민지원군사령관인 팽덕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이었으나, 그 적용 당사자는 당연히 6·25남침전쟁의 교전국 모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주요 교전당사자이면서도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유엔군사령관이 대표하여 서명한 것은 우리 나라와 참전 16개국이 유엔군사령관을 중심으로 단일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협정문과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도 당연한 것이다. 정전협정은 전문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협정체결 이후 현재까지 정전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양측은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서로 상대방에게 수없이 항의를 해왔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문서로서 남북한에 적용되어 온 것이므로 우리 나라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남북한, 참전 16개국, 중국 등이 모두 당사자이나, 역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는 당연히 남북한간에 직접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지난 1992년 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61항에는 "정전협정의 수정과 중보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2항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체제 무실화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협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남북 상호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을 벗어버리고 화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합의해 놓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쌍방이 이미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

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 4자회담 제의

우리 정부는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4자회담을 한·미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제의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전제하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 북한, 중국 및 미국대표간의 4자회담이 남북한 관계개선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기여와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였다.

4자회담 제안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수립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도 참여하는 다자회의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4자회담 제의의 의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4자회담 제의 직후 하시모토 총리가 적극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4자회담 실현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협력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4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으며,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입장하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 北韓 核問題 解決 努力

가. 제네바 미·북 합의이행 실태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 제네바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 그 해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의 미·북합의 이행실태를 보면, 1994년 11월 18일에 북한이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영변 핵시설 전면 동결조치를 발표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월 28일 이를 확인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이 영변지역에 상주하면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상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5년 3월 9일에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발족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미·일은 1995년 말까지 대체에너지인 중유 5만톤을 제공하였으며 1996년부터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5년 1월 21일에 대북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조치를 취하였으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담 및 경수로 관련 전문가 회담이 개최되어 1995년 6월 13일 콸라룸푸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경수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콸라룸푸르 합의에 따라 1995년 8월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조사단이 여섯 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단을 파견하여 경수로 예정부지 인근지역의 철도, 통신, 전력현황 등의 실태조사와 외부도로의 접근로 건설, 작업인원 숙소, 골재원 확보 등을 위한 기초조사, 그리고 현지 기상실태, 인구분포 상황 등의 환경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간의 회담이 1995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어 양측간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기준, 인도일정, 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한 끝에 1995년 12월 16일에 경수로 공급협정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나아가 1996년 6월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간에 특권면제, 통행·통신 의정서가 합의되었다.

나. 전망 및 대책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부지 인수 등 나머지 경수로 후속의정서 협상이 종료되고 한·미·일간 경수로사업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될 경우 1996년 하반기부터는 부지 준비를 시작으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북한의 제네바 합의사항 이행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 남북대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핵사찰협상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MW 흑연감속로의 폐연료봉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능 계측을 거부하는 등 과거 핵 규명을 거부하고 있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990년대에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핵확산에 대한 확고한 대응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그리고 체제유지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미·일·중·러 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직·간접적인 대북 설득노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핵개발 노력을 포기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 등 한·미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핵억제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第3節 國際 軍備統制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군비통제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종식후 국제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한 국제군비통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국제군비통제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지향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군비통제 및 통일실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한반도 안보현실과 정부의 정치, 외교,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국제군비통제 활동의 참여수준 및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1. 國際 非擴散體制 參與

우리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국제 군비통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항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1995년에 국내 수출통제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국내법을 개정한 후 1995년 10월에 핵무기기술 및 부품수출을 통제하는 핵공급 그룹(NSG) 및 쟁거위원

회에 가입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코콤 후속체제인 바세나(Wassenaar) 체제에 가입하였으며, 국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및 화생무기 기술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중에 있다.

2. 化學武器 統制制度 推進

화학무기의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살상력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지난 20여년 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1993년 1월 13일 파리에서 서명식이 개최되어 현재 160개국이 서명하였고 현재 각국이 비준을 받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비축 및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찰제도를 도입하였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련 화학물질 무역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군비통제 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화생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으며, 1993년 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후 그 동안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국내 이행방안을 준비해 왔다. 우리 군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화학무기금지기구 준비위원회 회의에 군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제반 국제협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국제사찰 준비활동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6년 7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동협약의 유엔 기탁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3. 其他 國際軍備統制 活動

우리 정부는 생물무기 금지협약(BWC)의 검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군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국제 검증제도 수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엔의 재래식무기 이전 등록제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996년 5월 비인도적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의 대인지뢰관련 부속의정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第6章 國防態勢 發展方向

우리의 국방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당면한 군사적 위협을 직시할 때, 우리의 군사전략은 "평시 戰爭抑制"와 "유사시 積極的 防衛"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시의 전쟁억제전략은 적의 전쟁도발의지 자체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의지를 보유하고 이를 적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自主的 전쟁수행태세와 즉응적 위기관리체제, 그리고 확고한 한·미 연합억제태세 등을 평시에 완벽히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유사시 적극적 방위전략은 평시억제가 실패할 경우, 적의 전쟁수행의지의 분쇄와 적 주력의 격멸을 통해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태세의 확립은 장기적인 구상 및 기획을 요하는 국방의 핵심사업으로서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인 정예군사력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력집약형의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의 부대구조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전력이 강화된 선진국형의 전력구조로 각각 개선, 보완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각군 및 전장기능별 전력의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방위력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전쟁 억제효과가 큰 첨단무기체계 위주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변경에 대비한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와 전자전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기반을 조기 확보하는 등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국방태세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양국은 냉전시대를 통해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과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라는 공통의 전략목표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군사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향후 한·미 안보협력은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보다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상호보완적 안보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한편, 양국간의 군사협력의 중점도 점차 "평화통일지향적 안보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 차원으로 조정되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국방태세를 직·간접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어 대외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군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선린우호적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며 6·25남침전쟁 참전 16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계속 참여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이래 공병부대·의료지원단·군 옵서버요원 파견, 유엔 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 참여 등 계속 참여범위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방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군은 능동적인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및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의 지속적 발전은 세계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번영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동안 누적된 상호불신과 북한의 일방적 대화거부로 인하여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한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체제모순에 봉착한 북한이 대남 기본정책의 수정 및 변화를 보일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범세계적 군비통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지향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지역 및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4

第 4 部

國 防 管 理

第 1 章 國 防 企 劃

第 2 章 國 防 人 力

第 3 章 國 防 軍 需

第 4 章 國 防 豫 算

第 5 章 國防管理 發展方向

第1章 國 防 企 劃

국방기획은 국방업무의 출발점으로서 국방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군은 이를 국방기획관리 제도로 정착, 발전시켜 왔다.

최근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반면 미래안보환경에 대비한 방위력개선 소요는 증가되고 개선사업이 점차 장기화, 고가화되고 있어 국방기획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려운 국방여건을 극복하고 국방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第 1 節 國防企劃管理制度 發展

우리의 국방기획관리제도는 1970년대의 안보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도입·발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군사원조가 급격히 감소되고 우리의 자체부담 국방비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군사원조시대의 관리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국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고조되었다. 특히 미 7사단의 철수와 월남의 패망으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1975년에 방위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방예산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1979년 최초로 국방부 훈령 제253호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제정하였다.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과거의 비용통계나 기업회계 도입에 의한 관리기능의 강화만으로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총괄체계로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원배분과 관리기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도를 정립하였다. 그후 1983년 예산개혁작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자원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에는 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위력개선계획과 운영유지계획을 통합하였고, 1986년에는 국방

관리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기획관리체계에 자원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1989년에 국방부 훈령 제390호를 다시 제정하여 중·장기 문서체계, 무기체계 획득절차, 전시체계 적용, 방위력개선사업 조정통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편성과 집행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에는 국방부 훈령 제421호를 제정하여 818사업으로 불리는 군 구조 개선사업을 반영함과 아울러 국방중기 부대계획서와 국방 중·장기 획득개발계획서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정원확정과 배분이 가능토록 하였고 무기체계 소요 및 획득절차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방 공통물자에 대한 통합집행체제를 갖춤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는 등 국방자원의 최적관리를 도모하였다.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특별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와 국방부 본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개편 등을 계기로 1995년 4월에는 국방부 훈령 제500호를 제정하여 방위력 개선 업무와 군수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제도와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국방 중장기정책서를 국방 기본정책서로 통합하여 대통령 결재문서로 격상시켜 계획, 예산, 집행문서의 기본지침서로 그 역할을 제고시켰고, 무기체계 획득계획과 부대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기체계 획득관련 순기를 조정하는 등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995년 예산부터 과거 단일항으로 편성하였던 방위력 개선사업을 세항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매년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위력 개선사업과 운영유지사업의 범주를 재조정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第2節 國防企劃管理 體系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제한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킨 종합적인 자원관리체계로서, 국방자원의 소요를 산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집행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주기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다.

국방기획관리업무는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순환고리를 형성하여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수행된다. 국방기획관리체계도는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국방기획관리 체계도

단 계	업 무 체 계	기 능
기 획 (P)	위 협 분 석 • 국방목표 설정 • 국방정책 수립 • 대응전략 수립 • 군사력소요제기	국본 : 중·장기 정책 수립 합참 : 군사전략 수립 및 소요 조정·통제 각군 : 군사력 소요제기
계 획 (P)	계 획 요 구 및 조 정 국 방 중 기 계 획 수 립 (재원계획, 사업계획, 연도계획)	각군 : 중기계획 요구 국본 : 중기계획 수립
예 산 (B)	연 도 예 산 편 성 (편성, 심의, 조정, 확정)	합참·군 : 예산요구 국본 : 연도예산편성
집 행 (E)	획 득 및 유 지 (자금배분, 계약, 획득유지, 결산)	국본 : 예산재배정 각군 : 예산집행·운영
평 가 (E)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발전 (사전분석, 심사분석, 감사)	각군 : 심사분석 국본 : 평가, 결산

※ 기획(P) : Planning　　계획(P) : Programming　　예산(B) : Budgeting
　 집행(E) : Execution　　평가(E) : Evaluation

기획단계는 국방기획관리의 출발점이자 장기적인 국방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적의 위협분석과 국가목표를 바탕으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이다.

계획단계는 기획단계에서 제기된 군사력 소요를 근거로 향후 5개년간의 연도별·사업별 계획을 국방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하여 방위력개선과 운영유지분야 등을 망라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단계는 국방중기계획의 기준연도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각군 및 기관의 예산요구를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집행단계에서는 각군 및 기관의 예산배정 요구를 검토 및 조정하여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되, 각군 및 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계획된 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는 기획으로부터 집행까지의 전단계를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진행사업에 대한 문제점 시정과 사업 완료후의 심사분석 결과를 차기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사결정에 기여하여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기획관리제도는 목표지향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획으로부터 계획,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국방관리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동구조로서, 각 단계별 의사결정이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국방예산 획득 여건의 변화 및 무기체계의 첨단·고도화에 따라 보완,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장기 군사력 기획소요로부터 중기계획문서화하는 단계에서는 정부재정으로부터 국방부문에 투입될 재원규모에 대한 사전 예측이 매우 긴요하나 최근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확실하여 예산편성시마다 계획문서를 매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 및 예산단계에서의 예산제약이 기획구조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상위 기획문서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진부화가 빠른 현대 첨단 무기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국방기획관리제도는 다단계의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

재원배분 및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기획문서의 전산화, 유사문서체계의 중복성 최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모색 등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第2章 國防人力

국방인력은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위기시에 국가체제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 국방인력에 대한 제반정책은 군의 전투준비 태세 유지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방인력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총체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전문성 및 직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직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기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며, 예비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第1節 人力政策

1. 人力政策 發展

오늘날 무기체계가 과학화 및 고도정밀화됨에 따라 기존의 군구조 및 인력구조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방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인력구조를 점차 개선하며 장교 획득제도를 개선하고, 군내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제반 인력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가. 인력관리 효율성 극대화

신세대들의 의식성향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개성과 주장이 명확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임금이 고임금화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군의 우수인력 충원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군비감소 추세,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유지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방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력구성의 핵심

요소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전력발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국방인력 관리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력 개선계획과 연계된 인력영향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심의시 인력의 규모, 가용성, 지원가능성, 교육훈련 소요, 미래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지원계획을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기획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중장기 인력기획·계획서를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국방인력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방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에 관한 총체적인 국방인력관리 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인력의 총체적 양적관리, 인력 및 인사관리, 인적자원개발, 사기, 복지, 근무, 환경업무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국방인력 관리업무들이 상호 호환성을 갖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단계적으로 시험개발, 본개발을 거쳐 통합인력관리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총체적 국방인력관리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인력관리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그룹차원의 우수인력의 획득 못지 않게 인적자원의 능력개발과 활용은 물론, 직무만족을 통한 복무의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개념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회적 인력관리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국방인력관리를 총체적 인력관리 개념에 의거 현역, 군무원, 예비역, 민간인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인력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인력의 양적, 질적관리와 능력개발, 복무의욕 증진을 위한 사기·복지정책 개발이 상호 연계된 인적자원 관리기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인사분야 근무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은 인사정책의 기획, 계획, 예산, 집행, 영향평가, 분석 등 인사분야의 전문 직무지식 및 관리기법을 습득토록 하고 국방인력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사분야 근무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력운영유지비를 절감하며, 궁극적으로는 군사력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전력발휘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나. 인력구조 개선

현재의 병력집약형 군 인력구조와 인건비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국방비 중 인력운영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하고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역 및 예비역과 민간인력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여 적절한 국방인력의 규모를 설정하고, 군별, 신분별 인력구조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 국방발전방향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현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하되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병 위주에서 군사 전문기술을 보유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하고, 민간인력의 활용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예비군 역시 축소하되 군조직의 일부로 조직 및 편성하고, 각군별 구성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해·공군을 증원하여 3군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중·장기복무장교 획득제도 발전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어려운 근무환경, 직업성 보장 미흡 등의 제반요인으로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군 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기복무장교들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군복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육군에서는 장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교육후 임관하는 "3사관 후보생과정"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2년제 생도과정"으로 개편하여 1996년도부터 모집 시행함으로써 1998년도 이후에는 다수의 학사학위 장교를 추가로 배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군생활 경험이 풍부한 하사관 및 선임병 중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우수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간부사관과정"을 1996년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병영생활을 경험하고 지휘능력을 갖춘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의 하부구조를 강화시키고, 하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상승의 기회도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하사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라. 군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

우리 군은 창군시부터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여군학교와 간호사관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1,880여 명의 여군이 행정 및 간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점차 과학화되고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발전됨에 따라 여성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전투분야에까지 여성활용의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군에서 여성활용 직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군의 활용분야가 점차 확대되면 여군 모집인원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정예 군간부로 활용하기 위해 그간 여성입학을 제한하였던 사관학교도 문호를 개방하여 1997학년도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여자생도를 모집하고 단계적으로 육군,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시행함으로써 가급적 군의 전분야에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국방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여성의 국방참여를 점차 높여감으로써 군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2. 人事管理制度 發展

우리 군은 그 동안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의 직업성 보장, 전문화 그리고 인사관리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와 방침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가. 임기제 진급제도 시행

임기제 진급이란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를 해당 전문분야의 상위직위에 발탁하여 보직시킬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키는 제도로서, 그 동안 각군의 방침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1996년부터 법제화하였다.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직위로써, 특수전문 직위 및 기능사령부 직위에서 70개 직위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장관급장교 30개 직위는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나머지 40개 직위는 관계부처 협의하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장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은 당해연도 장관급장교의 정원범위 내에서 임기제 진급대상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만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제 진급으로 선발된

자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진급선발자 명단 또는 진급 인사명령에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기제 진급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보직 또는 유사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2년을 더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개선

군무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에 군무원의 신분보장, 채용 등에 대한 관련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무원 중에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인사소청 또는 항고심사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였고, 군무원의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징계시효기간은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급 군무원을 신분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군무원 채용제한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예전역군인의 군무원 특별채용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적용하던 것을 실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기간만 적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군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하였다.

第 2 節 教育訓練政策

1. 教育訓練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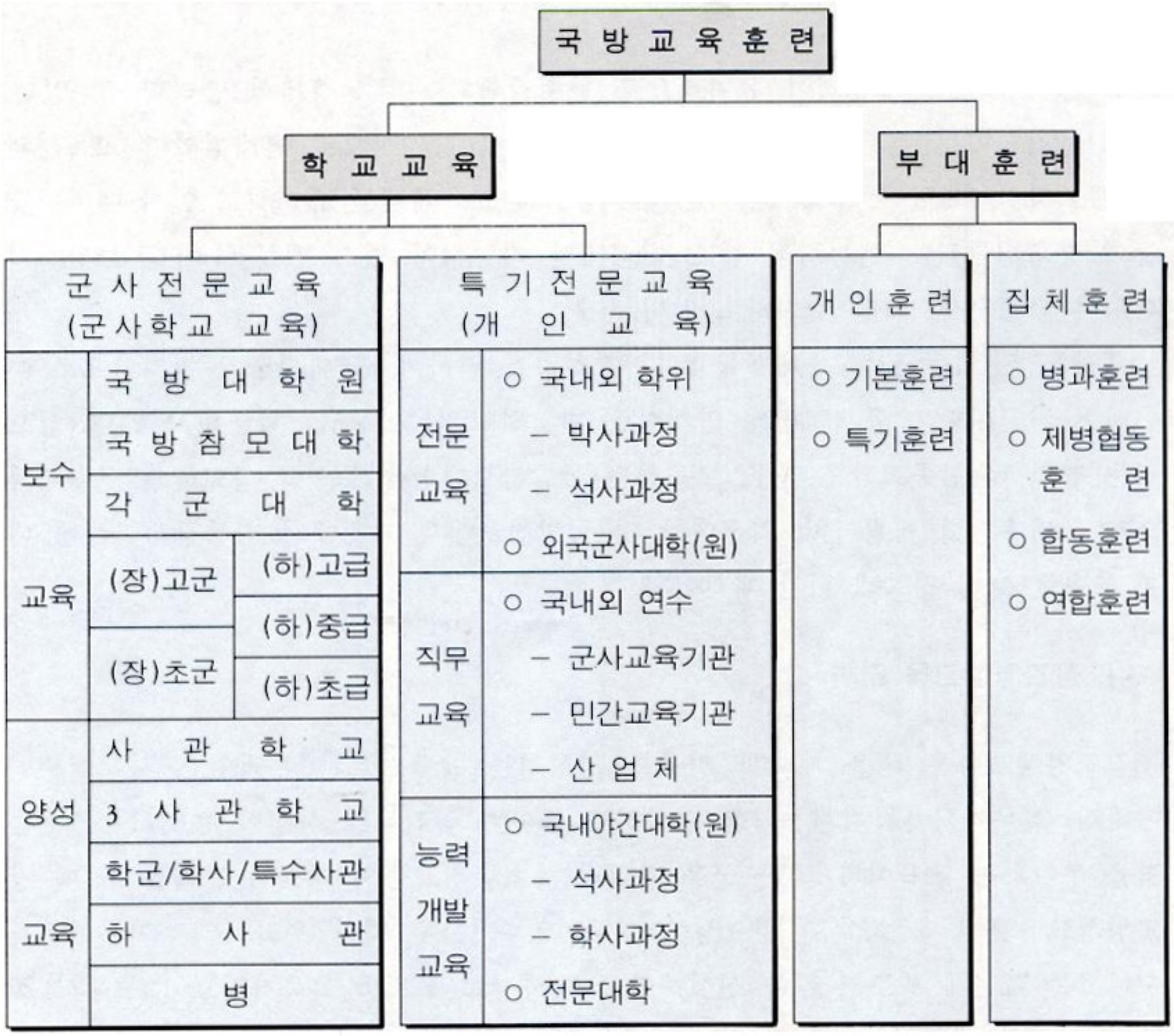
국방교육훈련의 목적은 "국군의 사명에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군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으로 대별된다. 학교교육은 일반군사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군사교육과 특기군사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특기교육으로 구분되고 부대훈련은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도표 4-2와 같다.

군사전문교육체계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양성교육은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과정으로 징집된 병입대자와 지원에 의해 선발된 사관생도 및 각종 후보

생에게 군인으로서 필요한 정신, 태도, 체력 및 각군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군사지식이나 일반 학문지식 또는 기술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보수교육은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병과, 특기, 직능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차상급 직위의 직무수행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특기전문교육체계는 전문교육, 직무교육, 능력계발교육으로 구분된다. 전문교육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위탁교육과 무관요원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군사대학(원) 파견교육을 포함한다. 직무교육은 현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군사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 산업체에

도표 4-2　　군의 교육훈련체계



서 신기술 및 교리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능력계발교육은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형태로 야간에 국내 대학(원) 및 전문대학에서 자기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개인훈련은 병과나 직능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장병에게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전문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각급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기훈련으로 구분되고, 집체훈련은 조직적인 전투력으로 결집시키며, 통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병과훈련, 제병협동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으로 구분된다.

2. 教育訓練政策 發展

가. 합동군사교육체계 강화

현대전은 육·해·공군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발휘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제반 군사교육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교육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우리 군은 군별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군의 통합전투력 수행능력이 다소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합동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합동군사교육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3군대학을 동일지역으로 이전하여 각군대학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합 및 합동교리를 연구, 교육하는 국방참모대학을 중령급 장교들의 필수과정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각군대학 및 국방참모대학 과정에서 합동군사이론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장교양성교육 강화

장교양성교육은 군을 지휘할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기본적인 군사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지식 및 지휘능력을 겸비하고 군의 고급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이다. 최근 군을 지원하는 초급장교들의 자질과 능력을 볼 때 장교양성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2년제 생도과정"을 신설하였고 학사장교 후보생 교육기간도 12주에서 20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장교 양성 교육기관의 교과목을 개정하여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어와 전산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신세대 장병의 특성에 적합한 지휘통솔, 부대관리, 군대윤리,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초급간부로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부여토록 노력하고 있다.

다. 군·학 제휴 프로그램 발전

군의 주요간부들이 합리적이고도 균형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일반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현재 민간대학의 석·박사학위과정 위탁교육을 통해서 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군내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내용에 대하여 민간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바쁜 군인들이 근무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군·학 제휴 프로그램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군·학 제휴 프로그램이 발전되면 기술군, 과학군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더욱 용이해지고 다양한 사회 전문지식과 가치를 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점은행제 실시계획에 따라 군에서도 군의 여러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하여도 공인된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군·학 제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교육부와 협조중에 있다.

라. 교육기관 평가제도 개선

교육기관 평가제도는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교육기관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있다. 현행 군 교육기관 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적평가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의 환류(Feed-back) 기능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교육환경개선이 부족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평가영역을 기존의 학생평가 중심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 교수진, 연구실적, 교육여건, 행정 및 예산운영, 실무 및 군 기여도 등 전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관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마. 교육훈련 과학화

사회전반의 정보화 추세와 첨단과학 무기체계의 발전 및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국방교육훈련의 과학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방법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산업 및 컴퓨터의 활용기술을 교육훈련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1993년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CBT : Computer-Based Training)의 시험적용 단계를 거쳐 "국방 CBT 교육체계구축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6년부터 CBT 교육장비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학습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분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실전적 부대훈련을 하기 위하여 육군은 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해군은 ASTT(Action Speed Tactics Training), 공군은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장비 등을 개발하여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국방교육훈련의 과학화를 위하여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정보의 신속한 환류(Feed-back)체계 구축, 핵심기술의 교과목 편성 반영, 첨단무기체계 직무과정 개발 등 교육훈련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 신지휘통솔기법 개발 및 적용

신세대 지휘통솔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4년 말부터 이를 각급 기관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였으며,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996년에는 교리체계를 완성하고, 1997년부터 교육기관 및 야전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와 자기실현 욕구를 반영한 인간중심의 지휘통솔과 군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업중심의 지휘통솔이 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변화와 부대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감안하여 군조직에 적합한 상황이론 모형을 구축하여 적용, 발전시키고 둘째, 지휘통솔 개발 체계를 정립하며 셋째, 계층별, 제대별 규모에 적합하도록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구분하여 지휘통솔자의 자질과 기본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신세대 의식구조에 적합한 한국적 신지휘통솔 방법을 적용하고 합리적 부대관리와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승보장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第3節 士氣 및 福祉增進政策

1. 士氣 및 福祉環境

최근 30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장병들은 열정을 갖고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내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군을 3D집단으로 인식하는 등 역기능적 현상들이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신세대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선진국형의 각종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장병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직업군인들의 복무여건 개선요구와 군복무 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심리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 士氣 및 福祉增進政策 發展

지금까지 우리 군은 당면한 방위력개선 사업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장병복지증진은 국민복지 수준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 여건하에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부대관리와 지휘통솔 등을 통해 높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형의 군 복지정책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 사기앙양 정책

(1)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우리 군은 직업군인의 직업성 보장과 처우개선, 장기근속후 전역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전 구성원이 평생직장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 신체위험을 전제로 한 복무가 요구되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중에 부상한 자 중에서 군에서 지속적인 복무가 가능한 자원은 적극 수용하여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여자군인의 육아 등을

위한 청원휴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권익이 보장되도록 군 인사법상의 관련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2) 건전한 병영풍토 조성 및 하급제대 지휘권 보장

그 동안 군은 병영 저변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근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상경하애, 솔선수범, 동고동락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병영생활의 합리화를 달성하는 한편, 하급제대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급간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여 지휘범위와 한계를 규정화하였으며, 징계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통하여 엄정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소대장 활동비를 신설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함으로써 말단제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였고, 군인의 품위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두발규정을 개선하였으며, 금연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장병 건강증진과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효친휴가, 장기 근속 휴가 신설 등을 포함한 군인 복무규율을 개정하여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3)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군기사고는 군의 기강확립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군기강이 확립되면 사고예방은 물론 사기 또한 앙양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1995년도에는 군기강 쇄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사망사고를 21% 감소시켰으며, 이 중 군기 사망사고는 37% 감소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무사고 부대육성, 사고없는 군을 목표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예방활동 및 부하관리로 군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사기충천한 군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해외시찰 견문확대

세계화 시대에 군도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방인력의 해외견문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시찰을 통해 국가발전의 실상을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할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양시키고 있다. 장교는 미주·유럽지역, 하사관은 부부동반으로 동남아시아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와 주요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전적지와 1·2차대전 격전지 등 군사관련 지역의 방문을 통해 군사식견을 넓힘으로써 전문화시대에 부응한 사고영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군인 복제 개정

하사관의 품위향상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된 이래 25년 만에 하사관의 계급장 및 정모모표를 장교에 준하여 개선하였고, 장병 전투복의 전술적 위장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전투복 계급장의 색상을 개정하는 등 군인복제를 개정하여 199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하사관 계급장의 형태는 장교와 동일하게 무궁화 받침 위에 계급장을 표시하였고 계급장의 재질은 철제와 포제로 구분하여 장교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계급장의 부착위치도 장교와 동일하게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정모의 모표는 육·공군은 장교와 동일한 태극 및 무궁화 화환문양으로 해군은 현행 모표의 재질을 개선하고 크기를 조정하였다.

나. 복지증진 정책

(1) 보수 및 수당체계 개선

1996년에 군 복무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특별상여금, 이사화물 상하차비 등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분야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 특수근무수당을 평균 20% 인상하였다.

향후의 보수정책은 군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직업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별거수당, 경조사비, 교통비의 균등조정 등 제수당을 현실화하여 2000년대 초까지는 보수수준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수장비 및 정비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은 형평성과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속연수별로 지급방법을 점차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위직의 보수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계급별 호봉승급액 책정을 전계급 단일호봉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으로도 직업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수당 개발과 사회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 간부 주거여건 개선

직업군인은 어느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가 해결되도록 숙소를 확보하고 내집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군관사의 정책방향은 수요충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상응하는 일반사

회의 평균 주거환경 수준 정도로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소요기준과 비교하여 미확보된 관사는 1998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며, 노후된 관사는 안전진단후 이상징후 발견시에는 조기에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관사는 국민주거환경 수준에 상응하는 22평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여 건설하며 독신간부 숙소도 지금까지의 2인 1실 기준을 1인 1실 기준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병영생활 여건 개선

장병 병영생활에 기본이 되는 병영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영시설 현대화 계획"과 병행하여, 1997년부터 병영 내에 장병들의 휴식과 레포츠를 겸한 다목적 편의시설인 "병영종합체육 및 복지관"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사들의 급식비는 1996년에 국민평균 급식비의 75% 수준이나 1997년에는 85% 수준까지 인상하고, 봉급도 최소한의 잡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1997년부터 연차별로 증액할 계획이다.

(4) 군자녀 기숙사 건설지원

군자녀 기숙사 건설사업은 별거 취학자녀들에게 생활 및 면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93년부터 별거 취학자녀가 100명 이상 거주하는 전국 주요 교육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998년까지 서울, 대전에 추가로 기숙사를 건설하여 소요의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자녀가 기숙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혜의 형평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군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5년부터 지역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5) 군 면세품 지원

군 면세제도는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부과된 품목의 세금을 면제하여 군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1975년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 면세혜택은 시행 초기와 비교시 세율의 인하와 공급량의 제한, 그리고 일반시중의 할인판매 등으로 실질적인 면세혜택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소비재 공급물량을 1994년의 물량보다 약 40% 확대하였고, 관련부처와 군 면세 사용한도 책정원칙 및 기준을 합의함으로써 면세공급물량의 부족문제를 다소 해결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가전제품의 재구매 금지기간을 5~6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

인 면세 혜택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6) 휴양 및 레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군인가족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휴양·레저를 위한 복지시설을 1996년부터 확충하고 있다. 이는 일반사회의 문화·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군인가족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군 생활환경에 부합되는 복지 시설의 별도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부대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주요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병 및 군인가족에게 복지 및 휴양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 전역군인 생활안정지원

직업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짧은 정년으로 인해 대부분이 최대 가계지출기인 50세를 전후하여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취업에 많은 제약을 받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취업 분야는 도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관련분야인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업인원은 전역인원의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장기복무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에게 사회 재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직업군인의 사기앙양 및 전역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도표 4-3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 전역후 취업현황('93~'95년)

구 분	전역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	취업직위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근무원	일반기업체
장 교	1,757	666	37.9	70	137	144	19	296
준·하사관	1,682	391	23.2	0	0	14	23	354
계	3,439	1,057	30.7	70	137	158	42	650

(1) 취업직위 확대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재취업은 전역연령의 준고령화, 전문성의 결여, 사회의 고용

인력 제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조직 자체에서 흡수 활용이 가능한 취업직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노동부의 고급인력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등 사회 타부문에의 취업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직업보도교육 확대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은 군 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직업교육 소요비용도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군내교육, 군외학원과정,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원과정, 농·축·수산의 후계자 육성과정, 경영자 총연합회 등에서 실시하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연수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짧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직종에의 취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시설이 우수한 노동부산하 직업훈련학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전역군인 산업인력화

민간기업은 산업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역장병의 취업이 쉽지 않는 실정이므로 국방부는 전역군인을 산업인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산업동향에 의하면 연간 산업인력 부족인원은 약 18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역군인은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역군인들이 해당업체에 취업시 급여 상승 추가분은 세제혜택으로 보전토록 하는 등의 제대군인 지원법의 제정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복지지원 확대

예비역에 대한 자녀교육, 면세구매, 의료지원,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생활 복지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현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호국장학기금의 지급을 예비역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 醫務支援 向上

우리 군은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의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를 통하여 비전투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병들에게 민간의료 수준과 동일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가. 의무현대화 사업 추진

의무현대화 사업은 군병원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최신화하여 군병원 진료환경과 여건을 사회민간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군은 1987년에 의무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6년까지 전방 6개 병원, 후방 4개 병원을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완료하거나 일부 병원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전방 4개 병원, 후방 3개 병원을 현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병원시설 현대화와 병행하여 병원규모별 진료수준에 적절한 최신의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민간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에 5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MRI 등 149점의 의료장비를 획득, 설치하였다. 앞으로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18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획득, 설치하는 등 의무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의료의 질 향상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의료·복지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군도 양질의 진료가 강조되어 군 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민간의료 수준과 동일한 진료혜택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직업군인들은 성인병 호발 연령이 40대임을 중시하여 정밀 신체 검사의 대상자를 계급과 무관하게 40세 이상자로 하여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군병원에서 성인병 검진 위주의 정례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직업군인 의료보험 시행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해 온 장기하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은 많은 직업군

도표 4-4 1995년도 직업군인 및 가족의료보험 이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입 원	외 래	약 국	현 금
건 수	군 인	286,907	3,329	225,160	58,308	110
	가 족	1,697,089	24,841	1,383,486	287,476	1,286
공 단 부담금	군 인	4,466,663	1,750,643	2,570,204	106,912	38,904
	가 족	26,098,688	11,393,881	13,921,325	481,369	302,112

인들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등 정착단계에 있으며, 1995년에 직업군인 및 가족의 의료보험 이용실적은 도표 4-4와 같다.

또한 공무상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 중 군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 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비 제도를 시행하여 온 결과 1995년도에 57명에게 5천4백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第3章　國 防 軍 需

우리 군의 군수지원체제는 1960년대까지 미군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여 오다가 1970년대 이르러 자주적인 군수지원체제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적 특성에 부합된 군수지원체제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미래의 군수환경은 첨단정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따라 무기체계가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자원을 통합운영하고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육·해·공군 통합 군수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현대전에 적합한 군수지원 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미래 군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군수지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第1節　國防軍需支援 體制

1. 國防統合軍需支援 시스템 構築

미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 전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기, 적소, 적량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준비되고 파악된 군수전력을 통합운영하여 군수지원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전투 부대의 전투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군수 자원의 적정 소요기준을 산정하여 군수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 컴퓨터와 데이타 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국방 통합군수지원 시스템을 오는 200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미래 국방군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방군수재산을 제대별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재산 가시화 제도를 발전시키고 일반 산업체와의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국방군수자원의 수평적 분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다단계 수직적인 청구보급제도를 단일 수평적인 청구 보급제도로 개선하고 또한 현행 수직적인

정비지원 제도를 수평적인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군수운영예산 및 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군수예산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계획, 조달계획, 자금계획을 상호 연계시키고, 재고회전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수예산을 참모기능별, 전력단위별로 편성, 집행, 결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미래 국방통합군수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첫째, 전군 재산현황을 5~6개월씩 걸려 파악하던 것을 24시간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항시 자원 배분 및 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물자 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군 재산현황은 24시간 단위로 한눈에 보고 예하부대의 청구 보급시 인접부대간에 재고재산을 조정 보급함으로써 재고 누적방지와 재고 회전율을 높여 현재보다 8~10%의 보급조치율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군수예산과 군수야전자금 계획을 연결시킬 경우, 평시 각 제대별 창고 재고수준이 40~75%로 저조하던 것을 100% 수준으로 항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 國防軍需시스템의 情報化 體系構築

국방 통합군수지원 시스템을 정보화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국방군수정보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고 있다.

첫째, 군수업무는 다양한 품종과 독립적 기능별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식, 유류, 유지물자, 탄약, 장비, 정비, 의무물자, 수송, 시설 등 9개의 기능별 정보체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둘째, 9개의 기능별 군수정보체계를 군별, 부대 유형별로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각군본부, 전술제대 지휘계통의 군수지휘정보, 조달본부, 군수사, 중간 군수지원부대 등 군수지원계통의 군수지원정보, 군수품 사용부대의 군수운영정보 등 3개의 제대별 군수정보체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셋째, 9개의 기능별 군수정보체계를 국방부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목록관리, 소요기준관리, 계획 및 예산관리, 자금관리,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통제관리, 적송관리, 저장관리, 창고 안전관리, 검사시험관리, 정비관리, 소모처리관리 등 13개의 세부 업무기능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넷째, 9개 기능별 정보체계와 3개 제대별 정보체계, 그리고 13개의 세부 업무기능분야를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적으로 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목

록제원정보체계, 소요기준정보체계, 군수예산정보체계, 군수자금정보체계, 조달정보체계, 총괄재산정보체계, 중앙자원통제정보체계 등 7개의 하부 정보체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하부 정보체계를 통합군수정보체계(ILIS:Integrated Logistics Imformation System)로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한다.

이와 같이 국방군수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편성부대에 이르기까지 군별, 제대별 군수관리자 및 정책담당자들이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와 연계하여 국방 군수자원의 총괄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장비 및 물자, 예산, 시설 등 모든 군수자원에 대해 자원통제, 관리, 분석,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대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국방군수정보체계에서 생성된 군수정보가 C4I체계에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전·평시 자원관리 및 전시 전투근무지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요제기, 획득조달, 저장분배, 운용 등의 자원순환 주기별로 상호연계 및 환류가 가능하고 제대간에 자원결산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최적의 군수자원을 적기에, 적량을, 적소에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각군의 군수정보 자체는 물론 이들 군수정보를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력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第2節 軍需品 調達管理

1. 軍需品 調達

군수품 조달은 내자조달과 외자조달로 구분되며 조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산하 조달본부 주도의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5년도 군수품 조달 규모는 약 4조 7,111억원으로 이 중 약 80%는 중앙조달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20%는 중앙조달이 곤란한 소량·소액 품목이거나 현지부대 구매품목 등으로 부대조달로 집행되었다.

내자조달은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써 1995년도 실적은 약 3조 7,213억원으로 총 조달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방법은 방산물자 등과 같이 군수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경쟁계약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자조달은 해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미국 정부가 방위물자를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제도에 의한 구매와 외국 각 업체를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상업구매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군은 외자조달에 관한 각종 정보를 널리 수집·검토하여 FMS구매와 상업구매 방법 중 국익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1995년도의 외자구매 중 미국으로부터 구매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미 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가 미국 장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무기도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국 이외 국가와의 상업구매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2. 軍需調達制度 改善

군수품 조달은 조달계획·계약·납품 등 일련의 절차가 상호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야전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달관리, 표준·규격화, 품질보증 등 조달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및 야전지원의 공백을 방지하였으며, 해외구매 정보획득, 협상능력, 사후관리체계 등을 강화하였고, 군납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업체의 군납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상용품목은 가능한 한 경쟁계약을 확대하도록 군수품 경쟁계약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류·일반물자류 등 장병 생활용품을 포함한 65개 품목은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국방표준·규격의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조달행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행 국방표준품목은 상용품목으로, 국방 규격은 KS·정부규격으로의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민·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품질보증 제도 개선, 품질관리제도 조기정착, 사용자 불만사항 처리절차 보완, 해외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보증 등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넷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제품을 조기에 구매함과 동시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금지불방법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3. 開放化에 따른 軍需調達 對處方向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1993년 12월 15일에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구매시에도 국제입찰제도가 적용되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국내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분야도 정부의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되어 양허됨에 따라 일부 양허된 분야에 대한 군 조달시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우리의 안보환경, 국방 조달시장의 특수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분야는 화력·항공·함정장비 등 전쟁물자와 방산물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등 수의계약품목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부품류·사무용품 등 비전쟁물자 중에서 군 작전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품목을 양허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용역 및 공사분야는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조달협정이 시행되더라도 국방조달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국방부는 개방되는 분야의 국제입찰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복잡성, 조달지연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법령 정비 방향에 맞추어 관련규정 및 제도를 정비·보완하며 해외 조달시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第 3 節　國際軍需協力

우리 군은 다변화된 군사외교를 토대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유사시 효율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군수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6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장비, 물자, 기술 등의 실질적인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5월에 필리핀, 8월에 태국, 10월에 인도네시아와 각각 군수·방산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주와도 후반기 중에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군수·방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보급 및 정비능력을 제고시킴

은 물론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군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미국을 비롯한 30개국 153명의 태평양 지역 군수관련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한 제24차 태평양 지역 고위급 군수회의(PASOLS :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를 개최하여 태평양 지역의 군수획득 및 협력체제구축,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수지원 등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군수협력 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켰다.

그리고 국제간의 군수정보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1988년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목록제도를 도입하여 국방보급목록 전산체제를 구축, 발전시켜 왔으며, 국가간의 군수정보의 교환확대를 위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과 목록자료 교환합의서를 체결하여 국제군수협력 증진과 군사외교활동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 국가들과 군수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목록체계(PACS : Pacific Area Cataloging System)를 구축하고 협력할 계획이며, 협정체결 대상국도 계속 확대하여 효율적인 국제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第4章　國 防 豫 算

한 국가가 독립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재원의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 규모는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 소요와 경제성장, 국민복지 향상 등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요구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에서 결정된다.

우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재정 소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방부문에서도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과 사회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국방비는 국가방위 의지의 지표로서 또한 국력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재정에서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배분하는 것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第1節　國 防 財 源

1. 防衛費의 性格과 規模

국방예산은 정부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상 "방위비"로 분류되며 방위비에는 국방부 소관의 국방비,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경찰청 소관의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1996년도 국방부 소관의 순수국방비는 도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비의 96.1%에 해당된다.

도표 4-5　1996년도 방위비 구성

구　　분	방 위 비	국 방 비	전·해경비	병무행정비
금　　액	12조 7,360억원	12조 2,434억원	3,538억원	1,388억원
구 성 비	100.0%	96.1%	2.8%	1.1%

우리 나라의 방위비는 1975년 7월에 목적세인 방위세법 도입이후 국민총생산(GNP)의 6%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으나 국민총생산(GNP)과의 연동개념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1989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최근의 증가율을 보면 1992년에 12.9%, 1993년에 9.5%, 1994년에 9.4%, 1995년에 9.9%, 1996년에 10.7%로서 15% 내외의 정부재정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억제되고 있다.

정부재정 점유율 면에서도 도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의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방위비가 정부재정 대비 30.4%를 차지하였으나, 1992년에 26.3%, 1994년에 24.2%, 1996년에 22%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표 4-6 연도별 정부재정 대비 방위비 점유율

연 도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점 유 율	30.4%	26.3%	25.2%	24.2%	23.0%	22.0%

2. 國防費의 性格과 規模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운영유지비로 대별된다. 방위력개선비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억제전력과 대북취약 전력을 보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 개선에 목표를 둔 소요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이 소요제기로부터 무기체계 채택, 실전배치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사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영유지비는 기존 전력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필수경비로서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즉 병력·장비 등 현존전력의 규모가 줄지 않는 한 정부 타부문의 운영유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복지수준 개선 등과 연동되어 일정한 증가가 불가피한 비용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재정과 국방비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정부 재정운영 방향이 국민복지 수요와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분야에 중점을 둔 결과 국방비는

도표 4-7 연도별 정부재정 및 국방비 증가율

구 분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부재정증가율(%)	10.1	18.9	23.1	14.6	13.7	15.6	16.0
국방비증가율(%)	9.0	12.3	12.8	9.6	9.3	9.9	10.6

도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 억제되어 정부재정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도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비는 GNP 대비 점유율이 1980년 6.0%에서 1990년에는 4.4%, 1996년에는 3.1%로 낮아졌고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도 1980년 35.9%에서 1990년에는 29.3%, 1996년에는 21.1%로 크게 낮아졌다.

도표 4-8　　연도별 GN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점유율

구　　분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GNP 대 비(%)	6.0	4.4	4.0	3.6	3.5	3.4	3.3	3.1
정부재정대비(%)	35.9	29.3	27.6	25.3	24.2	23.3	22.2	21.1

국방예산의 재원배분도 국방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도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무기 확보 등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비는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인력운영, 장비유지, 교육훈련, 시설유지 등 군 운영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유지비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인력운영비는 병력집약형 군 구조하에서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로서 국방비 증가율이 억제됨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의 점유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비 수준으로는 기계획된 방위력개선 분야의 축소 조정은 물론 사회발전에 부응한 장병 근무여건개선 등 산적한 국방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표 4-9　　연도별 국방예산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　　방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 위 력 개 선 비	36.8	34.8	33.0	31.6	30.2	29.1	28.3
인 력 운 영 비	40.1	42.4	44.1	45.0	45.7	45.6	47.0
장 비 유 지 비	9.9	9.6	9.6	9.4	9.3	9.8	9.7
부 대 유 지 및 기 타	13.2	13.2	13.3	14.0	14.8	15.5	15.0

第 2 節 1996年度 國防豫算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국방비라고 지칭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구성 내역별로는 운영유지 예산과 방위력개선 예산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자체 세입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말하는데 국방부의 특별회계 예산은 퇴직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는 군인연금 특별회계와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1. 一般會計 豫算

1996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12조 2,434억원으로서 운영유지비는 8조 7,768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3조 4,666억원이다. 1996년도 예산을 1995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도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1조 1,690억원이 증액되었다. 1996년도 예산을 전년과 비교할 때 증가된 요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도입된 장비의 운영유지비 및 정비주기 도래장비의 외주정비비, 정부방침에 의한 방위병 현역화소요, 단가인상 및 집행실적 등 1995년중에 발생된 인상요인을 적용함으로써 늘어나는 자연증가 소요가 2,356억원이다.

도표 4—10 1996년도 국방예산

구 분	1995	1996	증 감	증 가 율
운 영 유 지 비	7조 8,477억원	8조 7,768억원	9,291억원	11.8%
방 위 력 개 선 비	3조 2,267억원	3조 4,666억원	2,399억원	7.4%
국 방 비 계	11조 744억원	12조 2,434억원	1조 1,690억원	10.6%

둘째, 1996년도 급여인상 5%, 교통비 신설 및 명절휴가비, 공공요금 인상 등 정부공통기준 적용으로 인한 증가소요가 5,037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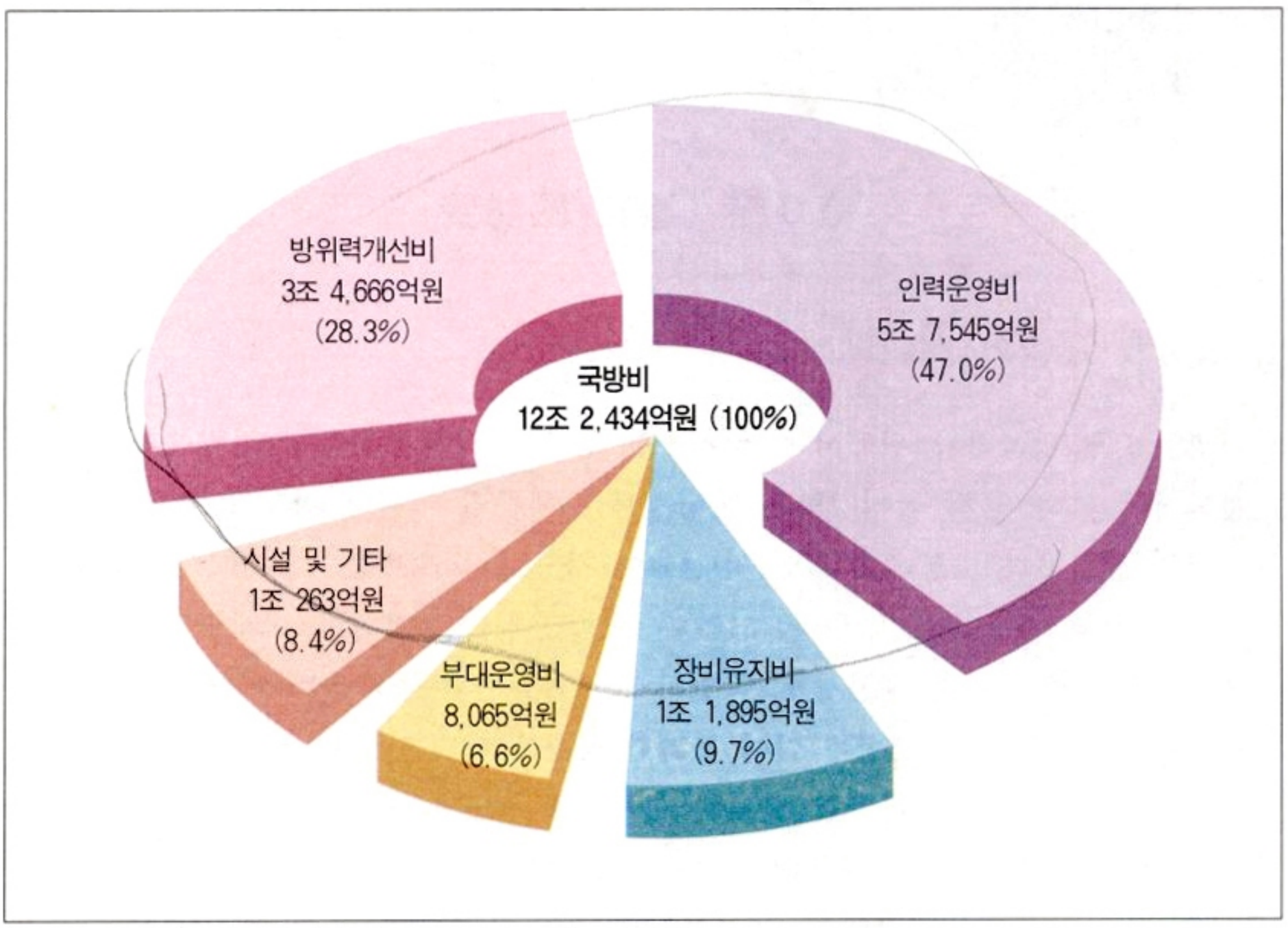
셋째, 기타 잔여재원은 군 특수근무수당, 개선급식 및 피복 등 장병 사기복지 개선에 2,300억원, 교육훈련 강화 및 과학화에 383억원, 장비유지 개선에 636억원, 국방 정보화 지원 및 부족시설 확보 등 기타 개선소요에 1,111억원을 증액 배분하였으

며, 제도 및 기준조정 등을 통해 2,532억원을 절감 편성하였다.

1996년도 국방예산 내용은 도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유지비는 8조 7,768억원으로서 장병들의 급여, 급식, 피복 등 인력운영비로 5조 7,545억원, 장비운영유지비 1조 1,895억원, 부대운영비 8,065억원과 시설건설 및 교육훈련, 향토방위분야에 1조 263억원을 배분하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3조 4,666억원으로 정보수집 전력 등을 중점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술집약형 전력확보를 위하여 부대구조개선, 기동, 화력, 표적 획득능력 향상 등 질 위주의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배분하였다.

도표 4－11　　1996년도 국방예산 내용



1996년도 국방예산은 최근 수년간 유지되어 온 한 자리를 약간 상회하는 10.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는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과 그 동안 낙후된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 등 사기복지 개선 소요와 방위력개선 연차사업 추진 소요 등을 포함하여 전력유지 운영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소요만 반영 편성하였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각종 기준이나 제반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

비는 과감히 축소하였다.

2. 特別會計 豫算

군인연금 특별회계는 현역군인 개인부담기여금과 국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퇴직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소요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세입·세출 공히 9,208억원을 편성하였다.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군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군 사용 사유지 정리사업을 위한 소요로서 1996년도에는 세입·세출 공히 2,328억원을 편성하였다.

第3節 適正 國防費

1. 國防費 運營의 問題點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원 중에서 국방부문에 적정수준의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정책은 현행정책 수행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에도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입안, 추진해야 하므로, 국방비는 적정규모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군비감소 추세, 정부의 경제·복지 우선정책, 국민의 안보의식변화 등의 국내외적 환경이 적정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적정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불투명한 최근의 상황에서 우리 군이 현재 안고 있는 국방비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비의 증가는 제한된 반면, 운영유지비의 실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재원배분면에서 방위력개선비의 투자비율이 도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국방비가 배분된다면 국방비가 연평균 11% 수준으로 증가되더라도 2000년경에는 국방비의 약 25% 정도만 방위력 개선을 위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나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획득 수단의 자주화를 위한 투자여력이 거의 없게 되며, 미래안보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집약적인 방위력 개선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대미의존이 지속됨에 따라 국방부문에서의 비용분담 증가와 통상분야 등 국방부문에서의 보이지 않는 비용지출은 불가피할 것이다.

도표 4－12　　국방비 배분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방위력개선비	39.0	38.1	36.8	34.8	33.0	31.6	30.2	29.1	28.3
운영유지비	61.0	61.9	63.2	65.1	67.0	68.4	69.8	70.9	71.7

둘째, 69만여 명의 장병들이 함께 병영생활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군대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민간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군 인력의 동원 및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군대가 국민의 군대이고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조직보다 군조직이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군의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 대한 기대에 비해 군의 복지수준이나 직업상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인이 점차 인기 없는 직업이 되어 가고 있으며, 우수자원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직업군인의 전역 희망률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현재의 낮은 보수, 근무특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국방예산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고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셋째, 국방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군병력의 감축을 통하여 절감한 예산을 방위력 개선 투자에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병력감축시 보완할 투자요소는 너무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병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첨단 장비위주의 군사력을 건설할 경우에 그 효과는 최소한 10년 후에나 나타난다. 그 동안 병력감축의 위험부담을 대체할 방법이 거의 제한되어 있어 선투자 후감축이 아닌, 선감축 후투자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는 재원증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국방비 운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매년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소요가 가용한 국방

비를 고려하여 자체 조정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국방비를 억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국방운영상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이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적정 국방비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군도 과학적인 자원관리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체계적인 발전과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자원운용 및 배분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適正 國防費 水準

"한 국가의 가용재원 중 얼마를 국방부문에 할당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일반화된 공식은 없다. 이는 국가마다 처해 있는 국방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비 소요와 국가경제 부담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곧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된다. 그러나 국방의 목표를 잠재위협에 대한 대비로 할 때에는 국가경제의 성장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방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방비의 수준이 결정된다.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협에 대한 인식, 국가재정 부담능력, 재정운용의 중점 등에 대하여 정책결정 참여자간의 시각 차이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즉, 국방부문의 소요가 민생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다른 소요보다 어느정도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국방부문에의 재원할당이 주변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녕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원을 우선적으로 국방부문에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나라의 국방비 규모를 국민총생산(GNP)과 재정규모를 대비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의 국민총생산(GNP)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6.0%였으나 도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에는 3.14%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일반회계 기준의 정부재정에 대한 국방비의 규모도 1996년에 21.1%로 감소되었다. 특히 중앙재정의 총규모 중 국방비 비중은 1996년에 14.4%로서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 4－13　　GN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규모

단위 : 10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경 상 GNP	214,240	238,705	265,518	303,773	348,284	390,020
총중앙재정 (대GNP, %)	39,367 (18.4)	43,842 (18.4)	51,188 (19.3)	62,321 (20.5)	75,490 (21.7)	85,308 (21.9)
일 반 회 계 (대GNP, %)	31,284 (14.6)	33,362 (14.0)	37,268 (14.0)	43,250 (14.2)	51,881 (14.9)	57,962 (14.9)
국 방 비 (대GNP, %) (대총재정, %) (대일반회계,%)	7,452 (4.01) (19.5) (27.6)	8,410 (3.57) (19.0) (25.3)	9,215 (3.46) (17.2) (24.2)	10,075 (3.35) (16.2) (23.3)	11,074 (3.26) (14.7) (22.1)	12,243 (3.14) (14.4) (21.1)

※ 본 예산기준

우리 나라의 국방비 투자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사용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 통계지표인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방비 비중과 국민 일인당 국방비 부담액을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도표 4－14와 같다.

도표 4－14　　주요국의 GNP 대비 국방비, 국민 1인당 부담액(1994년)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이스라엘	북 한	한 국
GNP/GDP (10억불)	6,736.9	1,023.3	4,592	71.1	20.9	379.6
군 사 비 (10 억 불)	263.9	84.9	45.8	6.7	5.6	12.5
GNP　대 비 (%)	3.9	3.4	1.0	9.4	26.8	3.3
1 인당　부 담 ($)	1,001	599	366	1,190	234	279

자료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도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방비 규모는 국민총생산 대비 3.3%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 아니며 국민 일인당 국방비 부담액도 279달러로서 북한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안보위협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 도표 4－15와 같다. 우리 나라는 이 도표에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상위 안보위협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위안보 위협국가들이 평균 8.5%의 국방비를 부담하는 데 비해 우리 나라는 3.3%만 부담하고 있다. 즉, 안보위협은 상위 국가군에 해당되면서 국방비 부담은 중위 국가군에 해당한다.

도표 4－15 위협정도에 따른 GNP 대비 국방비 비교

구 분		국 가	국방비/GNP 평균(%)
안보위협	상(8개국)	북한, 이스라엘, 대만,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스	8.5
	중(11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태리, 중국, 터키, 태국, 아르헨티나	3.1
	하(8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1.9

자료 :「Military Balance, 1995～1996」(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5. 10)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비 수준은 어느정도가 적정한 규모인가?"에 대한 답변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우선 대북한 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의 국방비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국방분야에서 산출한 국방비 소요를 국가 재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주변국가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한된 방어충분성 수준의 방위력 유지를 목표로 하여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전쟁억제력 차원의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방비 수준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억제력의 공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방위력 개선목표가 대북 방어력만을 갖추는 것이라면 현 상황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군사력을 창출하고자 할 때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현재수준의 국방비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역할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앞으로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대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역할이 중시되고 있지만 그 밖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됨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정치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自主的인 國防力量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보다 상향 조정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國防費와 國民經濟

일반적으로 국방비는 소모성, 경직성 경비로 인식되어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국방비 투자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가 국방비를 투자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투자 중 치안이나 공해문제 등에 투자하는 예산이나 공원 및 다리 등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투자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투자의 효과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절대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공해로 인해 맑은 공기와 물을 얻기 힘들 때에는 값을 지불하게 되며 비로소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국방도 마찬가지이다. 평시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위협을 느끼고, 전시나 국가가 독립을 상실했을 때에는 그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게 된다.

국방비 투자가 낭비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들은 다리를 건설하거나 공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국방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국방비 투자를 국익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방비 투자가 소모성 낭비비용이라는 인식은 국방비 지출의 효과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은 다른 공공지출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국방재화를 생산하여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이차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생산, 고용, 소득, 수출입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 나라는 한국은행에서 5년 주기로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국방비의 경우 지출구조가 복잡하고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아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방위산업

부문과 국방비 지출 부문으로 확장시켜 작성한 "국방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국방부문이 국민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도표 4-16은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작성한 각 항목별 경제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국방비로 100원을 지출하면 생산유발 143원, 외국으로부터 수입유발은 17원, 소득효과(부가가치 유발계수)는 82원을 발생하는 반면에 비국방 정부소비지출에 100원을 지출하면 생산유발 135원, 수입유발 7원, 소득효과는 93원을 유발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은 민간자본 및 정부고정자본에 투자하는 효과보다는 낮지만 일반 정부소비지출과는 대동소이한 효과를 나타낸다.

도표 4-16 최종수요 각 항목별 경제파급효과

구분 / 항목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국방비지출	1.427303	0.176372	0.823628
민간소비지출	1.769635	0.153013	0.846987
비국방정부소비지출	1.354037	0.067681	0.932319
민간고정자본형성	1.989253	0.189735	0.810265
재고증가	1.981384	-0.686977	1.686977
수출	1.977720	0.327445	0.672555
최종수요전체	1.847426	0.198000	0.802000

또한 도표 4-17에서는 1978년, 1985년, 1990년의 국방비 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78년에 국방비 100원 지출의 생산 유발 효과는 107원, 1985년에는 136원 그리고 1990년에는 142원으로 그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국민경제의 최종 수요 전체의 생산성 추이는 1978년에 1.52, 1985년 1.76, 1990년에는 1.84로서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8년도에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최종 수요와의 생산성 차이는 70% 수준이던 것이 1990년도에는 77%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국방비의 생산성이 국민 경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낮지만 점차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위산업분야 등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술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국방비 지출이 낭비라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도표 4－17　　연도별 유발계수 추세

구분 \ 연도		1978	1985	1990
국방비 지출	생산유발 계수	1.070239	1.363811	1.427303
	수입유발 계수	0.417067	0.432726	0.176372
	부가가치 유발계수	0.582933	0.567274	0.823628
최종수요 건수	생산유발 계수	1.521885	1.761692	1.847426
	수입유발 계수	0.290111	0.277942	0.198000
	부가가치 유발계수	0.709889	0.722058	0.802000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 군은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및 작업훈련, 국민정신 함양 등의 무형적인 국가경제적 역할 수행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또한 위기대응능력 보유집단으로서 국가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재난 재해대비 활동, 대민 지원 등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국방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第5章 國防管理 發展方向

우리 군의 국방관리는 국방기획관리제도를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국방부 차원에서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등 자원배분 및 집행체계를 연동구조에 의거하여 일관성있게 운용함으로써 국방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은 1979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제정한 이후 수차에 걸쳐 제반 제도 및 업무수행 체계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본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최근에 국방예산의 획득여건이 변화되고 무기체계가 고가, 첨단화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획·계획단계에서 정부재정으로부터 국방부문에 투입된 재원규모에 대한 사전예측이 매우 중요하나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 매년 계획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첨단무기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제도상 다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투명성은 증대되나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기획문서를 전산화하고 유사 문서체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무기체계가 과학화, 고도정밀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기술집약형의 군구조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인력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사기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직업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인력 정책 면에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총체전력관리 개념에 의하여 현역, 예비역, 군무원, 민간인력을 상호연계하여 관리하며 인력구조, 인사관리제도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육훈련 정책 면에서는 합동군사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장교양성교육제도를 개선하며, 교육훈련을 과학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 및 복지정책 면에서도 해외시찰 확대, 보수 및 수당체계개선, 휴양 및 레저시설 확대 등 제반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장기복무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활동도 강화하여 전 구성원이 평생 직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전에서는 국방군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수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대전뿐만 아니라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반 군수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각종 군수관련 전산화 사업을 하나의 체계에 연동시키고 군수기능별 정보체계를 새로이 설계하는 통합군수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군수지원제도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효율적인 군수지원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군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국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방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여 국방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추세대로 국방비가 배분된다면 미래안보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집약형의 방위력 개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의 주변국가들은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군사력을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우리 군도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고 국력에 걸맞는 정치,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은 과학적인 국방자원 관리제도를 정착하고 자원관리를 극대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국방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국방비 확보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第 5 部

國民과 軍

第 1 章　國家發展과 軍의 役割

第 2 章　兵務行政

第 3 章　軍·社會關係 發展方向

第 1 章　國家發展과 軍의 役割

군의 기본임무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이를 승리로 종결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군이 기본적인 군 임무수행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른바 군의 사회적 역할은 전쟁의 억제와 수행이라는 기본임무와 대비되는 기능으로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 국민 편익 증진 등 전쟁 이외의 타부문의 요구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국토방위라는 기본 소명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기여하여 왔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땐 앞장서서 지원해 왔으나,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범국가적 개혁과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새로운 국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 전반에 걸쳐 제도와 정책의 쇄신을 단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군발전 추세와 통일에 대비하여 선진 국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국방정책 개발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날 사회부문에서는 고도의 산업화·정보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내의 각 조직체들은 이에 부응하여 혁신적인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도 이와 같은 사회발전 추세와 국민과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민군관계는 과거의 단선적인 관계로부터 복합적인 의존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第1節 國家施策 具現

1. 世界化 推進

가. 국방분야의 세계화 개념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란 대내적으로는 일류화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분야의 세계화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진국 군에 비해 손색 없는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지역내 안정과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내외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다.

나. 세계화 필요성

냉전종식 이후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위협의 범위 또한 확대됨에 따라, 안보분야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국방환경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배분이 요구되어 국방예산의 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및 우수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현 시점은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우리 군도 현재의 국방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 아래 우리 군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국력성장에 걸맞는 선진 정예국방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를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방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분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추진 과제

우리 군은 국방분야 세계화 추진을 위해 주변 안보환경과 제반 국방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를 중점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선진국 수준의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의 내실화를 통한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 국방의 청사진 제시를 위한 중장기 국방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반 대국민 신뢰증진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

둘째, 21세기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내외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미 군사관계 또한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보협력 방향을 공동 모색해 나가는 한편, 평화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제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셋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군의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와 민간부문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현재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불편해소, 편익도모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군용시설 교외이전 등의 제반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장병 기술 인력양성 등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의 환경보전정책에도 동참하여 환경보전과 오염 방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歷史 바로 세우기

가. 국방분야 역사 바로 세우기의 개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모든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민자존과 민족정기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진 한국을 창조하는 데 기초를 닦는 대과업인 것이다. 과거 국가발전과 민주화에 역행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저해요인들을 찾아내어 앞으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후

손들이 正道를 걷게 하는 조치가 곧 역사 바로 세우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국가사회가 반드시 감당해 내야 할 과업인 것이다.

우리 군은 창군 이후 조직정비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25남침전쟁을 맞았으나 침략자를 성공적으로 격퇴, 국가를 구한 훌륭한 戰史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군은 피폐되었던 국가의 재건사업에 동참하면서 자유수호를 위한 월남파병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 책동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의 굳건한 초석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한때 일부 군 지도자들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 군은 신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국방분야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 성찰을 통해 군의 과거 행적을 냉철히 반성하고 잘못된 의식과 제도를 쇄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군은 이를 통해 드러난 과오와 구폐를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스스로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사회 속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며, 군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군발전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나. 국방분야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과제

우리 군은 시대적 과제인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국방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사실에 입각한 軍史의 기록 정리사업이다.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굴곡과 파행을 초래하였던 12·12 및 5·18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군은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군 나름대로 이 사건들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 정리하고자 한다. 역사적 공과를 사실 그대로 담은 정직한 군사를 남김으로써 역사의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군사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군사력은 국가 안전보장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동시에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사력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각종 재난상황과 무장조직에 의한 테러 등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요구가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나 국가위기시에 군사력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규와 지침을 검토하고 정비해 두는 것은 국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군사력 사용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군사기본교리에 반영하고 작전지휘 및 감독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안보 전문집단에 걸맞는 군대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군대문화는 예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군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구성원의 국가·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시킴으로써 건강한 군대를 보장해 주는 주요한 도구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과거 일부 군출신 인사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을 통해 군사작전식의 권위주의적 풍토가 일반사회와 정치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군대문화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유의 군대문화조차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군은 국방부문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우리 고유의 군대문화를 시대상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한다. 우리의 군사사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윤리적·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덕목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군대문화 창달과 정예강군 육성에 힘쓸 것이다.

넷째, 시대에 부합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군은 국방력을 건설, 유지하면서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성, 능률성, 자율성,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미 1993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작업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수조달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군 기강 확립을 비롯한 전반적 인사관리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관행 및 제도의 개선작업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다. 군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며, 군의 구성원 또한 국민의 일원이다. 따라서 民과 軍은 기본적으로 밀접한 순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의 근원을 냉정하게 규명하고 위민 국방정책을 적극 시현함으로써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대국민 신뢰증진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병무행정, 군사시설 보호, 각종 민원 업무 등 국민생활 및 기본권리와 관련된 제반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장병교육을 통한 군 본연의 임무수행이다. 우리 군이 생활하고 있는 병영은 국민교육의 도장이다. 우리 군은 1950년대 문맹퇴치를 비롯해서 군 생활을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력과 행동양식을 체득케 하여 국민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 근대화에도 기여하였다. 이제 우리 군이 선진군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장병정신 교육을 개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군은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의 과거사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한편, 국민에 대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여 미래 선진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第2節 軍의 社會的 貢獻

1. 國家技術人力 養成

군은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정밀무기 및 첨단과학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과학교 및 실무부대에서 실습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등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전투력의 핵심인 동시에 산업기술과 깊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군 기술인력은 국가산업 발전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고 있다.

한편 군에서 양성된 기술인력이 전역후 사회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복무중인 장병 및 군무원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1995년 8월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기술을 습득한 인력이 국가건설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편람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병들이 더욱 쉽게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이 기술병과교육을 통하여 양성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을 통하여 항공, 기계, 전기, 전자, 건축분야 등의 110개 종목에서 그 동안 약 17만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군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기술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급격한 기술진보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군 기술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취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습장비를 현대화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며 국가

시책과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검정종목을 확대하여 사회와 군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 國策事業 支援

우리 군은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정리사업 등 국토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해 왔다. 행주대교－임진각 간의 자유로 건설과 시흥－안산 간의 고속도로 공사, 경북 군위와 충남 부여지역을 대단위 기계화 영농지역으로 개선하는 농촌 경지정리사업 등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통일 후 남북 교류에 대비한 임진각－판문점 간 도로, 연천군 신탄리－철원군 월정리 간의 남북 연결국도 확장공사와 백령도의 남포리－두무진 간 1차 도로 개설공사를 1996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백령도 사항포－관창동 간 도로개설 및 대청도 고개낮추기 공사를 199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한편, 사후 평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국책사업 지원시 반영토록 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표 5－1　　국책사업 지원현황

사 업 명	지 역	공사 범위	비 고
고속도로건설	시흥－안산	12.5km	'94. 11. 완료
농촌경지정리	경북군위, 충남부여	93Ha	'95. 6. 완료
남북연결도로	• 자유교－판문점	6.5km	'93～'96. 6. 완료
	• 신탄리－월정리	10.7km	'95～'96. 6. 완료
백령도 도로개설(1차)	남포리－두무진	14.4km	'96. 6. 완료
백령도 도로개설/대청도 고개 낮추기(2차)	• 사항포－관창동	7.0km	'96. 12.
	• 대청2리－6리	2.0km	

3. 對民 支援

군은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민·군 협력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병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군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 및 기술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 등 유사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대민지원 및 봉사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민지원활동 지침을 제정하였고, 각 사업별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농촌일손돕기 운동 참여

최근 우리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경농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허용되면서 농촌 경제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 등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95년도의 농촌일손돕기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남부지역의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각급부대가 영농 기계화단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 및 기계영농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모내기, 벼베기 및 농지 정리를 실시하였고, 과수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가소득 증대 사업도 적극 지원하는 등 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부현황은 도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5-2 1995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현황

구 분	모내기	벼베기 보리 베기	밭작물 수확 과수원리	농기계 수리	농수로 도로, 하천 보수	관정 개발	방역 소독 등	계
실 적	2,104 정보	1,826 정보	1,271 정보	21,350 대	285km	624 개소	658 개소	7개분야
연인원 (명)	48,257	54,086	35,818	7,795	47,458	19,997	2,125	215,536

앞으로 군의 대민지원은 우리 농촌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단순한 인력지원보다 도로 및 하천보수, 방역 소독, 농기계 수리 등과 같이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기술분야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의 휴경논 모내기에도 적극 참여하여 식량증산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나. 대민봉사활동

우리 군은 평소에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해안방어 부대가 보유장비를 동원, 어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에게 연간 수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역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및 무의탁 노인 위로사업 등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부대단위로 대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각종 인위 및 자연적 재해에 대비하여 위수지역 사령부를 중심으로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군병원의 인력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대민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민·관·군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헌신적인 의료지원을 펼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1년 7월 1일부터 민간종합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의 4개 군 병원을 119 국가응급의료망에 가입시켜, 민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환자후송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의무 활동을 돕기 위해 군 의료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격오지 및 낙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 건강상담, 방역사업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

4. 災害·災難 救助活動

우리 군은 재해·재난시 응급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펼쳐 적시에 인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재난관리법에 항공기·선박 조난사고시 긴급지원을 위한 탐색구조본부

설치를 명문화하고, 이를 근거로 합동참모본부에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였다. 특히 육군 특전사 인명구조대 8개팀과 해군 해난구조대, UDT, 탄약처리팀 등 11개 특수팀과 헬기 12대, 수송기 2대, 함정 17척을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 24시간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등 상황근무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국방부훈령 제463호로 제정하였으며, 재해대책 업무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525호)을 개정하여 각국실의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한편, 수질오염, 환경재해, 긴급구조구난, 화생방, 테러 등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해들에 대하여 군 스스로의 자위와 함께 대민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재난구조 장비 예산 12억원을 전군에 배정하여 각군의 특성에 적합한 재난구조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재해·재난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수해복구지원

최근 각종 재해·재난시 군병력과 장비지원 현황은 도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5년에는 대구 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원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태풍 "페이"와 "제니스"에 의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방제지원 활동, 전국적인 수재 복구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충청지역에는 군 재해통제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충남·북 25개 시군 67개 지역에 1일 5,300

도표 5-3　　재해·재난 지원 병력/장비

구 분		기 간	병 력 (명)	장 비 (대)					주요지원실적
				계	중장비	함 정	헬 기	기 타	
남부지방 가뭄극복		'95. 1. 10. ~ 4. 20.	21,924	9,989	7,415	9		2,565	암반관정 117개소 개발 저수지 준설 82개소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4. 28. ~ 5. 2.	1,283	33	18			15	헌혈 427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6. 29. ~ 7. 29.	12,161	2,405	376			2,029	생존자구조 87명 시체발굴조 136구 물자지원 11,145점
3호태풍 페이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7. 24. ~ 8. 10.	15,613	392		173	19	200	기름쓰레기 제거 오일훼스, 유화제 유흡착제
	응급복구 지원	7. 25. ~ 8. 10.	5,020	130				130	비닐하우스 2,478동 도로제방복구 430km
	소 계		20,633	522		173	19	330	
7호태풍 제니스 및 집중호우		8. 24. ~ 9. 22.	213,686	5,622	5,268			354	농경지보수 40,977Ha 도로복구 122km 재제방복구 93km 산사태 보수 58개소 인명구조 551명
제1유일호 기름유출		9. 21. ~ 9. 29.	3,937	201		136	9	56	오일훼스, 유화제, 유흡착제
광양항유조선 기름유출		11. 18. ~ 11. 19.	640	14		12	2		오일훼스, 유화제
남부지방 가뭄극복		'96. 1. 11 ~ 3. 30.	3,371	2,025	1,820	9		196	암반관정개발 15개소 저수지 준설 10개소 수원지 준설 1개소
고성산불진화 및 응급복구		4. 23. ~ 6. 29.	23,902	5,422	1,004		28	4,390	건물철거 155동 수목제거 12Ha, 복토 1,500 오호천 준설작업 1.5km
계			301,537	26,233	15,901	339	58	9,935	

여 명의 병력과 장비 162대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피해복구활동을 하였다. 또한 육군 특전사는 서울 인근의 철새 도래지인 밤섬 지역일대에 장마로 인하여 퇴적된 오물제거와 수중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서울시와 환경보호 단체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남부지방의 겨울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주민식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식수운반 지원, 저수지 및 수원지 준설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병력 3,300여 명, 시추기 2대, 청수선 9척 등 장비 2,000여 대를 지원하였으며, 고성 산불 진화 및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5. 環境保全活動

환경 문제는 이미 일정 지역이나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며, 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한 환경위기의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미래 환경의 청사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환경 비전 21"을 구상해 왔으며, 1996년 3월에는 대통령이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시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기관 중 대규모의 단일 공공기관인 우리 군은 그 임무 및 기능, 특성상 국토 전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 측면에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군 스스로도 1995년도 군 직제개편시 국방부 및 각군에 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평상시 각종 군사 훈련이나 교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회 생산부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오염 부하량이 적으며, 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국가 전체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약 1% 미만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군 주둔지의 상당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대들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군의 환경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둔부대를 중심으로 오·폐수처리장 건설, 대도시 주둔부대의 청정연료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건설 등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도표 5—4와 같다.

그 동안 군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한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6년에 군 환경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전군의 환경업무 표준화를 위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군 환경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

도표 5-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구　　분	총 소 요	'95 이전(%)	'96 계획	'97 이후
오·폐수처리시설	891개소	386(43)	44	461
항공소음방지시설	12개소	4(33)	1	7
도시가스인입시설	66개소	49(74)	7	10
폐기물 소각로	205개소	78(38)	16	127

체적, 세부적 기준을 설정한 군 환경보전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 환경업무 전담요원 양성과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장병들의 환경기능사 시험 응시를 권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책에 따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4대강 수계의 상수원 직접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를 중심으로 1995년까지 386개소의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1996년에도 108억원을 투입하여 4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각종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 잔반 줄이기, 군수품 포장재질 및 규격 개선, 분리 수거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1만 8천1백 톤으로 1994년에 비해 32%가 증가하였으며, 생활쓰레기는 15만 8천4백 톤에서 10만 7천 톤으로 32.4%가 감소하였다. 군은 앞으로도 사단급, 군지사급 부대에 자원재활용종합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1996년에는 녹색환경운동의 취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도까지 여단급 이상 집단급식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처리장비의 단계적 확보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부대내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단급 부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을, 각군 군수사 및 군지사급 부대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소각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군 이래 누적되어 온 각급 부대의 지하매립폐기물의 실태 조사를 통해 폐기물 매몰 지도를 작성하고, 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수질의 오염 피해, 민원 유발 가능성, 부대이전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양환경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섯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1995년까지 수도권지역 주둔부대의 74%에 해당하는 49개 부대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인입하였고, 벙커C유 보일러에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군용 차량의 주기적 매연 측정 및 정비·관리에 힘쓰고, 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방진막, 방진벽, 덮개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섯째,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병행하여 "국토 대청결운동", "1부대1산1하천 가꾸기 운동" 등 자연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1995년 한 해 동안 유원지나 산천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약 16,53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또한 "그린스카우트 운동", "샛강 살리기 운동", "깨끗한 산하 지키기 운동" 등 민간환경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이외에도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각 지역단위별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군 주둔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실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지역 환경오염 종합실태 조사는 창군 이래 최초로 실시하는 환경관련 민·관·군 합동사업으로서 유류저장시설, 탄약고, 비행장, 폐기물처리장, 정비창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자연 상태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민통선 일부지역, 그리고 최근 환경오염 관련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199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 부대에 대한 기초 개황 조사와 표본조사를 마쳤으며, 1996년에도 전·후방 53개 부대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시료채취·분석 등의 방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종합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군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삶의 양식이나 소비 습성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앞에서 열거한 군 환경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위민군, 환경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第3節 國民便益增進 事業

1. 軍事施設 保護區域 規制緩化 및 制度改善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접적지역과 주요 군사시설(기지) 주변을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 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군은 군사시설 보호정책이 군 작전의 수행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6월에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면적의 20%에 해당하는 5억 3,500만 평을 해제하고, 경기도 및 강원도 일원 6개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 2,917만평을 북상 조정하는 한편, 민통선 북방의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주택의 신·증축이 금지되던 인구밀집지역 11개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 내의 주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1995년도에 국방부는 특별 민원감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차에 걸친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하였다.

첫째, 통제보호구역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민통선내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어업 기반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다.

셋째, 협의업무 위탁범위(농어민 소득증대 목적 원예단지, 수출단지 등)를 확대하였다.

넷째,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일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 고도제한을 완화하였다.

다섯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담당관을 상시지정 운용하고 있다.

여섯째,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규제사항에 대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국방부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軍 使用 私有地 整理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매수·보상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를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사유지와 유휴국유지와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일반회계예산뿐만 아니라 유휴국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도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보상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사유지 정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군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였고 현재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라도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거나 또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이 사유지를 정리한 현황은 도표 5-5와 같다.

도표 5-5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구 분	정리실적		
	계	'83~'94	'95
면 적 (만 평)	1,364	1,211	153
금 액 (억 원)	911	517	394

3. 軍用施設 郊外移轉

우리 군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노후된 군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있고 군사작전 및 보안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의 도심지 주둔 군부대들을 연차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도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2조 2,468억원의 예산으로 178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였으며, 1996년에는 36개 부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군이 직접 시행하는 군용시설 교외이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주체가 되는 기부 채납 및 양여방식에 의한 협의 이전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군용시설 이전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을

국가에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용시설 교외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표 5-6　　군용시설 교외이전 추진현황

구 분	지 역 별 추 진 실 적									
	계	서 울	부 산	대 구	대 전	광 주	원 주	춘 천	인 천	기 타
부대수	178	48	35	14	17	16	21	12	6	9

4. 民通線 出入統制 緩化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국가시책 구현 차원에서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영농범위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연고자 방문과 무연고자들의 성묘, 농번기 임시 고용인 등의 경우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을 위해 1주일 전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당일 출입통제소에서 주민등록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한 안보관광지 출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민통선 이북지역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계 답사 및 채집 기회를 부여하여 활발한 학술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군이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생활상의 편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4節 國防弘報 活動

1. 일일 프레스 브리핑 制度

일일 프레스 브리핑은 주요 국방정책 추진사항과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알리기 위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1일 1회의 원칙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국방부, 합참, 각군의 정책책임자와 실무자, 공보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있다.

199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리핑 부서 및 내용, 참석자 등 여러 측면에서 충실하게 실시됨으로써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냄으로써 열린 국방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표 5-7 일일 프레스 브리핑 현황

○ 내 용 별

구 분	보도자료 제공		설 명		해 명		엠 바 고		총 계	
	계	월평균	계	월평균	계	월평균	계	월평균	계	월평균
'95~'96	540	45	92	8	40	3	46	4	718	60
'94~'95	374	31	84	7	12	1	36	3	506	42
증 감	+166	+14	+8	+1	+28	+2	+10	+1	+212	+18

○ 신 분 별

구 분	차관보 이상	국(차)장급	과 장 급	공보관계자	총 계
계	33(5%)	107(15%)	103(15%)	475(65%)	718(100%)
월 평 균	3	9	40	40	

○ 부 서 별

구 분	정책실	기획관리실	1차 관보	2차 관보	합 참	각 군	기 타	총 계
계	105(14%)	35(5%)	81(11%)	84(12%)	78(11%)	256(36%)	79(11%)	718(100%)
월평균	9	3	7	7	6	21	7	

국방부는 지난 1년동안 총 718건의 사안에 대해 프레스 브리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506건에 비해 42%가 증가된 것이다. 또한 브리핑 참석자들도 본부 국(차)장 및 과장급이 30%를 차지하는 등 정책결정자와 실무자의 참석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일 프레스 브리핑제도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軍 弘報媒體 水準向上

우리 군은 홍보매체를 국민과 군이 다함께 보고 찾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국방일보는 외부 전문가 기고제를 도입하고 독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기사를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장병 투고기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을 통하여 군사전문 일간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월간 국방저널 및 국방화보는 대국민 홍보사항 게재, 편집방법 개선, 배포선 확대 등을 통해 국방전문지로서의 독자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부적인 군홍보 간행물 제작현황은 도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5-8 군 홍보 간행물 제작현황

구 분	배부기준	주 기	수 량	주요편집내용
국방일보	현역/예비군 부대	일일 (8면)	14만부	• 정부시책/국방정책 생활 정보 • 북한실상 • 특별정훈교육자료 • 부대활동상
국방저널	• 영관장교 이상 • 대외연구 기관/단체 * 전국판매소 시판(46개소)	월1회 (128면)	41,000부	• 국방정책,주변국 및 북한동향 • 무기체계, 군사전략 병무행정 • 대민홍보사항
국방화보	• 군 부 대 • 대외기관 • 해외무관부	연1회 (148면)	40,000부	• 국방부 인사주요동정 • 오늘의 각군 • 정예군사력 • 병영생활 실상

국군방송은 국민과 장병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군방송 청취권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4개 송신소 신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군 방송 시간표는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국군방송 시간표

구 분	매 체	방 송 시 간
AM 방송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 월~토요일 : 17 : 30-18 : 00 ○ 일 요 일 : 17 : 00-18 : 00 ○ 매 일 : 12 : 40-13 : 00
FM 방송	KBS 라디오	○ 매 일 : 06 : 00-08 : 00(2H) 12 : 00-13 : 00(1H)

군 영화는 CATV 및 일반 TV 매체에서도 방영할 수 있도록 작품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로마 국제 군사영화제에 출품했던 "해병혼"과 "여군 소대장" 2작품이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 군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현재 각급부대에 배부하고 있는 군영화 현황은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군 영화제작 및 배분현황

부 문	배부기준	주 기	활 용 목 적	비 고
교육영화	연대급 1부 (GOP 중대급)	연 4편	장병 정신교육	60분품
국방뉴스	〃	주 1편	주요국방소식 및 군 활동상 홍보	10분품
민간극영화 복제	〃	월 1편	장병사기진작 및 정서함양	100분품
대민홍보영화	〃	연 5편	민·군 일체감 조성 및 안보의지 고양	60분품
계기영화	〃	2편	계기별 민·군 일체감 조성 및 안보의지 고양	〃
우리의 국군	〃	월 2편	국민안보공감대 형성 및 대군 신뢰도 증진	30분품
호국극영화	〃	연 1편	대국민 안보공감대 형성 및 대군 신뢰도 증진	100분품

3. 軍 弘報媒體 多樣化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현황, 군의 방위태세, 발전된 병영의 참모습을 소개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6·25, 국군의 날 등 계기별로 특집 프로를 제작 방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방정책 및 군 활동상 등 국방관련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월 1~2회 "국방소식"지를 뉴스레터 형태로 15,000부를 제작하여 사회 주요인사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군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영화를 도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도표 5-11 국방 홍보영상물 K-TV 방영현황

구 분	규 격	지 원	방 영	비 고
국 방 뉴 스	10분품	주 1편	매주 2~3회	주 1편제작
우 리 의 국 군	30분품	월 1편	매주 1~2회	월 1편제작
홍 보 영 화	60~90분품	월 1편	매주 1회	연 12편제작

한편 국방홍보 세계화의 일환으로 한국군의 발전된 모습과 활동상을 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무관부에 국방화보, 국군의 날 행사 영상자료 등 군 홍보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장병들이 올바른 한국관을 정립하고 한국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모범장병을 초청하여 문화유적지와 산업시설을 견학시키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1995년에 국난 극복사의 주요 장면을 화폭에 담은 호국기록화 59점을 도록집으로 제작하여 이를 각군 및 국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한 호국문예작품을 매년 시, 소설, 수기, 시나리오 등 부문별로 공모하여 각 부문 우수작으로 호국문예집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군가를 편곡하여 음반이나 CD로 제작·보급하는 한편, 군악의 발전과 군가 대중화를 위해 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하고 본 연구원의 주최로 매년 2회 개최되는 한강군악제 행사를 적극 후원하는 등 군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第2章 兵務行政

군소요 인력 충원을 위한 우리 나라의 병역제도는 國民皆兵主義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병제를 병행한 의무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병무행정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방대한 규모의 병역의무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인력자원을 적기에 충원하는데 운용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생활여건의 향상과 사회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산업체에 기능인력을 지원하는 등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第1節 兵役制度 改善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된 상근예비역 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거주지 단위의 병역자원 관리 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등 지금까지 109개의 병무행정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개선해 오면서 복무형태별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 새 兵役制度의 活性化

가. 상근예비역 제도의 보완 발전

상근예비역 제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비군의 대체능력을 가진 예비역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서 소정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는 초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해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고 신체등위 3급, 4급자 중에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권역을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지역으로 확대하고 학력,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입영자간 자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군 소요인원의 적정 충원을 도모하고 있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아직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상근예비역의 복무형태와 복무기간, 지원제 운영상의 문제 등 일부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공익근무요원소집 제도의 개선

공익근무요원소집 제도는 종전의 방위소집제도 폐지 이후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업무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대체 병역제도로서 國民皆兵主義 원칙에 따라 병역의무를 예외없이 부과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잉여자원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시행 첫해인 1995년도에는 도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감시 등 8개 분야에 2만 5천여 명이 배치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무분야를 확대하는 등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5-1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운용규모(1995년도)

복　　무　　분　　야	인　원 (명)	비　율 (%)
상수원 보호	1,594	6.3
산림보호	12,135	48.3
하천, 공원, 녹지관리	2,555	10.2
교통질서 계도, 과적 차량단속	6,253	24.9
고궁·능보호	65	0.3
시설경비	337	1.3
국제협력봉사	20	0.1
우편분류	2,162	8.6
계	25,121	100

이 제도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까닭에 그 엄정한 시행을 위해 소집된 자의 복무기관, 복무분야 및 복무형태에 대한 병무청의 지정관리가 불가피하나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복무분야 등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 즉 복무기관의 업무 특성상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복무기관장이 직권으로 근무분야를 확대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업무량과 업무형태의 변동에 따라 근무시간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복무기관장의 인력운용상의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다. 거주지단위 자원관리제도의 정착

병역자원의 거주지단위 관리제도는 산업화, 도시화로 산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본적지 거주자가 감소되고 주민관리 전산체제가 정착되는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 관리상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병역의무자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1995년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의 남자를 호적부에서 일일이 발췌한 다음, 본적지 시·구·읍·면 단위로 호적부와 연계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징병검사와 현역병입영도 본적지에서 실시하였다. 거주지단위 자원관리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18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를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일괄 적출함으로써 자원관리와 선병 기초자료 조사 기관이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지 읍·면·동의 장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병검사와 현역병입영도 거주지 단위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본적지를 왕래하던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었고 각종 병역관련 민원도 가까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하게 되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자원관리와 집행 업무의 일원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망의 연계활용 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병역자원관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國民便益 增進을 위한 規制緩和

가. 군복무필자 귀국신고제도 폐지

30세 이하 군 복무필자의 국외여행시 1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도록 한 귀국신

고 제도를 폐지하고 1995년 12월 6일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군복무필자의 국외여행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나.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 범위 확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비지정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술 또는 1개월 이상 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6년 7월 1일부터는 재학생 입영 연기자도 진단서상의 질병정도가 5급 내지 6급에 해당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한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직접피해를 당한 예비군에 대하여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에 의거 해당연도의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면제함으로써 피해복구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국외여행 목적 변경 규제완화

방문, 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유학으로 여행목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을 경우, 기간연장을 허가함으로써 귀국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第2節 열린 兵務行政 實現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는 국민의 총체적 안보의식 제고와 국가기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병역의무가 예외 없이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를 과학화하고 병역처분 과정과

처분내용을 공개하여 열린 행정을 펼침으로써 의혹의 여지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정립해 가고 있다.

1. 徵兵檢査

가.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의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징병검사는 보다 우수한 자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비롯해 인성검사, 적성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병역처분을 하고 있는데 징병검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체검사이다.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검사기 등을 보강하는 한편, 병리검사 장비를 설치하여 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 징병검사장에 종합병원급 수준의 최신 검사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체검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정밀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병역복무 형태를 결정하고 있다.

나.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은 자원의 활용성과 군소요 인력의 충원 및 군전투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안보환경 변화, 병역자원 증감 등 제반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설정하는데, 1996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은 도표 5-13, 5-14와 같다.

도표 5-13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학력 \ 신체등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도표 5－14　　병역 감면 대상 및 처분

대　　상(사　　유)	병　역　처　분
○ 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상이정도 5급 이상자가 있는 경우의 1인	보충역(공익근무요원 6개월 복무)
○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 ○ 2년 이상 수형자(집행유예 제외)와 1년 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 사람 (단, 6년제 대학의 5년차 이상자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 ○ 고아, 귀화자 ○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와 父의 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 신체등위 7급 사유 1년 초과자	제2국민역 (전시근무 소집 대상)

※ '74. 12. 31. 이전 출생자로서 부사망 독자, 부모 60세 이상 독자, 2대 이상 독자는 보충역 처분하여 18개월 복무('72. 12. 31. 이전 출생자는 6개월 복무)

다. 징병검사 과정 및 검사현황 공개

병역의무 이행의 첫 과정인 징병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병역처분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수검 장정의 가족은 물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과정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 직후에 진료과목별 진단결과가 기록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개개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수검자와 그 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징병검사 관련자료는 군복무 적격여부의 결정 등 국방분야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었으나, 1996년부터 검사결과 현황을 정부통계연감에 수록하는 등 적극 공개하여, 정부의 복지, 보건 등 기본정책 수립 및 개인이나 단체의 산업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징병검사 편의 제공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이 불편한 10개 시·군·구 지역 거주자

에 대하여 생활권역에 소재한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출타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였다.

도표 5-15 인접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 활용현황

거 주 지 역	관할 검사장	인접 검사장
• 서울북부지역(도봉, 강북, 노원구)	서울 징병검사장	의정부 징병검사장
• 강원도 철원군	춘천 징병검사장	〃
• 경남 동부지역(울산시, 양산군)	창원 징병검사장	부산 징병검사장
• 경북 울진군	대구 징병검사장	강릉 징병검사장
• 강원 정선, 평창군	춘천 징병검사장	〃
• 경기 가평군	의정부 징병검사장	춘천 징병검사장

2. 열린 兵務行政

가. 병무행정상담/설명회 활성화

(1) 이동병무상담소 운영

병무민원을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 처리함으로써 바쁜 일상의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의 여론을 병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1993년 이래 운영하고 있는 이동병무상담소는 병역의무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대학입시학원 등 민원소요가 많은 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 시기에는 본청과 지방청별로 대학을 방문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어 이제 막 병역의무 이행의 적령기에 이른 신입생들의 병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학업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개인별 상담을 하고 재학생 입영원 등의 민원서류도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학 이동병무상담소 개설기간 중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대학을 방문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이동병무상담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2) 병무행정 공개설명회 개최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징병검사 과정을 참

관하도록 하고,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어 병무 행정의 전 과정을 담은 홍보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병역에 관해 평소에 궁금해 하던 사항을 토의를 통하여 해소시키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나. 병무행정 홈 서비스 체제 확충

(1)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ARS)설치 운영

병무민원 상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화상담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반복적 민원으로서 통화량 폭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무민원 자동안내 시스템(ARS)을 1992년 서울청에 시범설치 운영한 이래, 1994년에는 부산, 광주, 수원청에, 1995년에는 대구,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청에 설치하였고, 1996년에 본청을 비롯하여 제주, 의정부, 강릉청에 설치함으로써 본청과 13개 전 지방청이 운영하게 되었다.

자동안내전화에 의한 병무안내는 일반적인 자동안내전화와는 달리 전화와 주전산기를 연결하여 병무 데이타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영일자, 군 지원 합격여부 및 출원한 민원서류 처리결과 등 총 70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1995년의 안내 실적은 260만여 건으로 1일 평균 이용량은 7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2)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안내 확대

병역법 개정 등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병무민원을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데이콤(DACOM)의 천리안과, 한국 PC 통신의 하이텔 등 통신 서비스회사 컴퓨터에 286개 항목의 각종 병무민원 안내사항을 사례별로 입력하여 병역의무자가 언제든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병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PC 이용자는 병무행정 주전산기와 PC 통신회사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입영일자, 입영연기 등 현재의 병역처분 상태를 신속,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3월에는 나우콤의 나우누리를 안내매체로 추가하는 한편,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명단을 안내항목에 추가하는 등 안내매체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점증하는 PC통신 가입자들의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3) FAX를 이용한 민원안내

자동안내전화, PC 통신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정에서도 민원서류를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FAX 병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FAX를 통하여 275개 항목의 민원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병무민원 서식을 개인 FAX를 통하여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19세 입영희망원, 상근예비역복무지원서, 각군지원입영 사유, 입영기일연기원 등은 FAX로도 출원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종류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FAX 출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 국민편익증진 및 산업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

(1) 본청 민원상담실

그 동안 병무청에서는 시·도 단위 13개 지방청에만 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도권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민원인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지방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1996년부터 병무청 본청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제반 민원상담은 물론 전국 지방청과 전산 및 통신망을 연결하여 입영일자 등 병적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지방청으로 이첩, 처리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2) 수원지방병무청 인천출장소

1995년도에 인천 상설징병검사장을 설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천지역 징병검사대상자의 불편은 해소되었으나, 병역관계 서류를 출원하거나 문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수원지방병무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주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에 인천광역시에 "수원지방병무청 인천출장소"를 설치하여 제반 병무 민원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산업인력지원센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병역 의무자 사이에 상호 원활한 취업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병무청의 본청 및 지방청에 "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PC, ARS, FAX 등 병무행정 홈(HOME)서비스 장비와 기업체 소개책자, 보충역 편입자 명부 등을 비치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第 3 章　軍·社會關係 發展方向

1990년대에 들어 우리의 국방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군·사회관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 정부의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개혁작업이 진행되면서 군 또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개혁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국방분야의 개혁작업은 군 인사개혁으로 시작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조달제도 등의 전면적 개편으로 이어졌으며, 군 기강 확립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사관리 개혁과 아울러 "열린 병무행정" 추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개선 등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방개혁은 단순히 고질화된 군 운영의 부조리와 불신요소를 척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현 안보환경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미래상황을 모두 고려한 바람직한 군 모습을 설계하는 또 다른 개혁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작업의 요체는 군이 정부의 개혁·발전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군과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데 있다. 군은 현재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선진국 군 수준의 정예강군 육성, 21세기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역할 개발 등을 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의 일류화, 정예화를 통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영토 보호와 주권 보장이라는 군의 기본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군의 모든 역량이 국가사회 발전에 전폭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세계화를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방분야의 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군은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적극 호응하여 국방분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진력하고 있다. 국방분야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 군의 발자취 속에서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를 규명해 내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군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軍史의 기록 정리, 군사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개념 정립 및 제도 정비, 안보 전문집단에 걸맞는 군대문화의 개발 및 정착, 시대적 요구에 맞는 관행과 제도의 정비,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 정립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굴절된 과거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나아가서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군은 이와 같은 개혁작업 외에도 종래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각종 대민 활동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업무개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 지원과 재해·재난 구조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의 대민 활동은 이제 군의 일상적 업무와 같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같은 국민편익증진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 있게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병역법의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각종 병역 처분과정을 공개하는 등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열린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진행된 국방개혁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 추진된 군의 발전 노력은 군이 제자리를 찾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구각을 깨고 군의 과거 일부를 부정해야 하는 아픔을 수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든 과업이었기에 우리 군은 오늘날 당당히 거듭날 수 있었고, 이는 정부의 계속되는 개혁작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군은 변했고, 국민도 과거와는 달라진 군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사회는 이질적 집단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 집단이라는 균형된 감각 위에서 민·군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이해되고 신뢰될 때에만 우리의 국방은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군은 오늘의 시대상황 속에서 국가사회가 군에게 부여하는 기대와 요구를 다시 확인하고, 국가와 국민 속에서 그 위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갈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군 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군의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견실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본연의 임무 수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진군"을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21세기의 안보상황과 우리 국력에 걸맞는 국방태세, 전략개념, 군구조, 군사력 건설, 국방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自主國防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資　　料

資料

資料 1　第27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議(SCM) 共同聲明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제27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5년 11월 2일과 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양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1995년 11월 2일에는 제1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김동진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죤 샬리카쉬빌리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페리 장관은 서울 체류기간 중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하고 공동안보 관심사에 대하여 요담하였다.

2.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전략환경을 재평가하고,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미간 장기 안보협력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3. 양 장관은 1994년 10월 21일 미·북 기본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역 안정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북한 핵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에 명기된 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남·북한간 재래식무기 통제 및 여타 신뢰구축 조치가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과 대치상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제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해 성실하게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위하여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국제적 약속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해 나가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또한 북한이 계속적으로 재래식 공세 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 및 목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억제에 주력하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군이 우수한 준비태세, 전문성, 군기 및 경계태세와 높은 사기를 갖춘 연합방위전력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수립한 방어계획, 전략·전술 및 제반 지원절차들이 빈틈 없이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페리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 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하였다. 이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전력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가 환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데 만족하면서, 1995년도 실시된 각종 연합군사훈련이 전쟁억제 및 연합전비태세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에 공감하였다.

6.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이행되어야 함을 재강조하고, 1992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 조치들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1953년의 군사정전 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7. 양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와 관련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하고,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에 대해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증액하며, 1996년도에는 미화 3억 3천만불을 분담할 예정이다. 페리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긴요한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한국정부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8.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의 SCM 분과위원회가 SC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양국의 군수, 방위산업 및 공동연구개발계획을 포함한 기술협력을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9. 양국 대표단은 제27차 SCM 및 제17차 MCM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 장관과 페리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199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페리 장관은 이 장관과 한국 대표단에게 따뜻한 환영과 세심한 배려는 물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資料 2 大韓民國 國防部와 이스라엘 國防部間 軍事交流 協力增進을 위한 諒解覺書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스라엘 국방부(이하 "당사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타 국제협정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군사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이 양국군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간의 군사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제 2 조 교류협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대한 군사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군 인사교류
2. 상호 군사교환 교육
3. 방산 및 군수협력
4.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분야 발굴

제 3 조 교류협력 추진방법

1. 당사자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입안 및 체결할 수 있다.
2. 국방정책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각의 공관원을 통해서 시행한다.
3. 회의시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모든 회의록과 협정서는 한국어, 히브리어, 영어로 작성된다.

제 4 조 분쟁해결

1.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양해각서 및 본 양해각서에 의해 체결된 분야별 합의서에 따른 군사교류협력의 이행은 제3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 보　　안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 및 물자는 1995년 8월 27일 당사자간 체결된 군사비밀 보호협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가 보장된다.

제6조 비　　용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실무자급 상호방문간 비용은 자국 부담으로 한다.

제7조 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타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폐기결정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3.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5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종료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8조 연락 및 협조

1. 연락 및 협조부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실과 이스라엘 국방부 외사국으로 한다.
2. 관련사안 발생시마다 당사자간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1995년 8월 27일 텔아비브에서 한국어, 히브리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서명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　이　양　호

이스라엘 국방부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　이츠하크 라빈

資料 3 大韓民國 國防部와 인도네시아 國家安全部間 國防軍需 및 防產協力에 관한 諒解覺書

대한민국 국방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안전부(이하 "당사자"라 칭한다)는 양국군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국방군수·방산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을 고려하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양국의 방산뿐 아니라 양국군에 이익이 될 것을 인식하며,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 활동이 자국의 관련 국가정책, 법률 및 규정과 일치되어야 함을 양해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 적

1.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양국간 국방군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군의 국방군수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방산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
2.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양국간 이익을 위하여 국방군수지원 및 방산물자 생산, 구매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2조 협력방법

1.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은 상호 합의에 따라 조달, 보급, 정비, 수송 등 국방군수관련 분야와 방산물자의 공동연구, 생산, 구매, 판매 등 방산 관련분야를 포함한다.
2. 양 당사자는 각기 승인된 바에 따라 양국군의 각 부서간 적절한 접촉 및 협력을 권장하고 용이하게 한다.
3. 양 당사자는 필요시 본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한 시행약정서를 체결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방군수 및 방산 공동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본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조에서 정한다.

제3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국방군수 및 방산 협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군수·방산물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협력
2. 군수·방산물자 및 용역의 이양에 관한 협력
3. 국방군수·방산분야 관련 인원의 교류

4. 국방군수, 방산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5. 합동 국방군수·방산 세미나 및 회의 개최
6. 상호 군수지원을 위한 절차 개발
7. 군수훈련에 관한 협력
8. 공동관심 사항에 관한 공동 연구와 공동생산
9. 방산물자의 상호구매 및 제3국 수출에 대한 협력
10.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 4 조 국방군수·방산공동위원회

1.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국방군수·방산 분야의 상호협력문제를 처리할 한국·인도네시아 국방군수·방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 7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하며, 대한민국 국방부 제2차관보와 인도네시아 국가안전부 물자, 시설 및 용역 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당사자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며 시기, 장소, 의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양 당사자간의 접촉 창구로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과 인도네시아 국방 공공관계 및 대외협력국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다음 과제를 수행한다.

   가. 국방군수 및 방산협력 가능 분야 확인

   나. 공동 관심사항 제안

   다. 국방군수, 방산협력사업의 조정

   라. 국방군수 및 방산협력의 촉진 및 지원

   마. 군장비, 물자 및 용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협조

   바. 시행 약정서의 검토 및 건의
6. 군수·방산공동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자국 국방당국의 승인 후 시행한다

제5조 국방군수협력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승인하는 각국의 적절한 정부기관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며 촉진한다.
2. 공급당사자는 어떤 시행을 약정하는 것에 앞서 수령당사자가 공동위원회나 공동위원장을 통해 방위물자, 시설 용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최대한 협조한다.
3. 공급당사자는 수령당사자가 공급당사자에게서 생산된 방위물자에 대해 품질보증을 획득하는 데 협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4. 이 양해각서하의 협력활동 및 협력절차 분야는 시행약정서 그리고 또는 양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서로 명기한다.

제6조 방산업체의 협력

1.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는 관련 방산업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각 당사자는 그 관할하에 운영되는 관련업체에 본 협정의 기본원칙을 통보하고, 그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규칙을 설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방산업체가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이 양해각서하에 방산업체에 관한 어떠한 협력의 시행은 시행약정서 그리고 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서로 명기한다.

제7조 산업재산권

획득당사국은 공급당사국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으로 제공한 기술적 정보가 산업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합법적인 사용이나 요원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조 건

1. 시행약정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각 당사자 또는 참여기관, 기구 및 기업체는 본 양해각서에 의한 참여비용과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각기 부담해야 한다.
2.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규와 가용 자금 내에서 수행된다.

3.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업이나 계획에 관련된 상대국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해 출입에 따른 편의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분쟁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공동위원회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국제사법재판소나 제3자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다.

제10조 보 안

1.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물자, 사업계획, 설계도안, 기술내역서 및 여하한 정보라도 비밀생산 당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비밀생산국이 요구하는 동안 비밀유지가 준수 되도록 한다. 모든 비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 국 어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대 외 비
인도네시아어	상 아 르 라 하 시 아	라 하 시 아	콘 피 맨 샬	터 바 타 스
영 어	탑시크리트	시 크 리 트	콘 피 덴 셜	리스트릭티드

2. 이 양해각서하에서 방위정보, 문서, 기술자료 및 문자가 비밀이거나 비밀이 아닌 것을 막론하고 제3자(업체 포함)에게 이양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1994년 6월 1일에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인도네시아 정보국간 체결된 "비밀보호 협정"을 준수한다.

제11조 효력발생, 수정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2. 본 양해각서의 수정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한다.
3.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정당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10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5. 본 양해각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90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안전부 간 상호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폐기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국방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본 양해각서는 1995년 10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서명본은 정본이다.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인도네시아 국가안전부
군 수 국 장	물자·시설 및 용역국장
육 군 소 장 안 광 남	마 데 사 다 하

資料 4　韓·美 軍事關係 50年 日誌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45. 8. 15.	• 일본, 무조건 항복. 미·소의 남북 분할점령을 규정한 일반명령 제1호 채택
9. 7.	• 맥아더 원수, 포고령 1호 발표. 남한에 대한 미군정 실시 발표
9. 8.	• 미육군 제24군단, 제7보병사단, 한국(인천) 도착
11. 13.	• 국방사령부 설치(초대 국방사령부장에 시크 헌병사령관 임명)
1947. 10. 30.	• 유엔, 유엔한국위원단 설치 및 정부수립후 미·소군 철수안 결의
1948. 4. 8.	• 미국가안보회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결정(NSC 8)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군정 종결
8. 24.	• 한·미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
12. 10.	• 한·미 원조협정 체결
1949. 1. 1.	•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
6. 30.	• 주한미군 철수 완료
7. 1.	•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 발족
1950. 1. 12.	• 애치슨 미국무장관, 극동의 전략방위선에 대해 언급
1. 26.	• 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및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6. 25.	• 6·25 남침전쟁
6. 27.	• 트루먼 미대통령, 해·공군에 한국 출격 명령
6. 30.	• 트루먼 미대통령, 맥아더 원수에게 지상군의 한국 출동 등 지시
7. 7.	• 유엔 안보리, 미군 지휘하의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안 가결
7. 12.	•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 체결
7. 14.	•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위임
11. 30.	• 트루먼 미대통령, 한국불포기 엄명, 필요시 원폭사용 불사 발언
1951. 5. 17.	• 미국가안보회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종결 방침 확정 (NSC 48/5)
7. 10.	• 휴전회담 개시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53. 6. 6.	•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용의 친서 송부
7. 12.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휴전협정 합의 등 발표
7. 27.	• 휴전협정 체결
10. 1.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 7. 27.	• 한·미 정상회담(워싱턴)에서 휴전후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해 협의
8. 18.	• 미국방성, 주한미군 6개 사단중 4개 사단의 철수 방침 발표
11. 18.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유엔군사령관에 위임
1957. 7. 1.	• 유엔사,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이동
1958. 1. 28.	• 유엔사, 한국에 대한 원자무기 도입 사실을 공식 발표
1959. 12. 29.	•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 한국군 정원 책정(63만명)
1961. 5. 26.	• 최고회의·유엔사, 한국 혁명군의 작전지휘권의 유엔사 복귀 공동 발표
11. 24.	•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방미.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개최
1964. 12. 19.	• 존슨 미대통령,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는 친서를 송부
1965. 5. 17.	• 한·미 정상회담에서 월남 지원 협조, 대한 차관 제공 등 합의
7. 11.	• 미육군 제1기병사단, 미국으로 복귀. 제2보병사단으로 대체
1966. 3. 7.	• 미국, 한국군의 월남증파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 통고('브라운각서')
7. 9.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 대전협정 등 폐기
1968. 1. 21.	•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기도
1. 23.	• 미해군 푸에블로호 납북. 주한미군 비상령 선포
4. 18.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침략시 미군지원, 대한 군원 증대 합의
5. 27.	• 제1차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서 북한도발 주시, 군수공장 설립 합의
7. 9.	• 유엔사 교전규칙 변경, 북한의 DMZ 침범시 한국군 자체대처 가능
10. 13.	• 제1차 포커스렌즈 훈련 실시
10. 15.	• 한·미 작전기획참모단 조직(한국 방위작전기획에 한국군이 참여)
1969. 4. 15.	• 미해군 E-121 정찰기, 동해상에서 북한에 피격, 추락
7. 25.	• 닉슨 미대통령, 아시아 국가 부담을 강조한 '괌 독트린' 발표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71. 3. 27.	• 미육군 제7보병사단 철수
4. 22.	• 한·미간 M16 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7. 1.	• 한·미 제1군단 창설(미육군 제1군단 해체)
7. 12.	• 제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국방각료회담 개칭) 개최(서울)
1974. 11. 11.	• 유엔사, 북한의 남침용 땅굴(제1땅굴) 발견 발표
11. 25.	• 한·미간 한국내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12. 12.	• 유엔사, 작전명령권이 유엔에서 미합참으로 귀속되었다고 발표
1975. 5. 5.	• 을지 훈련(한국), 포커스렌스 훈련(한·미) 통합
1976. 6. 7.	• 제1차 한·미 연합군사훈련(팀스피리트 훈련) 개시
8. 18.	•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발생, 한·미군 경계태세 강화
1977. 3. 9.	• 카터 미대통령, 향후 4~5년간 주한 미지상군 철수계획 발표
1978. 4. 1.	• 카터 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계획 6천명을 3천4백명으로 축소 발표
7. 7.	• 제11차 SCM(샌디에고)에서 군사위 및 연합사 설치 합의
7. 8.	• 한·미 군사위, 전략지시 1호 시달
11. 7.	• 한·미 연합사 창설(초대사령관 베시 대장, 부사령관 유병현 대장)
1979. 7. 1.	• 한·미 정상회담(서울)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 언명, 3자회담 제의
7. 20.	• 카터 미대통령,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를 1981년에 재검토 발표
10. 26.	•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전국(제주도 제외)에 계엄령 선포
1980. 3. 4.	• 한·미 1군단을 한·미 연합야전군사(CFA)로 개편
1981. 2. 3.	•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 안보공약 강화 합의
4. 7.	• 미국방성, F-16 전투기 36대의 대한 판매계획 발표
1982. 1. 3.	• 군정위 유엔군측 대표, 북한에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 초청
1983. 9. 1.	• 대한항공 007기, 소련에 의해 피격, 추락. 269명 사망
10. 9.	• 북한의 테러에 의한 랑군 사태 발생, 고위관료 17명 순직
11. 12.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시 미국의 직접 반격, 안보공약 강화
1985. 7. 18.	• 미국무성, 북한에 소련으로부터 미그 23기 40~50대의 제공 확인
1986. 12. 16.	• 미국무성, '87년부터 대한 군사판매차관(FMS) 공여 종결 발표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87. 11. 29.	• 대한항공 727기, 북한 공작원 테러로 추락. 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
1988. 1. 20.	• 미국무성,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 3개 항의 대북 제재 조치 발표
5. 11.	• 미국방차관 내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및 미해군기 정비 지원 요구
1989. 8. 2.	• 미의회, 넌·워너 수정안 채택
9. 7.	• 미태평양사, 태평양 해역에서 PACEX 연합훈련 실시
1990. 2. 15.	• 한·미 국방장관회담, '90년부터 3단계 미군감축 및 역할변경 합의
3. 24.	• 한국 해군, 환태평양(RIMPAC) 훈련에 최초로 구축함 2척 참가
1991. 4. 19	• 미국방성 보고서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구상(EASI) 발표
6. 25.	•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체결
11. 13.	• 제22차 SCM, 방위비분담,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등 합의
1991. 1. 25.	• 한·미간 주한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설치 협정 체결
3. 25.	•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최초로 한국군 장성(소장) 임명
3. 28.	• 한, FX사업 기종을 미 GD사의 F-16 확정, 120대 도입 계획 발표
5. 19.	• 미,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1단계 7천명의 철수 개시 발표
10. 1.	• 판문점 북쪽 DMZ 지역의 주한미군 경계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양
11. 21.	• 제23차 SCM, 북한 핵개발 종식까지 주한미군 감축 연기 합의
12. 18.	• 노태우 대통령, 한국내 핵무기 부재 선언
1992. 2. 19.	•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비준교환
6. 26.	• 한·미 연합야전사 해체.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이양
10. 8.	• 제24차 SCM, 평시 작통권 환수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협의
1993. 3. 12.	• 북한, IAEA의 대북 특별사찰 요구와 관련, NPT 탈퇴 선언
7. 10.	• 한·미 정상회담(서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협의
10. 9.	• 클린턴 미대통령, 소말리아에 한국의 유엔 PKO 파견 요청
11. 4.	• 제25차 SCM, 북한의 핵사찰 수용 재촉구
1994. 8. 18.	• 한·미간 전시에 미해군 제7함대를 연합사에 배속하기로 합의
10. 6.	• 제26차 SCM, 평시 작통권 환수, 신속억지전력 전개 합의
10. 21.	•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1995. 1. 20.	• 미국, 대북 경제제재 1단계 완화조치 발표
2. 27.	• 미국방성, 동아·태 전략보고(EASR) 발표
7. 27.	• 한·미 정상회담, 대북전략고위협의체 합의. 한국전 참전비 개막
11. 3.	• 제27차 SCM, 방위비분담 연증가율을 향후 3년간 10%로 조정

資料 5　主要 對外軍事 交流協力 日誌

일　정	내　용	일　정	내　용
1995.			
1. 10~12.	일본 방위청 경리국장 방한	7. 10~15.	국방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1. 17~20.	태국 공군인사참모부장 방한	7. 18.	미국 국무부 동아·태 국장 방한
1. 19.	미 합참의장 방한	7. 25~28.	말레이시아 육군총장 방한
1. 27.	미국 국무장관 방한	8. 2.	미국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방한
2. 8.	미국 한국전참전기념사업회장 방한	8. 16.	미국 방위비 분담대사 방한
2. 20~28.	정책실장, 미국, 일본 방문	8. 24.	미국 상원의원(1명) 방한
2. 24.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8. 26~29.	한·이스라엘 국방장관 회담(이스라엘)
3. 21.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8. 28.	미국 해군차관 방한
3. 27.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8. 31~9. 3.	태국 국방사무차관 방한
4. 3~14.	합참의장, 미국, 일본 방문	9. 2.	한·미 국방장관 회담(미국)
4. 18.	미국의회 전문위원/보좌관 방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미국)
4. 29~5. 10	국방차관, 캐나다, 폴란드, 일본 방문	9. 3~15.	육군참모총장, 터키, 이스라엘, 미국
5. 1~5.	일본 항공막료장 방한		방문
5. 7~12.	말레이시아 참모대교수 방한	9. 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5. 9~19.	해병대사령관, 프랑스, 영국, 이탈리	9. 12~14.	인도네시아 특전사령관 방한
	아 방문	9. 14~15.	한·독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5. 19~21.	한·러시아 장관회담(서울)	9. 20.	미국 합참부의장 방한
5. 19~22.	호주군함(2척, 533명) 방한	9. 22~24.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울)
5. 21~6. 4.	공군참모총장, 러시아, 영국, 스페	9. 30~10. 2.	영국 왕립국대원생 방한
	인, 이탈리아 방문	10. 11~14.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5. 22~28.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10. 18.	미국 국방비 분담대사 방한
5. 23~27.	독일 국방장관 방한	11. 2.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방한
5. 24.	미국 국방지도협의 회원 방한	11. 4~10.	터키 지상군사령관 방한
6. 1~7.	태국 육군대학원생 방한	11. 9~23.	아·태영관 장교 안보세미나 참가
6. 6~ 9.	파키스탄 해군참모총장 방한		(일본)
6. 9.	제2차 동아시아 안보토의 참가(미국)	11. 13~18.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학생 방한
6. 11~16.	페루 국방장관 방한	11. 29.	에티오피아 국방장관 방한
6. 15.	미국 육사생도 방한	12. 5~10.	합참 전략기획부장 말레이시아 방문

일 정	내 용
1996.	
1. 2~8.	이스라엘 군총참모차장보 방한
1. 5.	한·영국방장관회담(서울)
1. 11.	미국 상원의원(1명) 방한
1. 15.	미국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방한
1. 18~19.	ARF회 기간지원그룹회의 참가(일본)
1. 26~21.	요르단 특전사령관 방한
2. 5~8.	일본 방위청 심의관 방한
2. 7.	캐나다 국방성정책통신부차관보 방한
2. 25~29.	파라과이 육군사령관 방한
2. 26.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서울)
3. 18~26.	아·태다자안보대화참가(태국)
3. 20.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3. 26~29.	필리핀 공군사령관 방한
3. 30~4. 2.	싱가포르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1척, 49명) 방한
3. 30~4. 6.	파키스탄 해군참모대생(13명) 방한
4. 4~9.	프랑스 해군함정(1척, 90명) 방한
4. 15.	미국 국방장관 방한
4. 27~5. 3.	국제 안보협력회의 참가(영국)
5. 6.	캐나다외무부 아·태국장 방한
5. 10.	미국 공군참모총장 방한
5. 13.	한·일 국방장관회담(일본)
5. 17.	한·태국 국방장관회담(태국)
5. 19.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사우디)
5. 26~28.	사우디 전걸프전 통합사령관 방한
5. 27.	육군참모총장,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문
5. 30.	한·파키스탄 국방장관회담
6. 3~8.	폴란드 바르샤바군관구사령관 방한
6. 4.	일본 신진당의원단 방한
6. 7.	제3차 동아시아 안보토의 참가(미국)
6. 9~14.	제5차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 참가(미국)
6. 10~16.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6. 11~22.	해군 참모총장, 일본, 스페인, 프랑스, 영국 방문
6. 12.	네덜란드 통신장관 방한
6. 13~17.	프랑스 국방참모대생 방한
6. 21~24.	특전사령관, 페루 방문
6. 21~25.	국방차관, 싱가포르 방문
6. 21~27.	제1차관보, 러시아, 중국방문
6. 29~7. 4.	태국 해사 순항함정(2척, 400명) 방한
7. 2~14.	합참의장, 루마니아, 스위스, 스웨덴, 일본 방문
7. 8.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7. 8.	한·호주 정치군사합동회의(서울)
7. 8~10.	한·말레이시아 군수공동위원회(서울)
7. 1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7. 26~8. 2	러시아 해군창설 300주년 기념행사 참가(함정 2척, 425명)
8. 6.	세계 정치학회 군사회연구위원회 회원 방한
8. 7.	미국 제7함대사령관 방한
	미국 국방부 정보본부장 방한

資料 6 北韓의 停戰體制 無實化 企圖 經過日誌

연 월 일	내 용
1991. 3. 25.	UNC,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소장 황원탁) 및 신임장 대북 전달, 북측은 인수후 반려/접수 거부
3. 27.	북한 군정위 본회의 및 수석대표 전문 접수거부 주장(북한방송)
4. 13.	북한경비정 1척, 백령도 근해 북방한계선 약 2.2마일 침범
4. 30.	북한군 1명, 판문점내 군사분계선 약 10m 월경 침범/복귀
5. 9.	북한, 군사인원 윤환일보(외국군 증감)교환 중단 통보 * 군사인원 윤환일보 : 쌍방 공동일직장교가 접촉 교환
5. 22~23.	북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무용론 주장 및 중감위 4개국에 공식활동 중단 통보 • 중감위 공식행사에 북측요원 불참 • 중감위 요원들의 북한 행사에 초청불허 및 여행비용 지원 중단
5. 31.	북한, 언어장교회의(중감위 회의록/군정위 실무토의)중단 통보
6. 12.	북한, 매일 개최해 오던 군정위 공동일직장교회의를 필요시만 개최하겠다고 통보
8. 21.	북한군, 동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기관총 2발 사격
11. 28.	북한군, 중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40여 발 사격
1992. 2. 21.	캐나다 등 참전 7개국에 UNC 파견병력 철수요구(북한외교부장 서한)
3. 20.	북한군, 중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40여 발 사격
5. 19.	북한군, 5명(AK소총휴대) 대성동지역 군사분계선 약 5m 월경침범
5. 22.	북한 무장병력 3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1㎞ 월경침범/전원사살
5. 29.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 거부/불참(북한군 침투사건관련 UNC측이 소집)
7. 2.	북한군, 동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1발 사격
8. 24.	북측, 군정위 수석대표 평양으로 소환

연 월 일	내 용
1993. 4. 3.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강제철수
5. 2.	북한군, 중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기관총 2발 사격
6. 16.	북한군, 중부전선에서 아측지역으로 기관총 2발 사격
6. 21.	북한경비정 1척, 백령도 동북방 약 2.5마일 월선 침범
11. 22.	군정위 대체기구로 3자 협정기구 설치제의(군정위 북한대표)
1994. 3. 8.	군정위 북한군 대표 3명중 2명 소환/철수
4. 28.	군정위 북한대표단 철수/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제의
4. 29.	무장병력(AK 소총휴대) 40여 명 판문점내 투입, 무력시위
5. 24.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설치(대표 : 이찬복, 중장/전 군정위대표)
6. 6.	제510차 군정위 비서장회의 거부/불참('94. 6. 3. UNC측이 소집)
9. 1.	중국, 군정위대표단 본국으로 소환 발표
9. 24.	주유엔 북한대사(박길연), UN 안보리의장에게 서한발송 • 정전협정체제는 미국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었음. • 미·북간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 주장
12. 15.	중국, 군정위대표단 본국 소환
1995. 2. 20.	무장병력 40여 명 판문점내 투입, 무력시위
2. 24.	북한 외교부, 미·북 평화보장체계 불수용시 "상응조치"경고 성명 발표
2. 28.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강제철수
3. 2.	미·북 장군급 회담 제의
4. 16.	밀입북 안호상외 1명(대종교 총전교) 판문점 경유 불법 귀환
4. 19.	북한군 1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200m 월경 침범
4. 23.	북한군 5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150m 월경 침범

연 월 일	내　　용
1995. 5. 3.	중감위 판문점 사무실 및 휴게실 폐쇄, 군정위, 중감위요원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 출입금지 통보
5. 9.	북한군 1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40m 월경침범
6. 22.	정전협정 파기의견 구두통보(책임연락관 유영철 상좌)
6. 26.	주러시아 북한대사, 러·북 우호협회에서 "미·북 평화협정체결" 주장
6. 27.	주제네바 북한대사, UN 군축회의 연설에서 "정전협정 무용론" 주장
6. 29.	북한외교부, 비망록 발표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
7. 21.	북한 외교부장, UN사무총장에게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요구" 서한 발송
7. 31.	밀입북 박용길(문익환 목사 미망인) 판문점 경유 불법 귀환
10. 3.	밀입북 이혜정, 정민주(한총련 소속)판문점 경유 불법 귀환
10. 17.	북한　무장공비 3명, 임진강(자유교) 서남방 약 1.5㎞ 아지역 침투
1996. 2. 22.	북한 외교부, 북·미 잠정협정 체결 제의
3. 9.	북한 판문점대표부, "정전체제 파기" 위협 비망록 발표
4. 4.	북한,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임무 포기선언(판문점대표부 대변인)
4. 5~7.	무장병력 1~2개 중대 규모 판문점내 투입, 무력시위
4. 11.	북한군 3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300m 월경침범
4. 19.	북한, 어뢰정 2척 연평도 서북방 북방한계선 약 1.1마일 월선 침범
5. 17.	북한군 7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약 20m 월선 침범
5. 23.	북한경비정 5척, 백령도 서북방 북방한계선 약 4마일 월선 침범
6. 14.	북한 경비정 3척 연평도 서남방 북방 한계선 약 4마일 월선 침범
7. 25.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북미 잠정협정체결 이행 촉구" 성명 발표

資料 7 유엔 平和維持活動(PKO) 現況

명 칭	설치일	지 역	인 원	분쟁성격	주 요 임 무
유엔예루살렘 정전감시단 (UNTSO)	'48. 6.	중 동	173명	국제분쟁	제1차 중동전쟁 이후 정전감시 현재 UNDOF, UNIFIL 지원
유엔인도-파키스탄 감 시 단 (UNMOGIP)	'49. 1.	서 남 아 시 아	44명	국제분쟁	자무 및 캐시미르지역 정전감시
유엔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FICYP)	'64. 3.	유 럽	1,200명	국제분쟁/ 내전상황	정전감시 및 완충지대 형성
유엔골란고원 정전감시군 (UNDOF)	'74. 6.	중 동	1,061명	국제분쟁/ 내전상황	이스라엘-시리아간 정전감시
유엔레바논 임 시 군 (UNIFIL)	'78. 3.	중 동	4,520명	국제분쟁/ 내전상황	남부레바논 이스라엘군 철수 확인, 레바논 정부의 통치권 회복 지원
유엔이라크-쿠웨이트 국경감시단 (UNIKOM)	'91. 4.	중 동	군 인 1,174명	국제분쟁	정전위반 및 평화위협 행위 보고, 이라크-쿠웨이트 비무장지대 감시
유엔서부사하라 선거지원단 (MINURSO)	'91. 4.	아프리카	331명	국제분쟁	정전감시 및 서부사하라의 장래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그 루 지 야 정전감시단 (UNOMIG)	'93. 8.	CIS	133명	국제분쟁	정전감시

명 칭	설치일	지 역	인 원	분쟁성격	주 요 임 무
라이베리아 정전감시단 (UNOMIL)	'93. 9.	아프리카	15명	내전상황	정전감시
아이티평화유지군 (UNMIH)	'93. 9.	중·남미	2,213명	국제분쟁	아이티 민주화 계획안 이행감시
타자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T)	'94. 12.	CIS	44명	국제분쟁/ 내전상황	정전감시
유엔앙골라 평화유지군 (UNAVEM Ⅲ)	'95. 2.	아프리카	7,285명	내전상황	LUSAKA 평화협정 이행 감시
유엔마케도니아 평화유지군 (UNPREDEF)	'95. 3.	유 럽	1,163명	국제분쟁	정전감시 및 평화협정 이행감시
유엔크로아티아 평화유지군 (UNCRO)	'95. 3.	유 럽	3,752명	국제분쟁	정전감시 및 평화협정 이행감시
동슬라보니아 평화유지군 (MNTAES)	'96. 1.	유 럽	5,349명	국제분쟁	평화협정 이행지원
프레블라카반도 정전감시단 (UNMOP)	'96. 3.	유 럽	27명	국제분쟁	정점감시 및 평화협정 이행지원

資料 8 일일 프레스 브리핑 現況

1. 개 요

국방부는 1995년 5월부터 주요국방정책 추진사항과 한반도 주변안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알리기 위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일일 프레스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본 자료는 시행 1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2. 월별실적('95. 5. 9~'96. 5. 8)

구분	계	1995년								199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적	718	48	74	62	57	62	65	64	49	52	58	61	53	13

3. 주요 브리핑 내용

월	주요 브리핑 내용	
'95. 5.	○ 방위비 분담금 협상 ○ 국산잠수함 진수식 ○ 부산항 화물체증 해소 위해 군시설 사용 ○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 경협차관 방산물자 상환협상	○ 공군 민관군 합동구조훈련 ○ 공익근무요원 국방분야 활용계획 ○ 차기 AM 무전기 국내 독자개발 ○ 전군/합참 주요지휘관 회의 ○ 육군 하사관 진급제도 개선
'95. 6.	○ 군비행장 민항기 증편 운항 ○ 육군 CBT 교육체계구축 중기발전 ○ 군사지표 좌표 체계 전환 ○ 종합 군수지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 한·미 안보협력위원회 회의결과	○ 민북지역 민간인 출입규제 완화 ○ 세계화를 지향한 국방교육 개혁 ○ 경협차관 상환용 러 방산물자 협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처리 개선 ○ '95안보정책 개발연습

월	주요 브리핑 내용	
'95. 7.	○ 21세기 지향한 한국의 국방(책)	○ 육군발전 목표 방향정립
	○ 제1차 한·말련 방산공동위	○ 북한정세
	○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완화	○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
	○ 국방정보화 추진방향	○ 장기 무기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
	○ 군 헬기추락 사고 조사결과	○ 북한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저의
'95. 8.	○ 공군전투기 도심상공 비행	○ 조달본부 입찰적격 심사제 도입
	○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 '95전반기 국방신고센터 운영 결과
	○ 군부대 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	○ 국방부 군주요 지휘관 간담회
	○ 한·미간 군수관련 협정 체결	○ 육군장병 인성교육 시행
	○ 재난사고 군지원 현황	○ 군인복지기금 제정
'95. 9.	○ 추석연휴대비 특별지원 대책	○ 연합방위 증강사업 훈령개정
	○ 한독 국방정책 실무회의	○ 군인사법 개정
	○ 해군창설 50주년 해상훈련	○ 육사교수 평가제
	○ '96국방예산(안)	○ '96방위력 개선 예산(안)
	○ 북한정세	○ '95~'96 국방백서
'95. 10.	○ 앙골라 PKO공병대대 파견	○ 제2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 독수리 '95연습	○ 임진강 수중침투대간작전 결과
	○ '95화랑 연습	○ '95후반기 충무훈련
	○ 제27차 SCM, 제17차 MCM	○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관리 규정
	○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 부여 무장간첩수색작전 상황
'95. 11.	○ 인도·파키스탄 PKO 부단장 파견	○ 육군 헬기 전천후 운항장치 개발
	○ 국가/정보통신 발전계획	○ 해군 잠수함 기지 건설
	○ 무기체계획득관리 규정 개정	○ 전문연구위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 공항에 병무관련 신고사무소 설치	○ '95통합방위 중앙회의
	○ 한·불 군수·방산 공동위 결과	○ 공군 서울 국제에어쇼 보고회

월	주요 브리핑 내용	
'95. 12.	○ 전군 동계작전 태세 돌입 ○ 합참 '95수도권 합동방공훈련 ○ 한·미 연합 즉각대응태세 유지 ○ 「율곡」,「전력정비」 용어변경 ○ 주요 지휘관 회의 계획/결과	○ '95연말 연시대비 특별지원 대책 ○ 장병정신 교육 혁신책 시달 ○ '96년도 국방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 '97~'01국방중기계획 ○ 장관 신년사
'96. 1.	○ '95국방부 역사 바로 세우기 ○ '96 국방정책 ○ 육군 지휘통솔세미나 개설 ○ 방위력 개선사업 개선 ○ 해상초계기 도입완료	○ 군사비밀분류 전향적 개선 ○ 러시아 항모도입 처리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개정 ○ 민북지역 정착촌 추가조성 검토 ○ 공·지·해 합동 대상륙 훈련
'96. 2.	○ '96 획득 개발분야 발전내용 ○ 군시설 공사 부실방지 설계 심의 ○ '97 사관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 군 행정용어 순화편람 발전 ○ 합참 해상 방어훈련	○ 군납중소 기업지원 방안 ○ 전사(상)자 공로 선양사업 ○ 육군 병/하사관 장교 임용제도 ○ 중장기 국방발전 방향연구 ○ 군시설 안전점검 결과/대책
'96. 3.	○ 군 신뢰증진 종합 추진계획 ○ 제2훈련소 군사특기 분류개선 ○ 상근 예비역 제도개선 ○ 병무행정 서비스 확대	○ 방위력 개선사업('96년 1~2월) ○ 호국 '96훈련 발표 ○ 병역법 개선안 ○ 하사관 복제 개정 추진
'96. 4.	○ 북한 DMZ 규정준수 거부담화 관련 ○ 해군 '96 환태평양 훈련참가 ○ 호국 '96/ROSI 훈련평가회의 ○ 방위력 개선사업('96년 3월)	○ 북한정전협정 위반사례 발표 ○ 한·미 국방장관 회담 ○ 고성군 산불사고 조사결과 ○ 한·미 군사력 평가회의
'96. 5. 1 ~5. 8.	○ 장관지휘 서신 ○ 해군 잠수함(정운함) 진수식	○ 육군 소부대 전투절차 향상 방안 시범 ○ 공익 근무요원 순직자 국가보상

資料 9

各種 法令整備 現況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공포	
		호 수	일 자
사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육군·해군 및 공군에 두고 있는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남자에 한정하여 왔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그 제한을 철폐하여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되, 사관학교별 교육시설 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육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사관생도를 모집하도록 함.	법 률 제5058호	'95. 12. 29.
국방대학원 설치법 (부분개정)	국방대학원의 연구 및 교수업무의 활성화와 원활한 인사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직하던 국방대학원의 부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 률 제5059호	'95. 12. 29.
군인사법 (부분개정)	○ 전문인력의 적절한 활용 등 인사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를 당해 전문분야의 상위 직위에 보직시킬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법 률 제5060호	'95. 12. 29.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공포	
		호 수	일 자
군 인 사 법 (부분개정)	○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현역정년에 의한 전역을 3년간 보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관리정보요원을 전산요원으로 조정·확대하는 등 전역보류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3년으로 연장함.	법 률 제5060호	'95. 12. 29.
군 무 원 인 사 법 (부분개정)	○ 1급 군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 률 제5061호	'95. 12. 29.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공포	
		호 수	일 자
군무원인사법 (부분개정)	○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징계처분이 위법·부당·과중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3년으로 연장함.	법 률 제5061호	'95. 12. 29.
군인복지기금법 (제 정)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은 군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과 기금운용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 군인복지기금은 군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확충에 필요한 사업과 군인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등 군인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등에 사용하도록 함.	법 률 제5062호	'95. 12. 29.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공포	
		호 수	일 자
군인복지기금법 (제 정)	○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함.	법 률 제5062호	'95. 12. 29.
군 인 연 금 법 (부분개정)	○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등은 제외하도록 함. ○ 재임용된 군인이 종전의 복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통산신청기한을 군인으로 임용된 후 2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함. ○ 부부군인 등 가족 내에 복수의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사망시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 률 제5063호	'95. 12. 29.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공포	
		호 수	일 자
군 인 연 금 법 (부분개정)	○ 연금수급자의 취업시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현재는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으로 하던 것을 모든 정부출자기관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무상대부기관 등으로 확대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함. ○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 률 제5063호	'95. 1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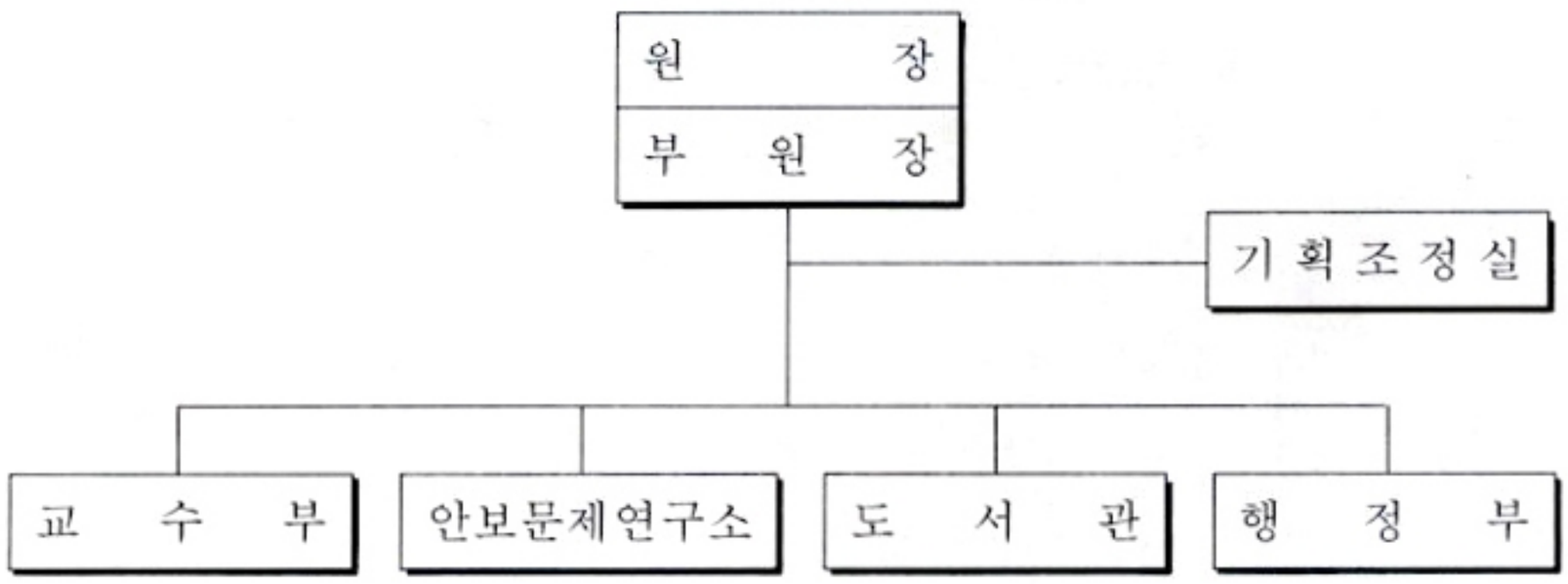
資料 10 國防大學院 紹介

1. 임 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분석, 연구·발전시키고, 각군·정부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자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2. 편성/기능

편성



기능

○ 교 수 부
- 정치·외교·사회분야에 관한 교육 및 연구발전(제1학처)
- 경제·관리·행정분야에 관한 교육 및 연구발전(제2학처)
- 군사분야에 관한 교육 및 연구발전(제3학처)
- 국방과학분야에 관한 교육 및 연구발전(제4학처)

○ 안보문제연구소
-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회의 개최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정리, 연구기관과의 교류

※ 5개 연구실 편성 : 국제문제, 군사문제, 북한문제, 대내문제, 국방관리·과학문제 연구실

○ 기획조정실 :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 도 서 관 :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 행 정 부 : 인사, 행정, 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집행, 교재지원

3. 교육과정

구 분	안 보 과 정	석 사 과 정	특 별 과 정	
			경영관리과정	진급장군과정
기 간	1년 (43주)	2년	12주	2주
대 상	• 일반 : 서기관급 이상 • 군인 : 대령급 이상	• 일반 : 사무관급 이상 • 군인 : 중령급 이상	전 년 도 전 역 장 군	해 당 연 도 진 급 장 군
인 원 (민간인)	200명 내외 (24%)	150명 내외 (10%)	60명 내외	90명 내외
교 육 중 점	• 정책수립 및 집행 능력 향상 • 안보정책입안자로서 능력부여	• 전공분야 이론 및 실무적응 능력부여	• 사회적응 능력 제고 • 사회지도자로서 사명감 부여	• 장군덕목 교양 • 국가안보 환경 및 국가/국방 정책 이해
교 육 특 징	○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국내외 제분야 연구 ○ 군사, 비군사 요소간 상관성 및 통합조정에 관한 연구 ○ 국가안보정책 도출 위한 종합연습			
강 사 선 정	○ 이론강의－저명학자(교수진 : 70여 명) ○ 정책강의－장관, 대사　　○ 실무강의－정부부처 국·과장			
교 육 방 법	○ 강　　의　　○ 패널 토의　　○ 분임연구 ○ 사례연구　　○ 현지시찰　　○ 발　　표 ○ 연구보고서　　○ 논문작성 및 발표　　○ 지도강독			

4. 1996학년도 안보과정 교육

교과 번호	교 과 명	기간	주요 교과과목(선택과목 제외)
I	안전보장기초	3 주	정부조직/기능, 국가안전보장의 기본개념, 국가안보와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군사·과학기술·정보·민군관계, 전쟁과 평화의 이해, 경제력·군사력의 요소와 분석 등
II	국 제 정 세	5 주	주변국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 구주/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대양주 정세, 주변국 외교정책, 국제경제질서/협력, 세계의 자원, 선진국 과학기술정책, 국제관계와 국제법 등
III	북 한 정 세	5주	북한의 통일정책·정치·행정·외교·사회·체제, 북한의 군사정책·군사전략·과학기술·군수산업, 북한의 최근정세·전망 등
IV	국내정세 I	7 주	한국의 정치발전, 내무행정, 외교·통일정책, 사회·문화발전, 노동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체육정책, 환경정책, 과학기술정책, 재정금융정책, 농림수산정책, 건설교통정책 등
V	국내정세 II	8 주	한국의 국방기획체계·중장기 국방정책방향·군사전략·국방정책, 한미연합방위, 전비태세, 저강도분쟁, 해양분쟁, 한반도 군비통제·핵문제, 군사조약, 국방경제, 방위산업, 국방인력정책 등
VI	정 보 자 원	3 주	정보통신정책, 국방정보화정책, 정보자원, 정보사회와 기업전략, 정보기술정책과 관리, 정보화와 미래전, 정보통신망 등
VII	국 내 외 교 육 시 찰	3 주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한 견문, 각 교과 연구결과 확인)
VIII	안전보장종합	4 주	국가상황판단, 수도권행정과 안보, 국가동원계획, 한국의 비상대비, 민방위계획, 전시계엄계획, 응전자유화계획, 전시법령, 위기관리, 국가안보게임 소개 등
IX	논 문	1 주	(교육기간중 국가안보차원의 정책·전략적 과제선정 및 작성후 1주간에 걸쳐 발표)

資料 11　韓國 國防研究院(KIDA) 紹介

1. 임무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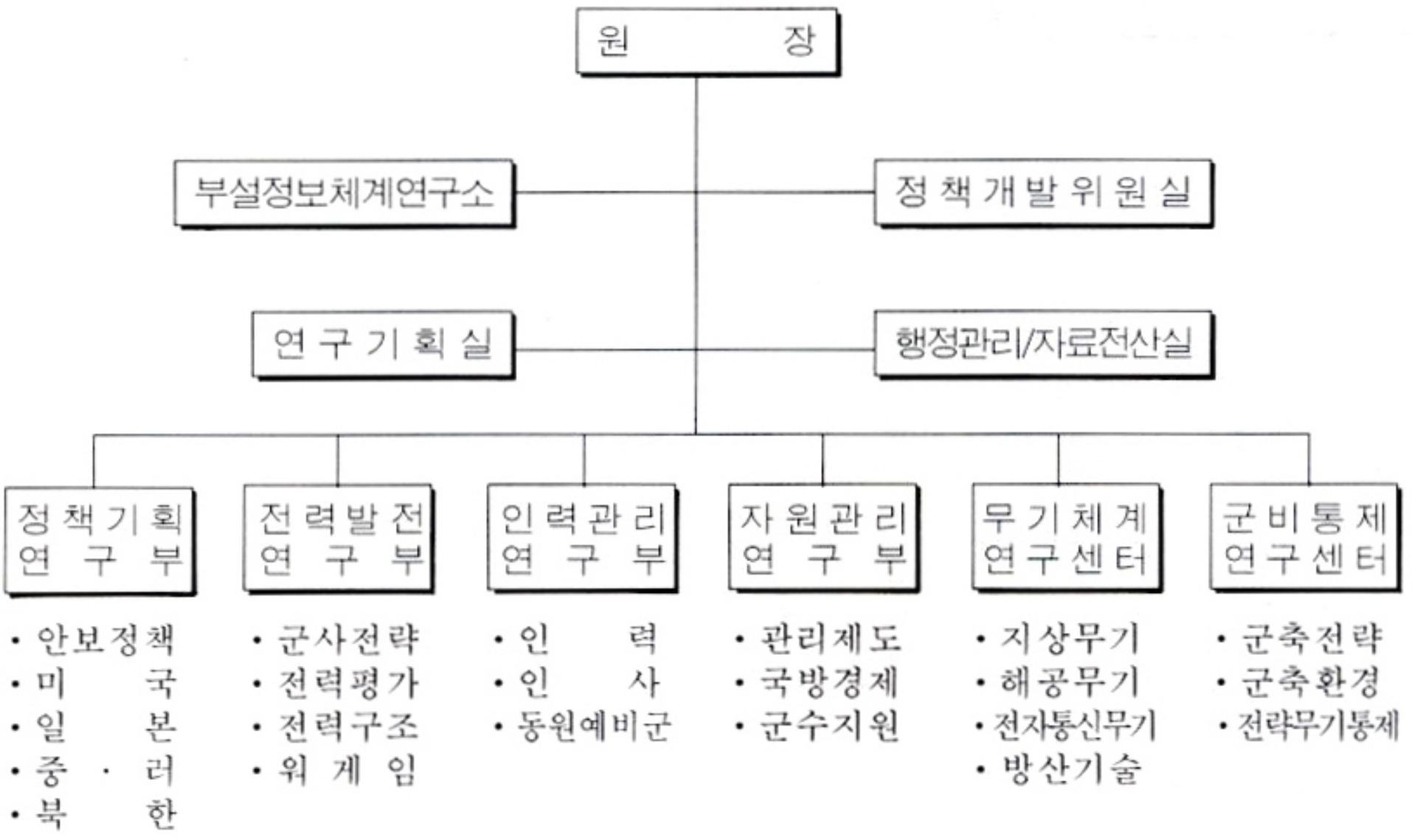
○ 임　무

국방에 관한 정책의 대안개발과 자원관리 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분석기법을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에 이바지한다.

○ 기　능

- 전방위 안보개념에 입각한 대외 군사협력 및 군비통제에 대한 정책개발
- 군사력의 평가·군사전략·군사협력 등 군사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과 연구에 관련되는 분석방법 및 모형의 개발
- 국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조사·연구/자문과 관리기법 개발
- 국방에 관련된 조직·기능·인력에 관한 조사·연구, 무기체계 소요제기·획득·선정에 관한 연구
- 국내외 학술연구, 안보관련 기관과의 국방학술진흥사업 추진

2.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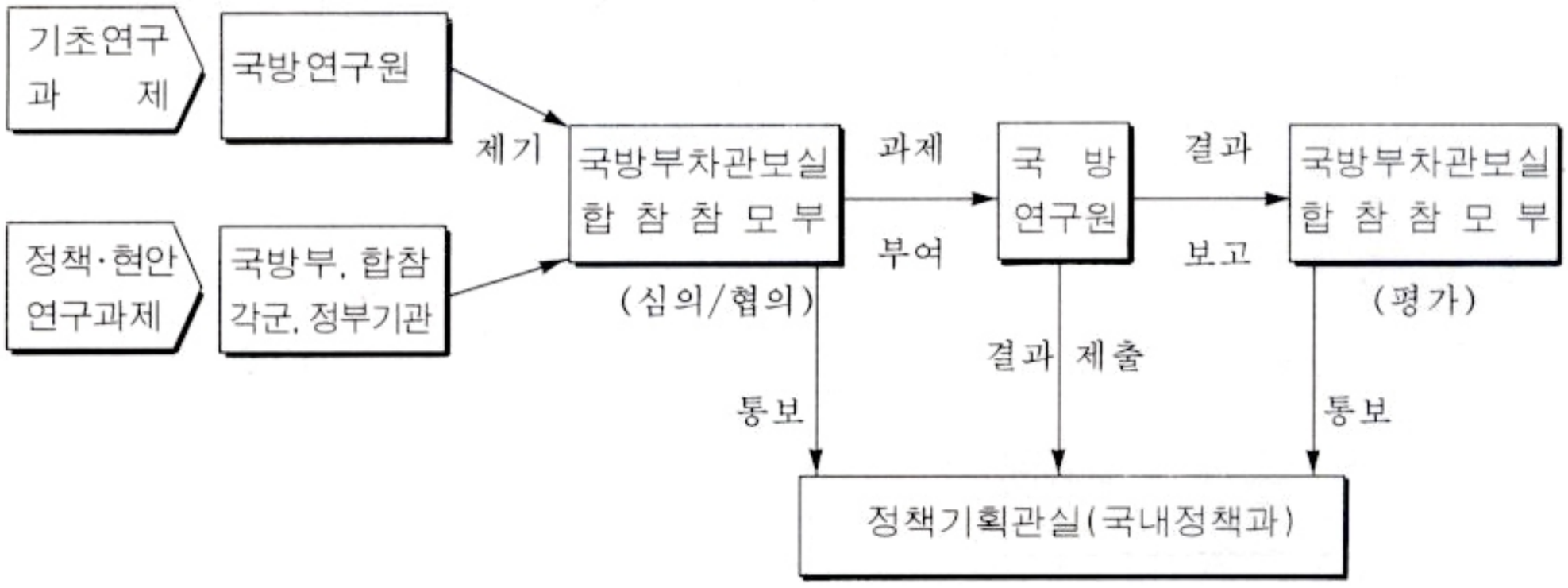


3. 연구활동

○ 연구과제 구분

과제구분	성 격	부 여 시 기
기초연구과제	연구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연구를 위한 모델개발 등 과제	연 1회 연구과제제기, 소관부서와 협의후 연구(차관보 단위)
정책연구과제	국방정책개발 및 발전에 대한 연구과제	반기 1회, 소관부서 심의후 부여
현안연구과제	당면 국방정책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시 소관부서 심의후 부여

○ 과제부여 절차



※ 연도별 과제연구 실적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기 초	42	37	64	47	79	77	139
	정책·현안	43	39	52	80	37	35	74
	합 계	85	76	116	127	116	112	213

4. 국방학술사업

○ 학술활동사업

• 한·미 안보워크샵	• 무기체계효과분석세미나
• 한·미 공동워크샵	• 국제국방학술회의
• 해외인사 초빙강연회	• 국방학술토론회
• 방위비 연구회	• 학술연구용역사업

○ 해외 학술활동 참석/협력체제 구축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간 연구협력 및 교류증진 → 안보/연구협력체제 구축

• 국 외 : 전문가 초청사업, 학술회의 참석, 연구기관 방문 자료수집

○ 학술편찬

출 판 물	주간국방	국방논집	영문저널	비 고
발 간 주 기	주 1~2회	계 간	연 2회	배 포 : 군관련기관, 학교, 공공도서관 * 영문 경우 : 해외공관
발 간 수 량	3,000부	1,600부	1,600부	

5. 국방분야의 전문자료 정보센터 운영

○ 장서 소장규모 :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120,000여 권), 정기간행물 750여 종

○ 자료 획득전파 : 국내외 130여 개 연구기관과 자료 교환협정 체결/자동수입 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Data Base) → 정부, 연구/교육기관

※ 국방 및 군사관계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전파, 활용으로 국방발전에 기여

6. 소재지/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 전화번호 : 9611-733/359(연구기획실), FAX : 965-3295

資料 12 國防科學研究所(ADD) 紹介

1. 임무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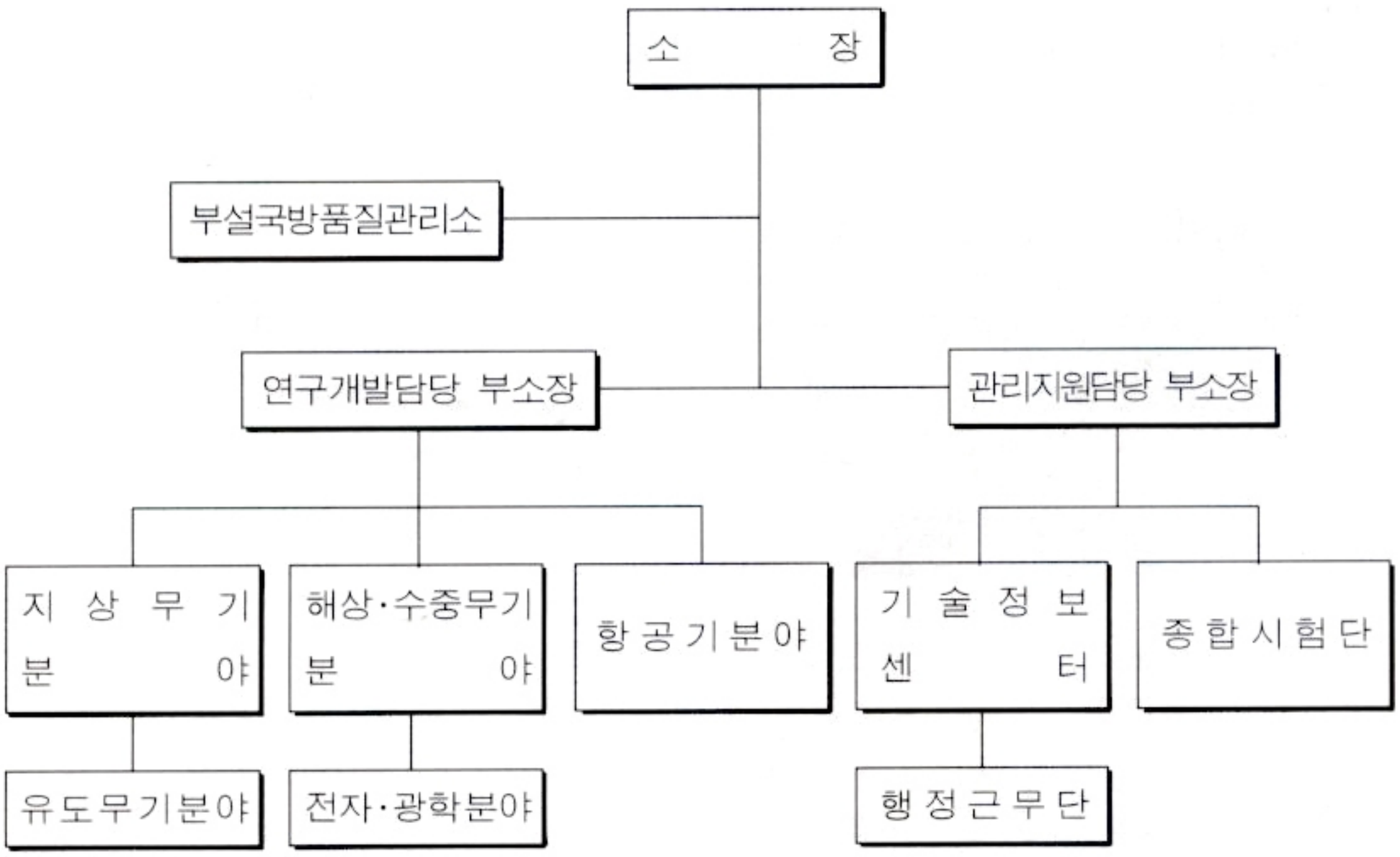
○ 임 무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

○ 기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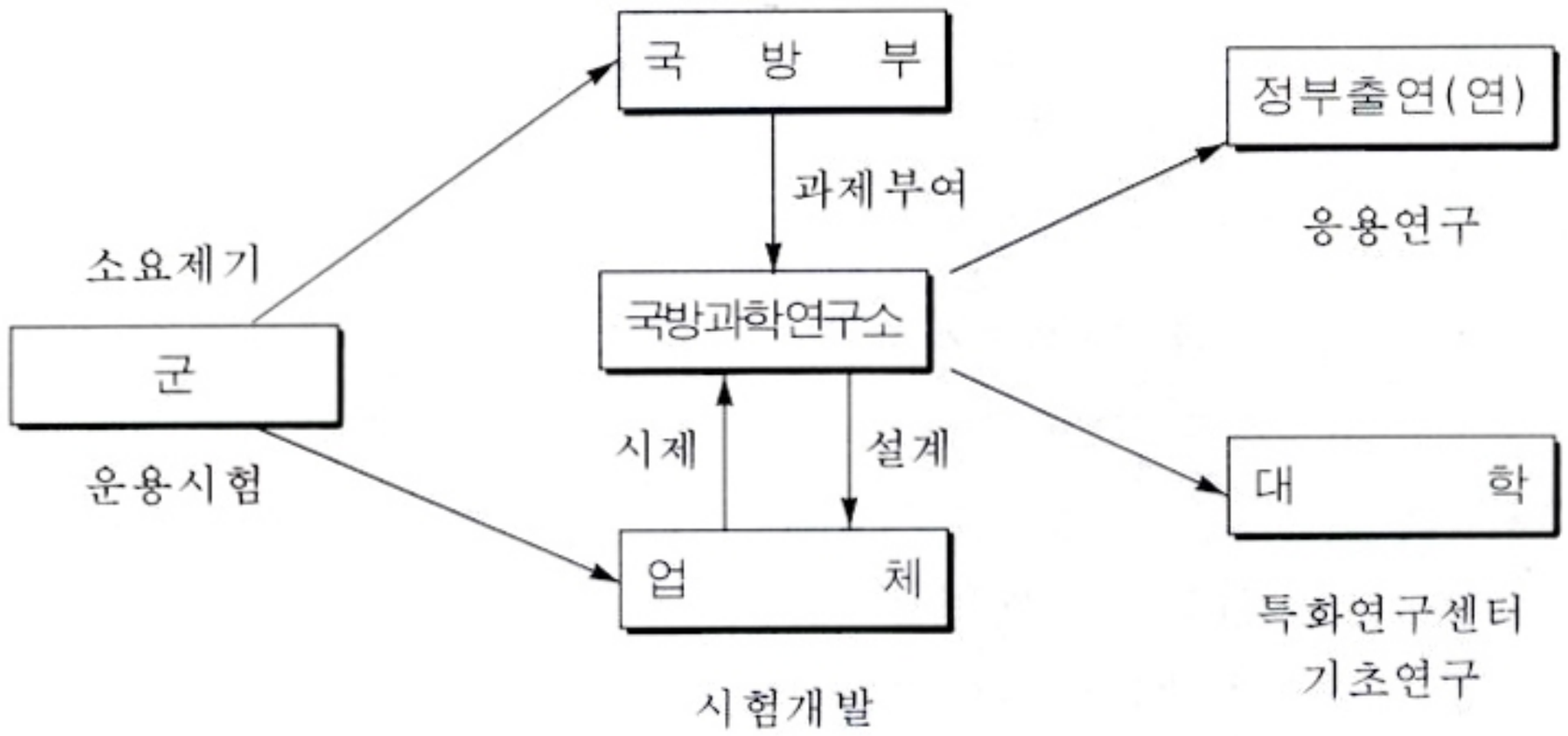
-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 무기체계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 무기체계와 관련된 제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
- 무기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부품의 연구, 개발
- 국방과학기술 정보사업
-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2. 조 직



3. 연구활동

○ 연구개발 수행체제



○ 연구개발 절차

체계개념연구	탐 색 개 발	체 계 개 발
• 개발대안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험시제 • 개발방안 확정	• 상세설계 • 체계설계 • 시험평가 • 규 격 화

무기체계 → 생산

기 초 연 구	응 용 연 구	시 험 개 발
• 이론·학술 연구	• 실용화연구 • 연구과제	• 시험시제 • 시험평가 • 규 격 화

핵심기술부품 → 체계적용

※ 연구개발 정책변화

- 1970년대 : 기본병기 국산화(기술자료 도입, 모방개발)
- 1980년대 : 고도정밀무기 개발 기반조성(핵심기술 도입, 성능개량, 독자 무기체계 개발)
- 1990년대 : 고도정밀무기 개발(핵심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확대, 고도정밀 무기체계 독자개발)

4. 시험평가

○ 전문시험장 보유(유도무기, 화포·탄약, 해상·수송, 기동장비 시험장)

○ 무기체계 획득관련 시험평가 능력보유(기술, 운용, 함정성능, 수락시험 등)

○ 국가공인 시험장 추진을 통한 민수시험 활용 유도

5. 국방과학기술정보

○ 기술정보 획득전파 : 해외주재원, 국내외 Data Service망, 연구개발 → 국방과학기술(Data Base) → 정부기관, 군·방산업체, 교육기관

○ 기술정보 소장규모 : 기술도면(1,400여 종 890,000매), 규격(23Set 184,000종), 기술보고서(169,000권)

○ 기술정보 분석발간 : 국방기술정보(월간), 국방기술연구(계간), 국방과학기술 조사서(3년)

6. 기술협력

○ 산·학·연 연구협력

-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 훈령 제529호)
- 민·군 겸용 기술 개발추진(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훈령 제521호)
- 국방과학특화연구센터 설립운영 : 자동제어분야(서울대), 전자광학분야(한국과학기술원), 전자파분야(포항공대)

○ 국제기술협력

- 자료 및 과학기술자 교환협정(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 공동연구(미국 등)

7. 소재지/연락처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우편번호 305-600)

○ 전화번호 : (042) 821-3041(정책기획실), FAX : (042) 823-3400

資料 13　年度別 國防白書 資料目錄

발행연도	내　용	수 록 면
1989	각종 법령 정비현황	325～332
	제2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332～335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	335～338
	북한의 주요 도발실태(1958～1989)	338～345
	근무환경 개선	345～350
	한국전쟁기념사업	350～351
	전사편찬위원회의 활동	352～354
	예비역 장성단 자문회의	355
	대민지원활동	355～363
1990	각종 법령 정비현황	303～306
	복지증진활동	306～309
	대민지원활동	309～320
	여군장교 인사제도 개선	320～323
	국군체육부대의 활동	323～327
	육군의 주요활동	327～334
	해군의 주요활동	334～338
	공군의 주요활동	337～338
1991～1992	각종 법령 정비현황	333～334
	민원요인 해소실적	335～336
	육군의 주요활동	336～340
	해군의 주요활동	340～343
	공군의 주요활동	343～346
	세계 각국의 군사지표현황	349

발행연도	내 용	수 록 면
1991～1992	지역별 군사력 현황	350～351
	주요국 핵전력 현황	352
	주요국 핵미사일 제원	353～354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355
	유럽 재래전력(CFE) 감축협정	356
	걸프전 다국적군 참가 및 지원현황	357
	정전협정	358～386
	한·미 상호방위조약	387～388
	미·일 안보조약	389～391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392～393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394～396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397～428
	북한의 대남도발실태	429～436
1992～1993	세계 각국의 군사지표현황	187
	유럽 재래전력(CFE) 감축협정	188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연표	189～190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91～194
	한·소 수교 공동성명	19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7～199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0～202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3～205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6～210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11～21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13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14～215
	북한의 핵개발 연표	216～222

발행연도	내 용	수 록 면
1994～1995	세계 각국의 군사지표현황	255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Ⅰ/Ⅱ)	256
	유럽 재래식 무기감축조약(CFE)	257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258
	화학무기 협약(CWC)	259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260
	제2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공동성명서 전문	261～264
	한·미 정부간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WHNS)	265～269
	한·러 기본관계 조약	271～275
	대한민국 국방부와 러시아 연방 국방부간의 군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276～277
	각종 법령정비	278～281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282～284
	전쟁기념관 건립	285～289
	국방군사연구소의 활동	290～293
	사관생도 교육소개	294～299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	300～303
	북한 핵관련 주요경과 일지	304～307
	발간 연도별 국방백서 자료목록	308～309
1995～1996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51～254
	제네바 미·북 핵 기본합의문 전문	255～257
	콸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 합의문 전문	258～259
	대한민국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성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	260～262
	대한민국 국방부와 폴란드 국방부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	263～264

발행연도	내　　용	수 록 면
1995～1996	대한민국 국방부와 러시아 연방 국방부간 군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265～266
	북한 핵관련 주요경과 일지	267～273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경과 일지	274～275
	대북 쌀 지원관련 주요경과 일지	276～277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278～279
	각종 법령 정비현황	280～284
	연도별 국방백서 자료목록	285～287

<비 매 품>

1996년 9월 25일 인쇄
1996년 10월 1일 발행

국 방 백 서

편 찬 : 정책기획관실(국내정책과)
발 행 :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인 쇄 :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정간위 심의필 : 96-11-1-8